
제3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2022.10.20.~11.24.)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2022.12.

발·간·사



이연희 상근부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이연희 상근부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당과 함께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시도당·지역위원회 정책담당자, 지역당원, 지역의원, 당직자 등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교육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당의 미래세대 발굴과 투자라는 차원에서 20~30대 청년당원을 당의 자원으로 육성하고 청년당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5월 제1기, 11월 제2기에 이어서 2022년 10월 제3기 아카데미를 기획하였습니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는 다양한 현안과 국가·지방 등 공공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청년 정책 전문가’ 육성과 최고의 ‘인재 등용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기 아카데미 71명의 수료생 가운데 무려 27명이 현재 지역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3기 아카데미 수강생은 전국 17개 시·도당별로 만 45세 이하 청년당원 3명씩 선발·추천 절차를 거쳐 총 5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아카데미 과정은 화상강의, 현장 워크숍에서의 정책연구과제 발표(PT)와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철저한 출결관리, 강의별 설문조사 등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51명의 수강생 중 최종 35명(지역당원 21명, 지역의원 11명, 시·도당 당직자 3명)이 수료하여 ‘정책 전문가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발·간·사

.....

제3기 아카데미 교과 과정은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대주제 아래 ‘국가 현안·비전 의제’, ‘지역 현안·비전 의제’, ‘정책 실무과정’ 등 총 12강으로 구성하여 중앙·지역의제와 함께 정책 실무과정을 강화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국제질서의 변화’, ‘복합위기(퍼펙트스톰) 원인과 과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지역 혁신정책 사례와 지역발전 과제’, ‘정책제안과 예산 및 사업’ 등 강의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구도심, 지역 불균형 등 거대담론부터 영유아, 돌봄, 고독사, 유기동물, 놀이터, 주차난, 도서관, 연애, 다문화 등 우리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의제까지 다양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 그리고 정책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에 대한 시각을 넓혔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비전 의제’를 다루는 현장 워크숍은 2일 동안 각 수강생의 지역 비전과 정책 관련 연구과제 발표, 지도교수 코멘트와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식의 현장 워크숍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장 워크숍은 각 수강생이 준비한 정책연구과제를 7분씩 발표하고 네 분 지도교수의 각각 1분 코멘트와 함께 수강생들의 표현력, 논리력, 설득력 등을 평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현장 워크숍 지도교수의 코멘트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로 제출했고, 이를 모아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들의 지역과 국가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담긴 모음집입니다.

이 모음집은 본문 1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수강생이 제출한 36개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지역별로 분류해서 실었고, 부록에는 ‘제3기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를 넣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에는 주거·교육·일자리·산업·복지·의료·도시·교통·환경, 청년·여성·노인 등 여러 분야와 돌봄, 1인가구, 고독사, 유기동물, 놀이터, 주차, 아파트, 도서관, 연애, 다문화 등 다양한 지역 문제와 비전·정책에 대한 수강생들의 폭넓고 깊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모음집에 담은 36명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당과 민주연구원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와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인증하는 명실상부한 정책 전문가입니다. 수료생 여러분들은 여러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훈련하며 한층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청년당원 수료생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박복영 경희대 교수, 진종현 공주대 교수,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장 워크숍 지도교수를 맡아주신 김홍장 전 충남 당진시장, 김수영 전 서울 양천구청장, 허성무 전 경남 창원시장, 김승수 전 전북 전주시장, 그리고 특강을 맡아주신 이상호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신 ‘수상한협동조합’,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카데미 운영과 모음집 발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과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심사 및 평가를 해주신 정책연구실 연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2.12.23.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이연희 상근부원장



CONTENTS

.....

■ 발간사 iii

이연희 상근부원장(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강원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정책 3
곽한나 지역당원

» 경기

아 연애하고 싶다 9
김경석 경기도당 총무국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주차면 제공 17
김윤환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오산!
-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를 통한 보행취약자 보호체계 구축 21
전예슬 경기 오산시의회 의원

» 경남

임산부를 다독여줄 양산 어디 없나 26
이묘배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
농촌에 활기를 아이들에게 기회를, 살기 좋은 의창구 33
정수인 지역당원

» 경북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40

김경주 지역당원

위험하진 않지만 도전적인 곳 ‘기적의 놀이터’ 47

김미애 지역당원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대학도시 경산

- 「대학도시법」시행에 맞춰 경산소재 대학 활용을 중심으로 - 55

성기수 지역당원

청소년 금융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큰 변화 63

임현규 지역당원

» 광주

아파트 난개발 방지 공약 - 단독주택 수당제도와 빈집은행 프로젝트 실시 71

강수훈 광주 광주시의회 의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의의 도시 - 광주에서 인권 찾기 78

이명노 광주 광주시의회 의원

» 대구

현수막으로 바라본 현실과 탄소중립의 실천적 전략 87

강민욱 대구 남구의회 의원

달성 산업단지 형성과 의료복지의 인과적 필연성 93

전유진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외국인 거주민의 지역활동 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방안 98

최영은 지역당원



CONTENTS

.....

친환경 공공부지 활용방안 - 대구시 신청사 부지 활용 정책제안 104

최흥린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실현 제도화 방안 111

한현희 지역당원

청년 창업지원 정책 123

홍지민 지역당원

» 대전

따뜻한 동행, 다함께 행복한 돌봄 131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노잼 도시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변화! 135

이창기 지역당원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144

전한빛 지역당원

» 부산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소셜 웨어 프로젝트” 152

이지오 지역당원

청년을 위한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 다시 활력있는 부산이 되기 위한 고찰 160

이지원 지역당원

지역불균형 서부산이 살아야 부산이 산다 168

장리혜 지역당원

» 서울

서울시 청년가구 안정적 주거복지 시행을 위한 정책제안 175

김지환 지역당원

차별 없는 우리 동네 놀이 환경 조성 - 놀이속에 자리 잡는 더불어 민주주의 182

노연수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

» 세종

앞으로 메타세종! 192

장규영 지역당원

» 울산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197

전혜경 지역당원

» 인천

경차 주차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205

김만수 지역당원

직업계 학교의 미래지향적 운영방향 210

복혜정 지역당원

» 전남

건강한 영유아를 위한 지침서 225

정진영 지역당원



CONTENTS

.....

» 전북

실습생의 권익향상을 위한 고찰 236

김승일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지방도시 인구유지 및 증대정책 241

오동근 지역당원

구도심 활성화 246

전수관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 충남

저출생 극복 - 육아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256

문은섭 충남도당 정책실장

영양 공급을 통한 의료비용 감소 및 노인고독사 예방 돌봄도시락 배달 “천안쿡” 264

양용순 지역당원

■ 부록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269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정책

곽한나 지역당원

1. 국내 유기동물 현황 및 원인분석

우리나라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인식이 변한 2013년과 2014년에 97,197마리에서 81,147마리로 감소한 전적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35,791마리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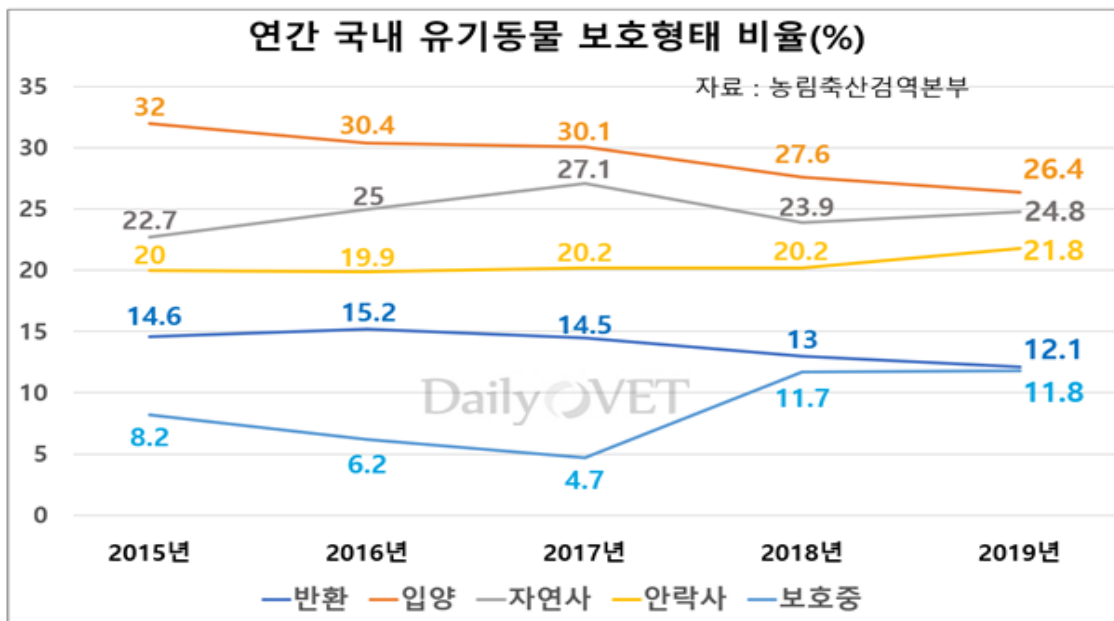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 유기동물 추이



자료 : 동물구조 119

그에 비해 유기 동물 분양률은 32%에서 매년 하락한 27.6%로 집계되고 있지만,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현존하는「동물보호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와 반려동물 내장 칩을 하지 않아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기하는 사람을 특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2〉 연간 국내 유기동물 보호형태 비율(%)



자료 : 데일리벳

유기 동물 보호 형태를 보면 유기 동물의 증가는 꾸준하지만, 주인에게 인도(반환), 새 가정에 입양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유기 동물 보호소의 보호 형태 비율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유기,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동물보호법」강화로 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유기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또한 학대 처벌 강도에는 동물이 죽을 때까지 사육 공간/먹이 제공을 안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허가/무등록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에는 무허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의 슬로건으로 유기동물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이 바뀌었고 그에 따른 법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또한 개정된「동물보호법」에서는 생산업에 관한 내용도 부실하고 그저 사육장에서 동물을 사육할 때의 먹이 제공하지 않는 학대 행위에만 집중된 것 같아 동물 단체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연합뉴스TV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동물 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유기 동물의 건수는 11,363건,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직전인 2022년 3월 동물 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유기 동물의 건수는 불과 8,705건으로 1개월 사이에 유기 동물이 30%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p>[아주 돋보기] 거리두기 끝나자 '찬밥' 신세 된 반려동물들</p> <p>홍승환 기자 입력 2022-05-30 15:18</p> <p>거리두기 때 외로움 달래려 반려동물 입양 ↑ 거리두기 해제되자 찬밥 신세 된 '반려동물' 동물단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필요"</p>	<p>2022년 05월 30일 아주경제 기사</p>
<p>‘집콕’ 외로움 달래주던 반려동물, 엔데믹에 버려진다</p> <p>5월, 전월 대비 유기동물 20.3% ↑ 유기동물 구조 요청·파양 문의 잇달아 “책임있는 입양 필요...유기 때 처벌 강화해야”</p> <p>등록 2022-06-27 오후 6:14:39 수정 2022-06-27 오후 9:53:47</p>	<p>2022년 06월 27일 이데일리 기사</p>

거리두기가 끝나기 이전인 2019년에는 유기 동물 건수가 최대치를 찍었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2021년까지는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거리두기가 끝난 2022년부터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집콕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반려동물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2020년 코로나19의 시작으로 경제는 침체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동네 마트 등 생필품 매출이 상승하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란 중에서 ‘펫샵’ 사용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자료 : 네이버

추측하기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생활이 길어지자 마침 재난지원금이 펫샵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아지를 분양받았다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생명 존중과 책임감 없이 유기를 한 사람이 많다고 추측된다.

또한, 개정된「동물보호법」에 동물생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무분별한 번식 및 판매, 불법 번식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마땅히 없기에 수요와 공급이 늘어가고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유기 동물 증가에 따른 정책

「동물보호법」제7조 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소유자는 동물을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에 대해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자세한 지시사항이 없다. 동물생산업 반려동물 허가조건에서는 사육실과 분만실, 격리실을 분리 구획,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실도 별도 설치, 각 시설에는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는 것, 사육설비는 청소와 소독이 쉽고, 재질은 청소와 건조가 용이한 재질일 것,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 관리 인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도입하였지만 이조차도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구비서류

만 갖춰지면 허가가 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이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꾸준히 생산업을 폐업하거나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브리더·동물보호시설 입양 `감소`, 펫샵에서 분양 `증가`

2017년, 2018년 한국펫사료협회 설문조사 결과 비교

등록 : 2018.11.27 14:42:21 수정 : 2018.11.27 14:44:21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자료 : 데일리벳

해당 기사를 보면 동물 보호시설 입양률은 감소하는 반면, 동물생산업 허가만 나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펫샵에서의 분양은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유기 동물 관리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현재 유기 동물보호소를 동물단체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눈여겨본 것은 앞으로 유기견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악순환을 끊어낸 것이었다.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펫샵의 분양률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제지하려면 동물생산업에서의 기준 강화 및 소, 돼지 같은 이력제를 실시하여 개체수를 파악하고, 생산, 양도, 양수, 폐사를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함께 보고하는 방법이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도 강제로 동물등록을 통해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한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 각이 들었다.

본 정책을 반려견 모임(유기견 입양자들 다수) '까뭉상사'에 자문한 결과, 그들은 이력제는 '합법적 개농장'을 허락하는 상황이라 보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생산업이기에 생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동물을 사고파는 것에 생명존중이 없이 합당하다고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이다.

까뭉상사에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펫샵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고 지자체와 정부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공공캠페인, 동물구조단체에서 보여준 강경하고 행동력 있는 모습을 원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길고양이 TNT, 유기동물 보호소 직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법안

발의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오지만, 사설보호소 역시 지자체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펫샵 운영자 역시 자영업자이기에 함부로 제지를 가했다가는 반발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고 생산과 소비를 아예 막으면 어둠의 루트는 더 알기 힘들게 변할 수도 있다.

펫샵에서 고양이 및 강아지를 분양받은 이들은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서’ 분양받았다고 한다. 한 생명을 책임지기에 검증하는 과정이 펫샵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펫샵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력제 포함, 동물생산업 기준을 수정하여 모견은 연 1회 출산으로 제한을 두며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 수정(주사기, 반려견 성기 강제삽입) 없이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하는 방법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 3,000만원 또는 징역 3년, 그리고 동물생산을 영구 금지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된다.

펫샵에서 동물을 판매할 시 판매에 따른 계약서는 유기 동물입양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작성되어야 하며, 구매자는 동물등록 및 중성화에 동의 할 시 판매가 이루어지게 조항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판매되는 동물은 중성화가 가능한 7~8개월 이상으로 제한한다)

3. 해당 정책으로 인한 효과

생산업을 억제하는 일은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구매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지자체와 정부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 권고, 보호소를 시민들에게 다가기 좋은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쓴다면 유기 동물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리라 예측된다.

또한 동물등록 및 중성화를 구매자가 동의함으로써 개체수가 조절이 될 거고, 유기 동물이 줄게 되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생기리라 예측되는 바이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아 연애하고 싶다

김경석 경기도당 총무국장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원합니다.

○ The story begins ...

질문, 사랑 어떻게 찾나요?

60대 싱글이신 어머님도 사랑을 찾고, 30대(본인)도 사랑을 하고 싶고, 찾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소개, 동호회 모임, 소개팅 어플등을 사용하여 사랑을 찾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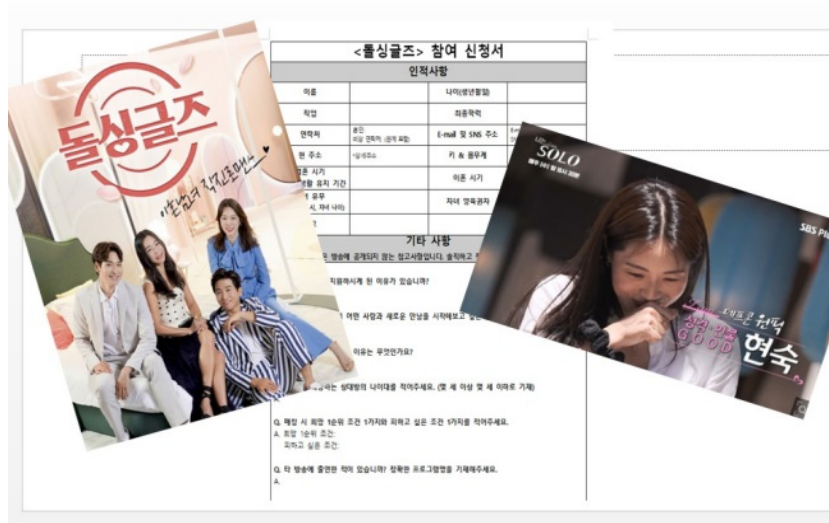
아직도 싱글입니다. 도와주세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거주중인 30대 홍길동 남성의 실제 상황.

그의 가장 큰 현안은 사랑. 그리고 그의 주위 가족,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찾고 있음.

- 이름: 홍길동
- 직업: 프리랜서
- 관심사: 사랑/연예
- 취미: TV시청
- 특이사항: 돌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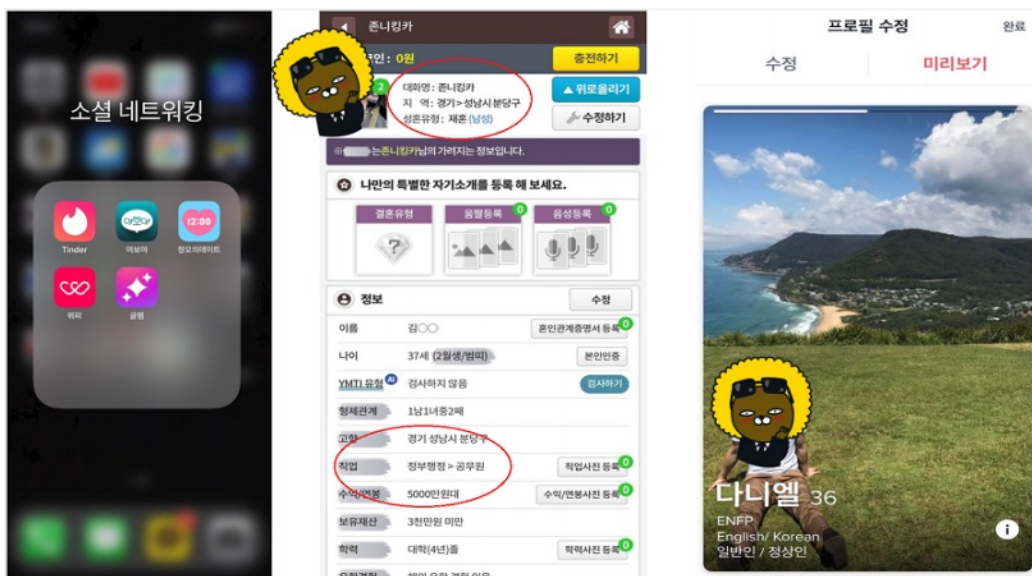
<그림 1> 소개팅 관련 인기 TV 프로그램 ‘돌싱글즈’, ‘나는SOLO’



프로그램에 출연 시도를 결심할 만큼 저는.. 아니 홍길동은 외롭습니다.

○ 시도1 -소개팅 어플

<그림 2> 홍길동 휴대폰 소개팅 어플 모음 / 여보* 프로필 / 틴*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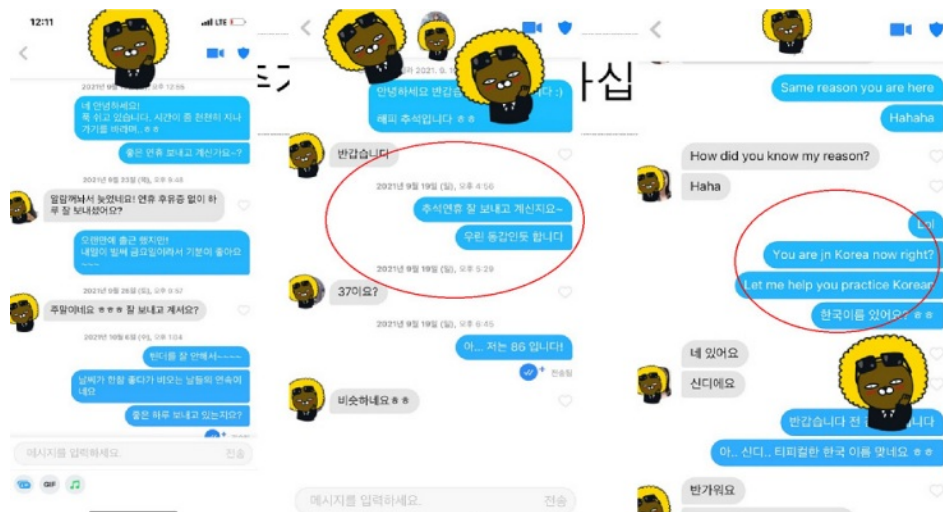


메이저 소개팅 어플을 통한 홍길동의 반쪽 찾기 프로젝트

- 아이디: 존니킹카
- 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짓,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거주중)

- 직업: 공무원 (거짓, 프리랜서임)

〈그림 3〉 홍길동 틴* 어플 채팅 내용



홍길동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영어까지 사용하며) 노력함.

○ 시도 - 결과

홍길동, 소캐팅 어플을 통하여 실제 이성과의 만남은 실패

〈그림 4〉 데이팅앱 남녀 비율관련, 서울경제신문, 2022.04.29.



홍길동이 주로 사용한 어플, 틴*은 96.6% 남성, 3.4% 여성 이라는 신문 뉴스.

홍길동. 누구와 대화를 한 것일까?

알바생의 이성과 대화를 한 것인지, 실제 실존하는 이성과의 진지한 대화였는지, 그놈?! 이었는지 아무도 알수 없다.

잠깐, 홍길동은 직업과 거주지를 거짓으로 등록을 했다. 왜 그랬을까?

맞다, 실제보다 더 호감을 얻고자 그랬다.

이 또한 아무 제제가 없었기에 가능했다.

한 가지 더, 홍길동은 그 누구와도 자신이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 어떠한 이유인지 가족, 친구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사랑을 찾는 현 방식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아 연애하고 싶다’

사랑을 찾고 있는 돌싱 홍길동, 그리고 우리들.

과연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주민행정복지센터: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지역 사랑 플랫폼’입니다.

○ 지역 사랑 플랫폼 설계 (정책과제)

주요 키워드

- ✓ 민간영역 -> 공공영역 (확대되는 지역 정부의 역할)
- ✓ 법적 근거, 제도화 (공론화, 주민/의원 조례 발의)
- ✓ 시대에 맞는 눈높이 정책 (온라인 플랫폼)
- ✓ 사랑의 조건 (주요 정책들의 하모니 : 일자리, 주거, 보육)
- ✓ 고려사항 : 민간영역 침해, 불법, 사랑의 대한 인식

언제까지 사랑은 민간영역이어야 하나?

이전 소개되었던 소개팅 관련 플랫폼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업적으로 운영될 우려 속에 참여자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예를 ‘배달특급’을 통하여 개념을 이해해 본다.

〈그림 5〉 경기도 공공배달앱



1.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공공배달앱이 개발되었다.
(지역 사랑 플랫폼) 사랑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한계가 파악된다면(연구과제) 공공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2. (배달특급)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서비스를 구축 후 민간 업체와의 경쟁 등에서 한계를 보이며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 배달특급은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하여(당시 지역화폐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지역화폐 기반 소비자 할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주요 정책끼리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주요 사례)
(지역 사랑 플랫폼) 단순 사랑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개발에 나아가 운영에 대한 디테일의 강조. 특히, 사랑의 조건(일자리, 주거, 보육 등)의 연계되어 있는 정책들을 함께 활용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필요성
3. (배달특급) 앱의 꾸준한 개선 및 선택형 리뷰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및 악성 리뷰를 막는 방법을 고안 나아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충하며 품질 향상을 함.
(지역 사랑 플랫폼) 사랑 관련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은 필수이며 한곳의 지자체에서 나아가 주변의 지자체와의 정보를 공유, 또한 민간영역을 많이 침범하지 않고 함께 협업,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

○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공공역역으로 올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그림 6〉 지방자치법

<div> <div> <div>본문</div> <div>제1장 개관(總論)</div> <div>연혁</div> <div>조직비교</div> <div>신규법비교</div> <div>법령체계도</div> <div>법령비교</div> <div>조례위임조례</div> <div>위임조례</div> </div> <div> <div>조문검색</div> <div>입법주조법시</div> <div>화면내검색</div> </div> </div>									
<div> <div> <div>관례</div> <div>언어</div> <div>위임할정규칙</div> <div>규제</div> <div>생략법령</div> </div> <div>지방자치법</div> <div> <div>[시행 2022. 1. 13.] [법률 제19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div> <div>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6-3307</div> <div>행정안전부(선거의뢰자치법규-지방의회), 제31-104호, 044-206-3373</div> </div> </div>									
<div> <div>제1장 총강(總綱)</div> <div>제1절 총칙</div> <div> <div> <div>제1조(목적)</div> <div>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iv> </div> <div> <div>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div> <div>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div> <div>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역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div> <div>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div> </div> </div> <div> <div>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div> <div>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div> <div> <div>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div> <div>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이하 "읍·면"이라 한다).</div> <div>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읍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div> <div>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div> </div> </div> <div> <div>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div> <div>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div> </div> </div> </div>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대에 맞는 눈높이 정책

- 정책이 실현이 가능한 인프라 확인 (인구수, 남녀비율)
- 온라인 플랫폼의 인식 (사랑, 소개 관련)

〈그림 7〉 주민등록 행정통리별 인구

주민등록 행정통리별 인구				
2022. 7. 31. 기준 (단위 : 명/세대)				
행정 통 · 리별	인	구	여	세 대 수
계	남	남	여	
광 주 시 (3읍 4면 6동)	390,246	199,090	191,156	170,047
오 포 읍	112,945	56,953	55,992	49,310
초 월 읍	48,864	25,376	23,488	21,371
곤 지 앞 읍	22,878	12,224	10,654	11,515
도 록 면	9,557	5,230	4,327	5,121
퇴 촌 면	15,873	8,064	7,809	7,573
남 출 면	1,495	788	707	823
남한산성면	2,456	1,290	1,166	1,226
경 안 동	29,681	15,244	14,437	13,481
쌍 령 동	18,259	9,127	9,132	7,187
송 절 동	21,811	11,039	10,772	9,690
탄 범 동	38,653	19,601	19,052	16,327
관 남 1동	34,077	17,457	16,620	14,733
관 남 2동	33,697	16,697	17,000	11,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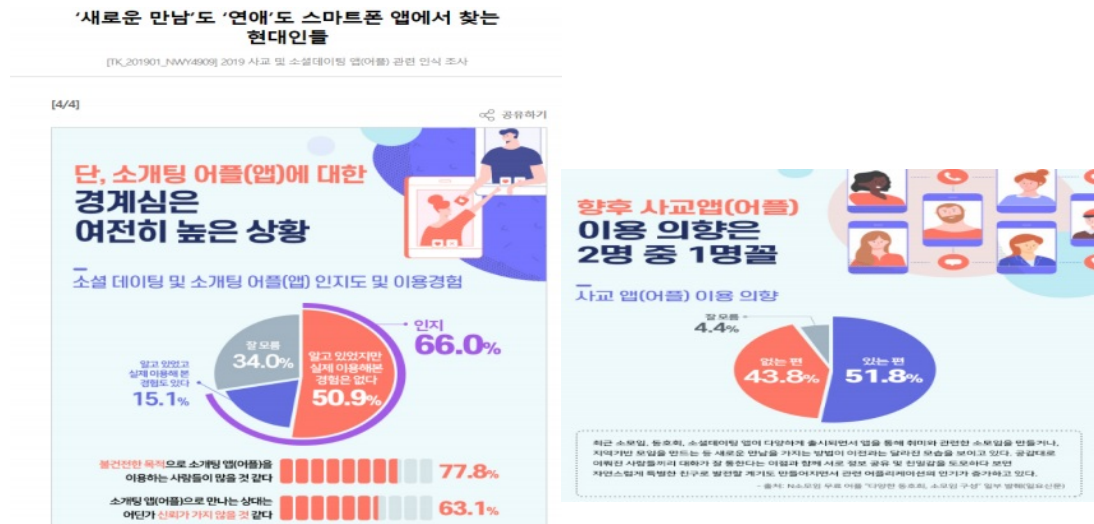
* 외국인포함 총 인구수: 401,112명(외국인 10,866명)

자료 : 광주시청 통계자료, 2022.7.

경기도 광주시 경우 수도권의 주변지역(성남, 용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 이지만 남녀 비율은 적당하게 배분되어 있다.

○ 온라인 만남의 인식 개선 필요

〈그림 8〉 온라인 만남 동향



자료 : 트렌드 모니터

새로운 만남을 온라인으로 찾는 현대인들, 그러나 아직도 소개팅 어플에 대한 경계심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소개팅 어플의 이용에 대한 의향은 긍정적이다.

공공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계심을 낮추고 신뢰를 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

○ 마무리

새로운 도전과 변화. 그리고 행복한 주민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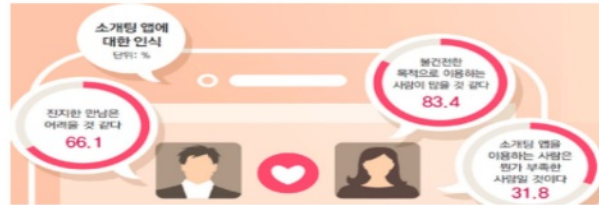
사랑을 위해선 필요한 조건이다.

보고서는 공공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제안 할 뿐 아직 많은 과제가 있다.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림 9〉 소개팅 앱에 대한 생각

소개팅 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에 따르면

소개팅 앱에 대한 인식으로

1.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83.4%)
2. 소개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31.8%)

소개팅 앱을 쓰지 않는 이유로는

1. 신뢰가 가지 않아서 (56.5%)
2.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꺼림칙해서 (48.9%)
3. 인위적인 만남인 것 같아서 (37.6%)
4. 하룻밤 즐길 상대를 찾는 느낌이 들어서 (36.4%)
5. 불륜을 조장하는 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35.0%)

자료 : 트렌드 모니터

다만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사랑 관련도 공공영역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수많은 정책토론회, 공론화를 통해 꼭 실현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사랑과 전쟁이 아닌, 사랑과 정책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의 사랑하는 지원하는 꿈을 꺾 본다.

(미래)

홍길동 아직 싱글인가?

- 공공이 운영하는 지역사랑 플랫폼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 지역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동호회
- 원스톱 지역 정책 상담을 통한 일자리와 주거 해결
- 지역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사랑 플랫폼' 원스톱 행정으로 해결해주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이사와 지역에 인구수가 늘어났다.

홍길동은 '지역 사랑 플랫폼'을 통하여 만남을 성공, 자녀를 계획 중이다.

그는 과연 이제 행복할까.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주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주차면 제공

김윤환 경기 성남시의회의원

I. 제안배경

- 2019년 기준 경기도 불법주차 신고통계에 따르면 약 5.5만 건이 발생했으며, 60%이상이 횡단보도 상 불법 주정차 신고임. 이에 따라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 4월부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단속 증가에 따른 운전자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함.
- 정부의 주차장 공급정책은 노외 공영주차장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객은 도착지로부터 100m 또는 도보 3분 초과 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가까운 주차장만을 이용함. 정부의 주차장 공급정책은 이용자 분석이 미흡하여 지역별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법주차 민원, 단속 민원 등의 사회갈등을 가중하고 있음.
- 성남시의 현행 주차 정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공유’, ‘공영주차장’ 등이 있으나 이 또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제한된 주차 공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탄력주차면 공급 방법을 제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노상주차장 디지털화를 통한 합리적 행정으로 편의성 증대 및 불법주정차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

II. 불법주정차 현황 및 발생원인

- 성남시 주정차 위반 단속집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후 7만 건 가량 늘어났음. 국민신문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삼성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유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성남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주중 53.2억 건, 주말 14억 건으로, 2019

년 대비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고 차량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남시의 자동차 등록 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차량 이용률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가 증가함.

- 2021년 12월 기준, 성남시 주차장 면수 현황은 부설주차장이 466,203대로 사설주차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9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차요금 지불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요금을 피하고 싶다는 응답이 56.1%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확인됨.

III. 성남시 현행 주차 정책 문제점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자 대상으로 배정점수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하는데, 거주민 주차는 퇴근 후인 야간 시간대에 집중됨. 거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주간 시간대는 모두 불법주차로 단속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불법주차의 단속이 늘어나게 됨.
- 거주자우선주차면, 빌라 등 주차공간 공유 시설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차단위구획 훼손으로 인한 인식이 어려워져 주차공유 이용 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움. 또한 불법주차로 인해 공유주차장을 찾더라도 주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개인 간 거래로 인한 공유재산의 사유화가 발생하여「공유재산관리법」위반의 소지가 있음.
- 증가하는 차량 수 대비 공영주차장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마저도 거주자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일반 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음. 통계청에 따르면 성남시 공영주차장 면수는 2017년 21,514면에서 2020년 20,051면임.
- 주차 단속의 방법도 2인 1조, 육안 및 수동 단속 방식으로 재래식으로 단속함에 따라 주차면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함. 노상주차구획 내 주차차량 바로 뒤 주차구획 없는 곳에 주차할 경우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면 요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음.

IV. 현행 노상주차 적용기술

- IoT¹⁾기술은 주차면 바닥에 차량 인식 센서를 부착하고 APP과 IoT센서로 구성하여 주차면 사용 유무를 판단함. 비교적 저렴한 운영비용의 장점이 있으나, 도로파손, 유지보수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됨.

1) IoT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됨.

〈그림 1〉 (왼쪽) IoT 주차면 (오른쪽) LPR 노상주차장



- 카메라 기술(LPR)은 주차면 전/후에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부정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싼 설치운영비와 낮은 카메라 인식률, 보도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위치정보 기술(GPS)을 활용한 주차장은 SBAS 위성 기반 보정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측위하고 주차면 가상공간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APP, WEB으로 전달하여 주차장 구획선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친환경설치와 저렴한 설치운영비와 부정차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초기 낮은 시민 인식으로 인해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음.

V. 탄력주차면

- 탄력주차면은 교통의 흐름에 따라 평상시에 차로로 사용하고,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일부 도로를 주차면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특성에 맞는 노상주차장 공급이 이루어지고, 거주자 및 외부자의 주차권을 확보할 수 있음.
- GPS기술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의 주차면을 설정하고 이 데이터를 지자체 등에 제공하여 주차관리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음.

VI. 관련 법규 검토

■ 노상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현행 법규

관련 현행 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구역 검토 →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해제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 등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탄력주차장 설치 구역 검토 가능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 및 폐지함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 주변 설치 제외 시간대별 교통소통 장애를 주는 시간에는 폐지하는 형태로 운영 가능 → 출퇴근 시간 등 침두시 폐지 → 비침두시 운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 탄력주차장 설치 구역 검토 → 제2항의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 검토 → 혹은 보행 지장 없는 곳 등을 지자체 조례 지정을 통해 설치 가능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다양한 노상주차장 공급 필요 → 기존 도로 재구성(도로 다이어트 카)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패턴 파악 → 시간별 이용이 가능한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및 유휴지를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여 공급 필요

■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현행 법규

관련 현행 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0미터 이상	4.50미터 이상
일반형	2.00미터 이상	6.0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0미터 이상	5.0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0미터 이상	2.30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한 탄력주차장의 주차구획 검토
→ **조례 지정** 및 교통흐름 지장 주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차구획시에 너비와 길이에 대한 검토
→ 건설기계차량이 많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구획으로 주차장 공급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 편의 개선 유도
- 사용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표시 전국 **표준화** 필요
→ 도로의 차선의 종류와 색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탄력주차장의 표준화된 색 및 종류 검토

도로주정차선 종류

백색 실선

주차, 정차 가능

황색 실선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황색 점선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황색 이중 실선

주정차 절대금지

VII. 결론

- 꾸준히 증가하는 차량등록과 대중교통 저조한 이용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등으로 발생하는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탄력주차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임. 탄력주차면은 교통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차장 이용율이 높은 곳을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비침두시간(붐비지 않을 때)에 일부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GPS 기술을 이용해 노상주차장 디지털화를 통한 합리적 행정으로 편의성 증대 및 불법주정차가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됨.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오산!

-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를 통한 보행취약자 보호체계 구축

전예슬 경기 오산시의회 의원

매일 건너는 횡단보도가 버거운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외출하게 되면 최소 한 번 이상 마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인데요, 보통은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있지만 보행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린 보행취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에게는 이용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녹색불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유지 시간은 경찰청 매뉴얼을 따르며 초기 진입시간 4~7초에 1m당 1초를 더해 계산합니다. 경찰청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평균 보행속도는 1초당 1m, 보행취약자의 평균 보행속도는 1초당 0.7m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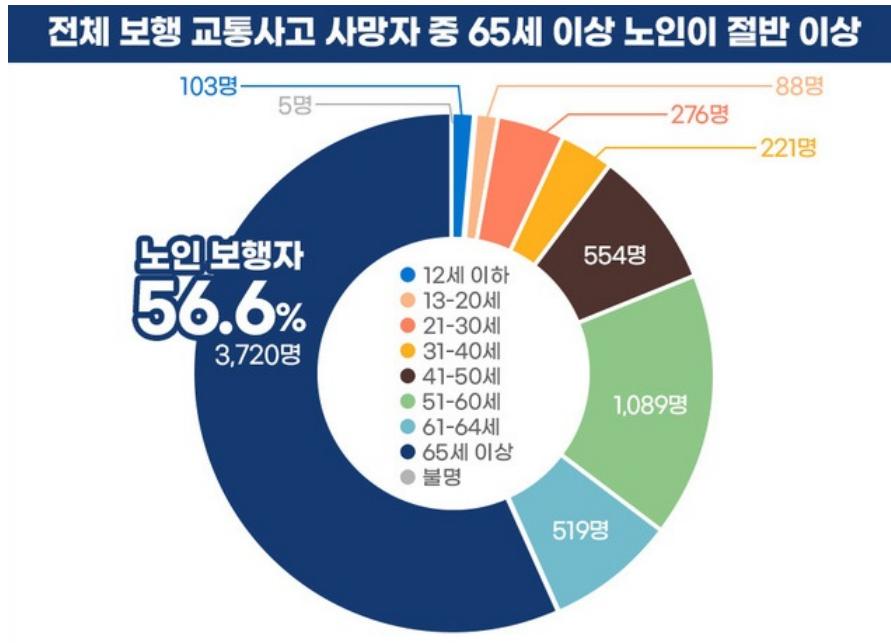
이를 토대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를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로 폭을 12m라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16~19초 동안 보행신호가 켜집니다. 1초당 0.7m를 걷는 노인이 16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11.2m입니다. 만약 12m 폭 도로가 규정에 맞춰 16초 동안 보행신호가 들어온다면 노인은 시간 내에 건너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노인의 경우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녹색불 신호로 바뀐 후 바로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심각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연령대 자료<그림 1>를 살펴보면, 총 사망자 수 6,57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3,720명으로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연도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그림 2>를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그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노인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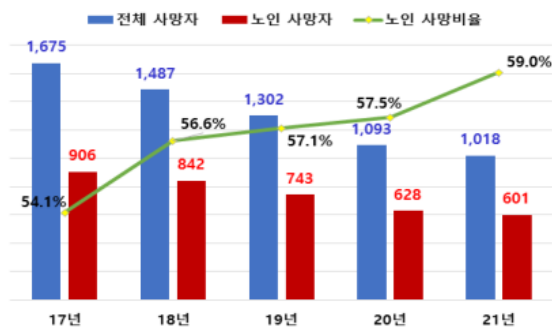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노인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그림 3] 통계에서도 국내 노인 사망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19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 사망자 수는 10만 명 당 19.8명을 기록해 1위로 나타났습니다. 회원국 평균(7.6명)과 비교하면 2배를 훨씬 넘습니다.

〈그림 1〉 최근 5년간 연령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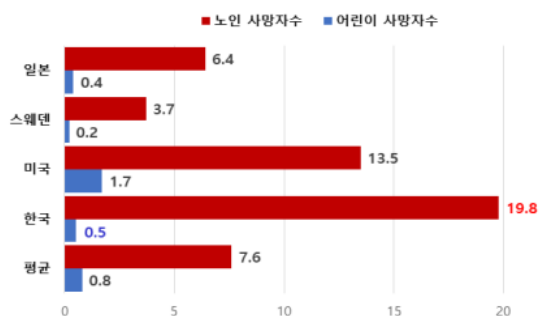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림 2〉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림 3〉 노인·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10만명당 사망자수



자료 : 도로교통공단



자료 : OECD보고서, 2019.

이러한 문제점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오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만 집중됐던 시선을 넓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보행취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오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 주요 간선도로인 경기대로(국도 1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이 관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표 1>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만여 명의 인구 중 절반가량이 차량을 보유 중이고, 인근 도시 간 이동을 위한 통과 교통량이 많아 차량 통행이 많은 편입니다.

〈표 1〉 최근 5년간 오산시 자동차 등록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록대수	99,758	105,134	109,374	112,775	115,184
전년말대비 증감	5,875	5,376	4,240	3,401	2,409

자료 : 오산시청

오산시는 2012년 오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2012~2020) 수립 이후 2016년 세교1 지구 조성에 따른 ITS 시설물 인수인계<표 2>를 받은 후 시민들의 요구사항 및 호응도가 높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구축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당시 ITS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구분	무선신호시스템 (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	도로안내 전광판	교통상황 CCTV	차량검지장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수량	12	3	3	7	42

자료 : 오산시청

관내 도로(교차로) 운영체제는 대부분 고정식 신호로 운영 중으로, 이로 인한 차량·보행자 신호 시간에 따른 손실시간 발생으로 차량 및 보행자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행취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은 단 4곳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편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를 통한 보행취약자 보호체계 구축해야

이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 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설치 ▲보행자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란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 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입니다.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도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후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2023년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용역 착공 및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관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며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기지정된 구역에는 단속카메라 설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후에는 보행취약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설치하여 대기시간은 줄이고,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그림 4>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 인식영역 진입 시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보행신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광판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직접 눌러야 하는 보행자 작동 신호등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면 노인들의 무단횡단 횟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시각, 청각으로 안내해주며 즉각적인 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4〉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체계



자료 : 파주시청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그림 5>은 보행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허용된 시간 범위(통상적으로 5~10초)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기술입니다. 교통섬을 설치하기 어려운 교차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행취약자의 횡단 유무에 따라 유동적으로 신호체계를 자동 변경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림 5〉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자료 : 창원시청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이 굴레를 벗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의 일부인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오산시 보행취약인구인 어린이(0~14세)와 노인(65세 이상)은 각각 14.6%,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산하면 전체 인구의 25% 정도 됩니다. 오산시민 4명 중 1명은 현행 신호체계가 짧아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행취약자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유년기를 거쳐 왔으며 언젠가는 늙어서 노인이 됩니다. 보행취약자의 걸음이 느린 것을 탓하기 전에 고도화된 시스템을 이용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며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산부를 다독여줄 양산 어디 없나

이묘배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

1. 서론 : 시의원 이묘배, 임산부 이묘배

저는 경남 양산시의 기초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2월에 예쁜 아들을 출산할 임산부이기도 합니다. 임산부 시민으로, 그리고 임산부 시의원으로 약 7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임산부가 행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양산’을 설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양산이 임산부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요소 두 가지는 바로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정책은 이미 예산에 따라 테트리스처럼 짜 맞춰진 여러 사업들을 비집고 들어가 자리를 잡기 힘듭니다.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정책은 그 내용이 실현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예산이 들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실행가능성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역시 정책을 제안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책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지 보여주기 식이나 이벤트처럼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낭비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할 정책이 양산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일회성 축제처럼 끝나버리는 허무한 정책이 되지는 않을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만족하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고민이 예산을 텅텅 실행되어 양산의 저출생 문제가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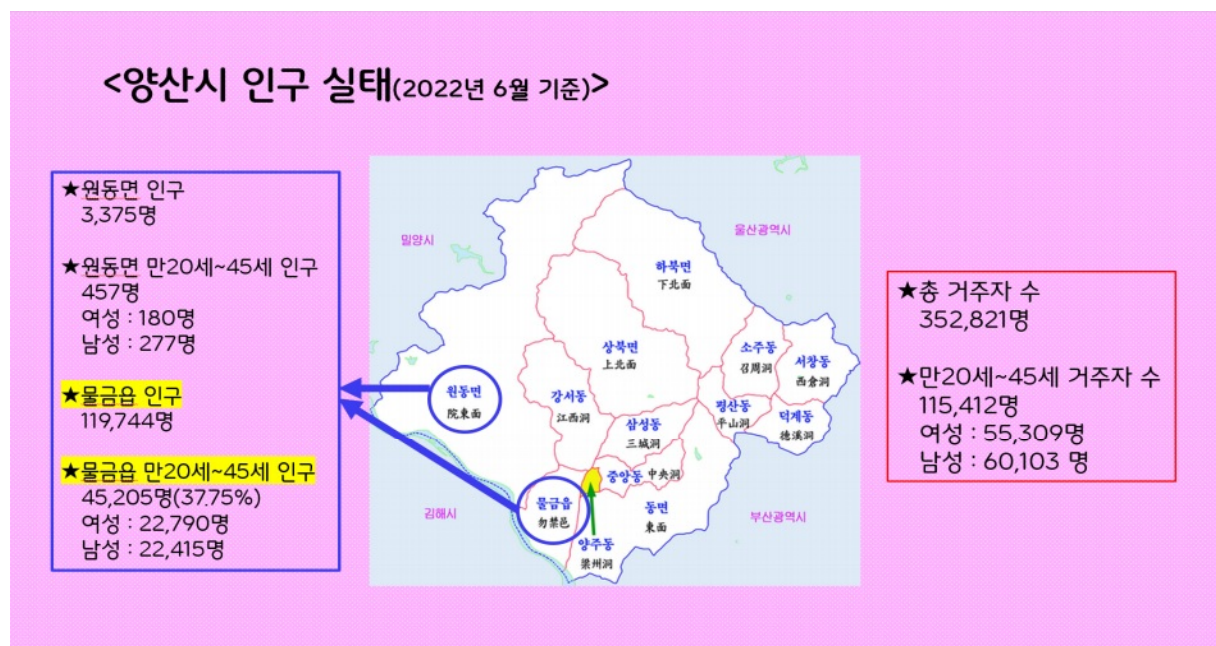
2-1. 양산의 저출생 문제와 현실

저출생 문제는 비단 양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법」을 제정한 이후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잇달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양산시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352,821명의 인구 중 보편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실현하는 만 20세~45세 인구는 총 115,412명입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물금읍에는 양산시 전체의 30%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만 20세~45세의 인구는 무려 37.75%에 달합니다.



〈물금읍, 원동면 : 본의원의 지역구〉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출생아 수는 914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914명이라는 수치는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수치가 높다고 해서 양산시가 저출생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3번째로 젊은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양산시에서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양산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임신부 및 영유아에게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 양산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양산시장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 양산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등) : 시장은 이 조례의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위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을 시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시의 저출생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역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례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저출생 문제 해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의 주체를 출산의 객체로 여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을 위해서는 출산이 전제되어야 하고 출산은 임산부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출산을 단지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한 의무인 양 ‘장려’하기만 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임신은 결단코 의무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라는 표현은 사라져야 합니다. 출산은 장려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은 사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사적 선택일 뿐입니다. 출산율 증가에 의한 국가의 위기 극복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 행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가지고서는 결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임신부들은 1차적으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임신을 계획하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신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 자체에만 목적이 있고 임신부의 행복이나 임신부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와 지역은 임신부들의 이러한 선택과 상황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여성은 애국자가 되기 위해 임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임신이 애국이다”라는 칭찬보다, 둘째와 셋째를 낳으면 지원금을 올려준다는 회유보다 임신부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꿈과 부모가 된다는 가슴 벅참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섬세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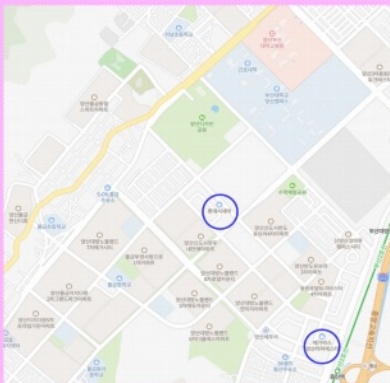
2-2. 임신부 묘배가 제안하는 우리 지역 임신부를 위한 정책 BIG3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임신부를 돌보고 임신부를 행복하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영화관 바우처를 함께 발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양산시 보건소에서는 임신부가 등록을 할 경우 엽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철분제, 손수건, 임신부 배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1인 영화관람권 3매를 함께 발급하게 된다면 임신부의 문화활동과 정서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 묘배가 제안하는 우리 지역 임신부를 위한 정책 BIG3>

1. 보건소에서 영화관 바우처 함께 발급하기!!



- ★현 양산시 보건소 임신부 지원 품목
 - 엽산제, 임신초기검사,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철분제, 영양제, 손수건, 임신부 배지, 차량용 임신부 스티커 등
- ★신규 희망 정책 내용
 - 임산부 보건소 등록 시 1년간 이용 가능한 **1인 영화관람+팝콘+음료 바우처 3매** 제공
- ★기대 효과
 - 신도시 물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부 유입으로 인해 친구가 부족한 **임산부의 정서 및 문화활동 케어 가능**
 - 집에만 머무는 임신부들의 **산전우울증 예방효과**
 -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침체된 영화관 활성화**에 기여
 - 영화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

물금은 형성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도시입니다. 따라서 물금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부로부터 이주해온 분들입니다. 이들은 친구의 부재, 교류의 부재로 인해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금에는 신도시에 걸맞게 아파트 단지들이 뻗뻗하게 들어서 있으며 아파트 단지 사이로 영화관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파란색 원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영화관이고 영화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네모난 갈색 구역은 모두 아파트 단지입니다.

만약 양산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면 친구와 만날 기회가 없어 집에만 머무는 임산부들의 산전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낮 11시~오후 4시까지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임산부들이 영화관을 이용하게 되면 침체되고 있는 영화관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금에는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 문화 활동을 하는 인구가 적고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 역시 적은 편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가깝고 대부분이 자동차생활을 하는 탓에 아파트 주변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금의 많은 임산부들이 낮 시간을 활용해 문화생활과 외식활동을 주도해 나간다면, 물금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 묘배가 제안하는 우리 지역 임산부를 위한 정책 BIG3>

2. 임산부 만남&소통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하기!!



- ★현 양산시 보건소의 취약점
- 신도시와는 다소 떨어진 위치(물금에 위치 X)
 - 부족한 주차공간
 - 불편한 대중교통(양산시의 고질적 문제)
 - 문화시설보다는 의료시설에 가까운 이미지와 분위기

★신규 희망 정책 내용

-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신도시 내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임산부를 위한 문화시설 마련
- 임산부를 위한 독서공간, 소통공간, 체험공간 마련
- 각 공간에 맞춘 프로그램 지원
(ex : 우리 아가를 위한 미성교실, 독서토론, 임산부 요가&스트레칭 등)

★기대 효과

-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친분 및 유대감 형성
- 이웃 간의 관심과 친밀도를 향상시켜 **따뜻한 지역분위기 조성**
- 집에만 머무는 임산부들의 **산전우울증 예방** 효과
- 태아에 대한 **부모의 애착과 이해**도 향상에 기여
-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도 상승 → **인구 유출 방지** 효과

둘째, 임산부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소(그림에서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물금과 먼 곳에 위치해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과 불편한 대중교통 때문에 임산부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의 커뮤니티 공간은 ‘마음먹고 가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산부 간의 소통은 삶의 일부가 되어야지 마음먹고 해야 하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금읍 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물금의 임산부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동료 간의 친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임산부들의 산전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만 이웃 간의 관심과 친밀도를 향상시켜서 따뜻한 지역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끼리의 끈끈함은 곧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애정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양산의 오랜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물금 내 광장과 공원에 태교&육아 플리마켓(flea market)을 여는 것입니다.

<임산부 묘배가 제안하는 우리 지역 임산부를 위한 정책 BIG3>

3.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태교&육아 플리마켓 추진하기!!

11일 당근마켓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웃간 나눔이 가장 많았던 동네 10곳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당근마켓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나눔 게시글이 올라오는 지역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이다. 이곳에선 올해 누적 나눔 게시글이 2만 8112건으로 집계됐다.

국제신문 2022.10.11 기사 중

양산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남짓한 인구 12만 명이 몰려 있는 물금읍의 중심인 증산신도시에는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 있지만, 건물 공실률이 70%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극심한 침체 상황을 겪고 있다.

UPI뉴스 2022.9.20 기사 중

★물금읍의 실태

- 높은 인구 수, but 침체된 상권
- 주민들 간의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
- 침체된 상권을 중심으로 상권 살리기 정책들이 추진 중
(ex : 특화거리 조성, 각종 페스티벌 추진, 플리마켓 운영 등)

★신규 희망 정책 내용

- 침체된 상권 근처 공간(라피에스타 앞 광장, 메깃들 공원 등)을 활용하여 태교용품, 육아용품 플리마켓 운영
- 사업체가 추가 되지 않고 주민 중심의 중고 거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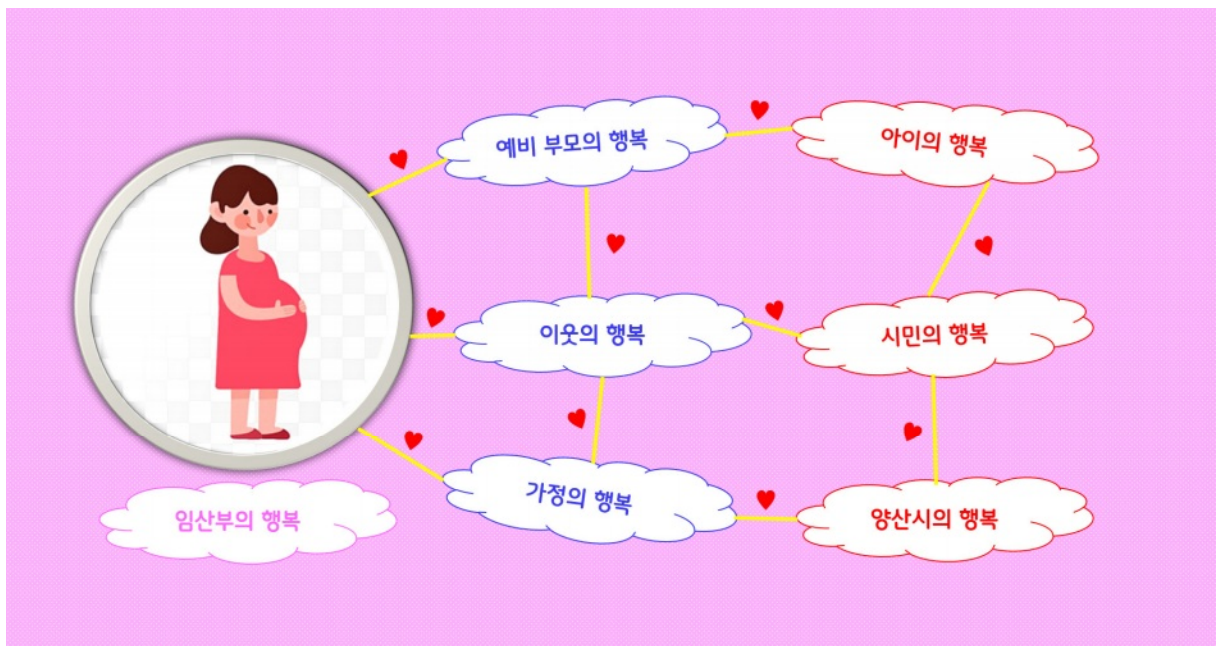
- 중고거래의 단점 보완 가능(실물 확인 및 사기거래 방지)
- 임산부 및 부모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 제공 가능
-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추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
-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
-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환경보호 효과 창출

위 그림에 첨부된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양산시 물금읍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형 상가들이 물금읍 아파트 주변으로 가득 들어서있지만 공실률이 무려 70%에 달해 상권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양산시에서는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거나 각종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형 상권인 라피에스타 앞 광장이나 아파트 단지의 주변 공간인 메깃들 공원 등에서 중고 태교&육아용품을 거래하는 플리마켓을 열게 되면 많은 임산부들의 희망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중고거래는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온라인 중고거래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특성상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많은 물금에서의 중고거래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모의 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물품거래는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서 환경보호 효과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앞서 제가 제안한 정책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산부의 행복은 예비부모 모두의 행복이 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선물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임산부의 지속적인 소비활동은 물금의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되찾아주는 작은 날갯짓으로 작용할 것이며 임산부로부터 시작된 시민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시, 인구 유출이 없는 탄탄한 시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임산부의 작지만 커다란 행복을 지켜준다면 현재 양산시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산시 전체의 가치와 힘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양산시에서부터 임산부를 위한 다독임이 시작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임산부를 위한 다독임이 완성될 수 있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양산시 곳곳에서 실현되어 우리 양산시가 ‘출산장려도시’가 아닌 ‘임산부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농촌에 활기를 아이들에게 기회를, 살기 좋은 의창구

정수인 지역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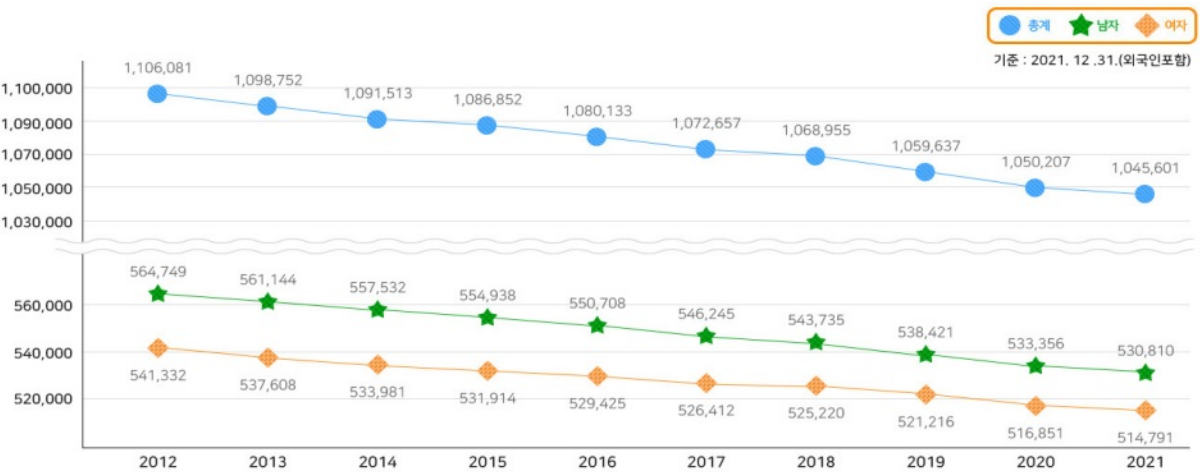
1.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

1. 의창구 현재 상황 분석

〈그림 1〉 의창구 기본현황



〈그림 2〉 의창구 인구추이



창원의 인구수 약 104만 명이다. 108만 명의 2016년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구는 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로 총 5개의 구이다.
그중에 의창구는 북면, 동읍, 대산면 이 옛 창원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이 농촌인 지역으로 의창구청이 있는 도심지와 구분이 되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창구는 216,095명 그중에 선거인수는 18만 명이며 그중 34% 인 56,000명이 노인 인수로 고령화가 높은 지역구이다.

지도에서도 도심과 농촌이 분명하게 보여 진다. 북면의 산지와 동읍의 주남저수지, 그리고 평야지대인 대산면을 볼 수가 있다.

〈그림 3〉 의창구 행정지도



2. 문제의식 도출

- 농업지역의 소외감 증가한다. 도농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진다.
- 농촌지역의 수익창출 구조도 현실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
- 일회성, 행사성, 단발적인 기획들의 한계점이 있다.
- 개별 농민만으로 체험농장 운영의 어려움이 크다.

교육의 획일화는 약점이다. 일부 시행하고 있는 학교 밖 방과 후라는 운영 속에서도 한계점이 있다.

자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부재가 지적된다.

일회성 자연체험이 아닌 대학 수강신청처럼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적인 부분 때문의 인구이동도 있는 현실 속에서 차별화된 교육의 모습을 확고히 보여줄 필요성이 요구된다.

3. 나의 주제 선정



II.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의창구 내의 도심과 농촌의 교류 활성화

읍면 주민들의 만족도 상승

타 시·도로 유출될 소비를

지역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자연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한 미래형 인재양성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 가능

미래 지향적 교육

교육목적의 인구이동도 자연교육의 심층화 다변화를 통해 일정 부분 방어 기대할 수 있다.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의창구 만들기도 가능하리라 본다.

[농민, 부모, 아이, 공급자, 소비자까지! 의창구민이 만족하는 의창의 자연 더불어 학교]

Ⅲ.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제

1. 구청과 교육청의 협업으로 계획

- 의창구청에서 주도 하는 방식
주제가 다른 농민들의 체험학교 연대화를 구성한다.
(딸기, 고추, 쌀농사, 키위농사, 감, 수박, 오리, 닭, 치즈 등등)
- 교육청과 함께 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처럼 단발성 행사가 아닌 한 가지 작물 경작하는 농가 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목적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교육의 주제와 목표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획해 낸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교육도 가능
부수적 효과 : 농가 주변의 소상공인의 수익도 올림

2. 구체적 방법 구상

- 한 달의 수업 계획
평일에서 선택 주말에서 선택, 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시간 조율이 가능하게 한다.
매주 월, 매주 수 금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 신청
달력에서 고르듯이 참여할 수업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 거리가 다소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본다.
보육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농가에 교육도 되고 구청과 교육청의 참여로 관리 감독 또한 되니 개인 운영 체험장 보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 교육의 질이 향상 되는 것으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층의 만족도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아이도 잘 키우고 어른도 공부하는 자연 친화 미래지향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3. 타도시의 성공사례와 비교

- 완주의 마을학교

“완주의 마을 곳곳이 학교가 돼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자율학교 참여자 이달 18일까지 모집
 주민이 제안한 교육 통해 주민 자율성 확보·주도적 성장 촉진
 컨설팅·교육프로그램 설계·전문 강사 파견·학습교구 등 지원
 2022년 05월 13일(금) 09:51 [완주전주신문]

“내 이름 석 자 한 번 써보는 거, 그게 가장 해보고 싶었지.”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연필을 꼭 쥔 채 꺾꾹 눌러쓴 이름 석 자에
 는 한때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지난겨울 이서면에서 진행된 ‘이서 골 때리는 서당’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시민자율학교
 ‘OO(땡땡)마을학교’ 사업으로 운영됐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문윤걸)에서는 지난해 참여한 마을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시민자율학교 ‘OO(땡땡)마을학
 교’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자율학교 ‘OO(땡땡)마을학교’는 과거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마다 이뤄지던 전통적인 학습공동체 형태에서 출발하여 마
 을 곳곳 주민이 제안한 교육을 통해 주민 자율성 확보와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 ↑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시민자율학교 OO마을학교 (자료사진)사업을 진행, 오는 1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한기를 활용해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을 공동학습이
 필요한 완주군 주민모임(8~15인 이내)을 지원한다.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마을 내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교육공간을 마련한 곳이면 어디든 ‘OO
 (땡땡)마을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주제 및 내용을 직접 제안하면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학교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설계, 전문 강사 파견, 학습 교구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 재배작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완주군 마을별 농한기 기간을 고려하여 올해 상·하반기
 총 2회 운영될 계획이다.

문윤걸 센터장은 “사업 참여마을들을 통해 문화전반에 걸친 교육의 수요가 마을 곳곳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얻고 문화적 경험을 쌓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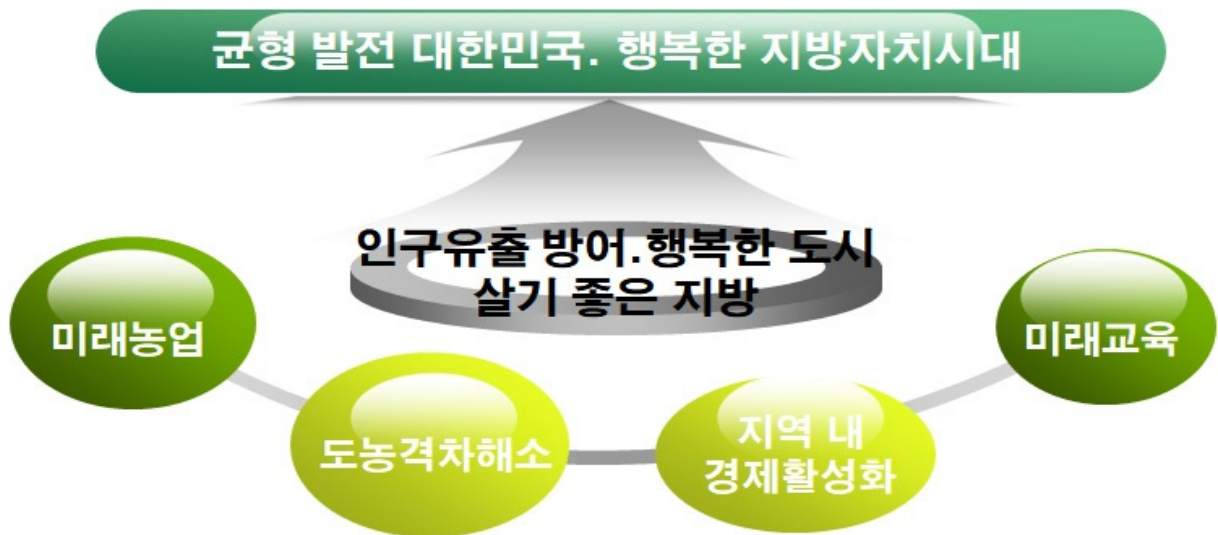
신청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www.wanjuculture.com) 또는 전화(063-291-5599)로 문의하면 된다.

- 완주는 시민 참여 주도로 마을 학교를 구성 하였다. 성공 모범 사례로 참고 하면 좋을 듯하나 ‘자연더불어학교’의 모습은 구청과 교육청 주도로 보다 다양한 주제교육, 보다 다양한 연령대 대상, 보다 더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 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의 어려움

구청장이나 시장의 의지가 강하고 교육감의 의지가 강할 때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

IV. 나의 지역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농업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모습 추구를 통하여 도농격차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꿈꾸는 지방 균형 발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그리하여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어 보고자 한다.

V. 마무리

민생위기극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창구지역위원회 발대식의 슬로건을 언급한다.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구 내의 농민의 소리를 듣고 부모들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을 이야기를 듣고,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다.
 더욱더 세심하게 경청하고 열려있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 해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2024년 총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일하는 민주당을 선보일 것이다.

참고문헌

- 창원시청 홈페이지, 창원구청 홈페이지, 완주전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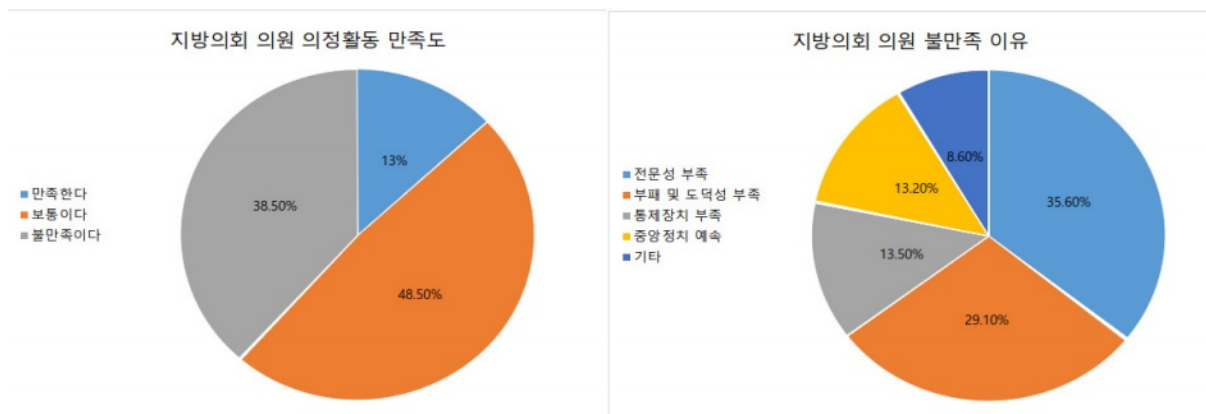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방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김경주 지역당원

1.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과 불신

〈그림 1〉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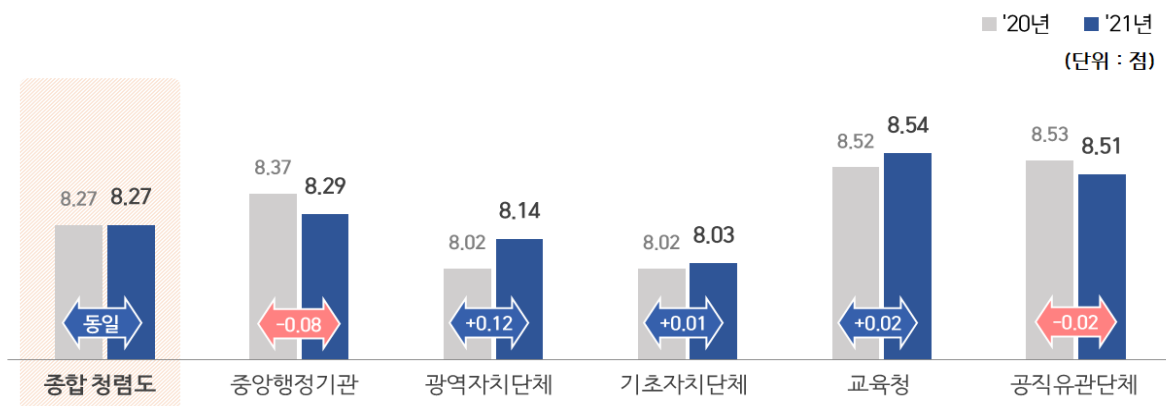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03.11.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지방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다.’ ‘지방단체장들은 돈을 먹을 줄만 알지 하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제 주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당 설문 응답자의 63.5%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에 동의하였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단지 13%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는 48.5% ‘불만족이다’는 38.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정치 불신이나 정치 혐오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 자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반대로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

한 만족도는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문제임과 동시에, 이러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만족 평가의 제일 큰 두 가지의 이유는 전문성 부족이 35.6%를 차지하였으며, 부패 및 도덕성 부족은 29.1%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림 2〉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9.

또한,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자료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전체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8.27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는 각각 8.14점, 8.03점으로 중앙 행정기관 8.29점, 교육청 8.54점, 공직유관단체 8.51점으로 전체기관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부족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II. 지방의회의 문제점, 청렴도와 전문성 해결방안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청렴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들의 근본에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의 문제부터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II-1. 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안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회의 경우는 각 시, 도의 권한의 대부분이 결정권 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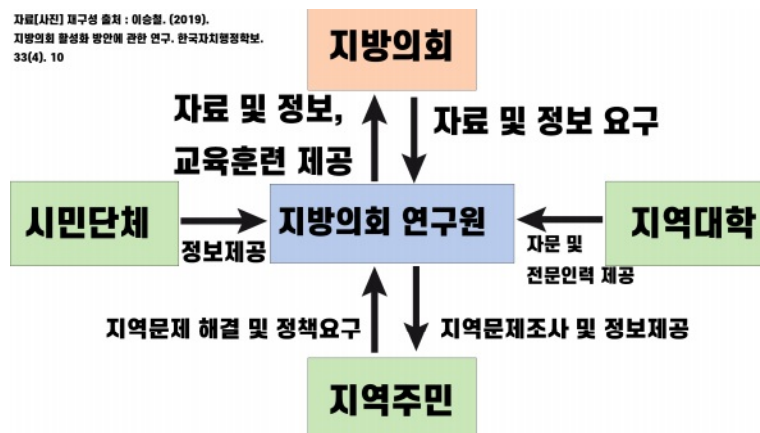
수를 시장과 도지사 같은 지방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의회는 그러한 권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의 경우는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 국회와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을 지방의회로 위임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하거나, 지방의회의 보좌관 제도와 달리 현재 국회에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조사 회답,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자료수집과 보급, 연구 활동 지원, 해외 입법 동향 분석 등 실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조직 차원 지원기구로서 실제 국회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학회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각 시, 도별 지방연구원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과 같은 기관이 있지만, 의회의 전문성을 키우고 시·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각 광역권 권역별로 지방의회연구원을 설립하고, 해당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현행 의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3〉 지방의회연구원과 지역 네트워크 관계



자료 : 이승철,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209-231., 2019.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연구원과 지역 네트워크 관계를 정리해 두었는데, 이승철 교수의 연구(2019)에 따르면 해당 지역 네트워크 관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어 지방의회에 유능한 지방의원이 진출할 수 있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보좌관 제도도 있지만, 보좌관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전문성 강화보다도 개인의 의견이나 보좌를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에, 지방의회연구원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방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지방의회연구원의 설치를 첫 번째 정책으로 제시합니다.

II-2. 청렴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두 번째로 다뤄야 할 논제는 청렴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이유 중 제일 큰 두 번째가 청렴도의 문제입니다. 이 청렴성의 문제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부패 혹은 부도덕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원을 법원을 넘어, 의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애초에 부패하지 않도록 지방 의원이 사용하는 혹은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공개집행, 해당 예산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의 대책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할 의회는 영국의 지방의회입니다. 영국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이 일정 부분의 윤리위원을 맡되, 전문가와 민간인을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최소한 전체의 3분의 1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윤리위원회를 상설로 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만 소집,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에 상설윤리위원회를 구성, 민간인이 일부 참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사항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징계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 금지, 4. 제명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징계의 종류가 너무 세분되어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제명, 징계(출석 금지 등의 조치), 견책, 벌금 부과, 의원 특권의 정지 및 제한, 위원회가 정한 특별징계와 같은 조치가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2만 달러 이내의 벌금, 손실보상, 사직 권고. 영국에도 견책, 사과, 화해, 직무중지, 자격정지 등 여러 징계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지방의회의 징계 종류를 세분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단순한 징계 종류로 의회의 부패나 비도덕을 막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방향의 의회 청렴성 강화로선, 의회에 전문가와 민간인이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는 상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와 징계 종류의 세분화와 강화가 의회 청렴성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방향입니다. (이승철,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 방안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5(4), 215-236., 2020.)

두 번째 방향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 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회 업무추진비와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집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의 문제입니다. 우선 의회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처가 지출목적으로 다과나 간담회를 위한 경비 지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추진비 내용공개와 지출항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정보에서 날짜와 요일, 그리고 집행 시간(카드 승인 시간)을 정확히 표기해야만 합니다. 지출목적에 ‘간담회 경비 지출’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그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다과는 무엇으로 구매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경우에는 식당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참석 대상이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이러한 예산은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회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회계 교육에 대한 규정, 지방 의원의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를 규정해

야 합니다. (이승철,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 방안 -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6(4), 209-238., 2021.)

다음으로, 주민 숙원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지방의회의원들의 쌈짓돈이 아니냐, 혹은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의 찬성과 반대 관점이 상당한 대립에 있습니다.

한쪽에선,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지 못하는 거리 곳곳, 마을 곳곳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의회의원의 재량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의견과 선심성 예산,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 세력과의 결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타당한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대안을 제안하자면, 해당 주민 숙원 사업비를 공개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방 의원이 해당 예산을 구성하고, 결정하되, 지방 의원이 소속된 각 동, 읍, 면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한 심의와 찬반투표를 거치게 된다면, 지방 의원은 기존에 의원이 해야만 하는 거리나 마을 곳곳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의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주민 숙원 사업비의 쌈짓돈 혹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 세력 결탁을 막고, 방지할 수 있으며, 선심성 예산화에 직접적으로 심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며, 청렴성과 관련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III.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불신 받는 이유는, 단순한 지방 자치에 대한 반대나 정치 혐오를 넘어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의회연구원’ 설치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해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민간인과 전문가가 동참하는 지방의회의 상설윤리위원회와 업무추진비의 내용공개와 지출항목 구체화, 지방의회에 대한 회계 교육 규정과 부당 사용할 때 회수 규정, 등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주민 숙원 사업비의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찬반투표에 따른 공개집행으로 기존의 폐쇄적인 주민 숙원 사업비를 개방적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렴도를 올려야만 합니다.

참고문헌

-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2021.3.11.
- [2]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12.9.
- [3] 이승철,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209-231., 2019.
- [4] 금창호·강신일,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 지방의정센터의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369-386., 2014.
- [5] 이승철,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 방안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5(4), 215-236., 2020.
- [6] 이승철,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 방안 -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6(4), 209-238., 2021.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위험하진 않지만 도전적인 곳 ‘기적의 놀이터’

김미애 지역당원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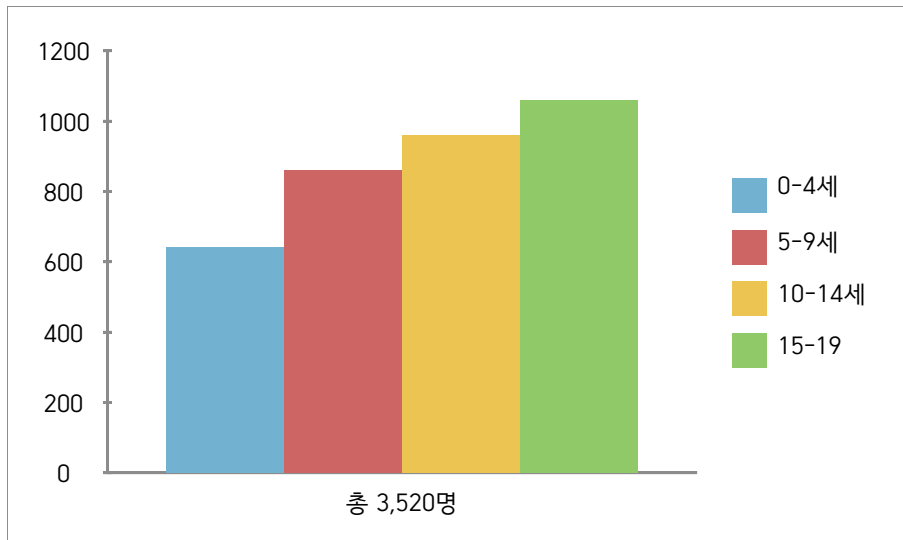
경북 영덕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곳이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영덕군은 경제적 활동과 함께 건강과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시니어를 위한 수많은 정책, 복지, 문화 등 다양하고 종류 또한 많지만, 반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늘 아쉽고 개선되지 않는 기존 놀이터의 노후문제와 더불어 영덕군 관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문화생활을 하기엔 지루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나의 유년기를 떠올려보면 변변한 놀이기구 하나 없이도 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마당화단에서 모래놀이, 고무줄놀이 등 주로 신체활동을 많이 했다. 또한 학교와 집이 멀었던 환경 탓에 가는 길이 지루하여 색깔 맞추기 게임을 하며 30분되는 거리를 친구들과 깔깔되며 재미있게 보냈던 유년기를 떠올려 보게 된다. 지금 아이들은 즐길 거리를 잊어버리고 미디어(**브), 각종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미디어에 더 흥미를 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추세이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학) 김성구 교수 연구팀이 대한소아신경학회지에 게재한 ‘미디어 노출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만 2세 이전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이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언어발달지연으로 치료받은 평균연령 생후 33개월 아동 40명과 같은 기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아동 66명을 대조군으로 해 미디어 노출시간, 시기, 형태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어발달 지연군에서는 63%의 아동이 하루 2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됐지만 대조군에서는 16%의 아동만이 2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됐다. 또한 미디어를 처음 접한 시기는 언어발달 지연군의 95%가 생후 24개월 이전이었으나, 대조군은 58%만 생후 24개월 이전에 미디어를 접하는 게 현실이다.(자료: 의학신문)

이처럼 미디어노출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통계에도 놀이터의 노후와 놀이 경험의 부재로 놀이의 흥미를 잃어가고 아이들의 대부분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미디어에 관심을 가진다. 잠시나마 미디어 노출을 줄이고자 부모의 대부분은 평일에 여유롭게 놀아주지 못하니 주말을 활용하여 영덕군을 벗어나 이웃마을인 포항, 안동 등으로 키즈카페를 방문하긴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덕에선 딱히 즐길 거리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없으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이들의 창의력에 투자를 한다.

II. 영덕군의 소아청소년 인구현황

〈그림 1〉 영덕군 소아청소년 인구현황



영덕군 총인구 35,497명중 소아청소년(0-19세) 인구는 10%에 달한다.
(0-4세 640명, 5-9세 859명, 10-14세 961명, 15-19세 1,060명)

III. 영덕군의 놀이시설 상황

〈그림 2〉 영덕군 놀이시설 상황



2022. 11. 9일 오후3~4시경 촬영한 놀이터 상황이다. 놀이터를 이용할 연령은 0-14세이지만, 시설과 놀이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고무매트바닥은 갈라졌고 최근 안전수칙이 있긴 하지만 중학생이 놀이터 내부로 자전거를 타고와 7살 아이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IV. 문제점

1. 아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터인가?

영덕군 관내 아이들은 체험하며 놀이를 통해 신체활동을 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형성할 시기에 놀이공간과 체험활동의 부재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대부분의 영유아기는 울거나 떼를 쓰며 그런 아이를 달래거나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집안일 등을 하기 위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를 흔히 볼 수 있다. 나도 맞벌이 부부이기에 아이들이 하원, 하교하면 퇴근과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었더라면 놀이터에서 뛰어 놀 수 시간을 보낼 텐데 그마저 힘든 것이 영덕군 놀이터의 상황이다.

2. 한국 놀이터의 특징 및 안전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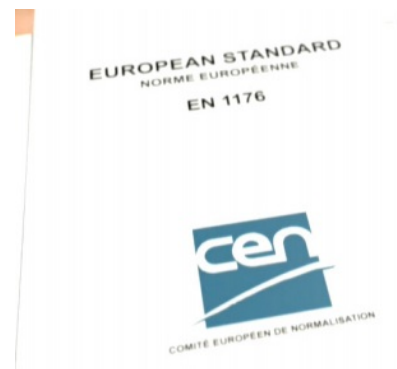
대체로 밝은 색을 많이 사용하고, 형태가 분명하여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 부족하다. 대부분의 바닥은 고무바닥이고 일부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모래 또한 위생상의 이유로 놀이터에서 퇴출직전이다. 또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곳곳에 ‘그네를 흔들지 마세요.’ ‘미끄럼틀은 옆드려 타지 마세요.’ ‘큰소리로 떠들지 마세요.’ 등 안전수칙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수많은 안전규정으로 위험한 놀이기구는 사라졌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 위험 요소는 철저히 배제된 채 놀이터는 세워졌지만, 정작 놀이터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놀이터와 함께 흥미를 잃어버렸다.

이어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씨는 국내에 7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지만 어딜 가나 ‘조합놀이대 1대, 그네, 시소, 탄성고무매트 바닥’ 3종 세트의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로 획일화 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안전’만 강조하다 보니 도전과 모험은 사라져 이런 지루함과 실증이 더 큰 사로를 부른다고 안타까움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로 놀이터의 주인은 놀이기구가 아니라 아이들이란 명제부터 바로 세우며, 어른들이 기획하고 만든 놀이터가 아니라 아이들이 기획하고 만든 놀이터가 만족스러운 놀이터로 아이들이 찾는 놀이터가 될 것이라 한다.

3. 안전한 놀이터는 불가능한가?

그들의 말처럼 정말 놀이터는 위험해도 괜찮은 건가? 그들이 말하는 위험한 놀이터의 교육철학은 무엇일까? 어쩌면 위험한 놀이터에서 놀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 아닌가? 완벽하게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야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림 3〉 유럽 안전기준 EN1176



자료 : EBS 다큐프라임 놀이터프로젝트

‘프란츠다너(독일/놀이터안전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안전한 놀이터는 불가능하며 위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위험에 대처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말한다. 그렇듯 놀이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준은 유럽 안전규정 ‘EN1176, 1177’의 의거하여 안전규정을 기반으로 놀이터를 제작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아래 통계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가능하다.

〈그림 4〉 놀이터 안전사고 비율



가파른 기구에서 처음에는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이런 경험을 통하여 아프다는 것 학습하여 다음에 또 도전하여 성공하는 이런 기회가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즉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우는 곳 또한 놀이터라는 사실과 건강한 위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용감한 도전을 경험하는 출발이 놀이터라는 말이다. 아이들은 쉬운 일을 싫어하며, 늘 새로운 놀이에 집중한다. 모

든 가능성에 도전하고 경계선까지 접근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기에 안전전문가들이 본다면 아찔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위험을 무릅쓰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노는 것은 학교 가는 것 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V. 대안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를 제안한다

이미 ‘기적의 놀이터’는 순천에서 시작하여 1호부터 8호까지 완공되었고, 창원에는 3호, 영주에는 현재 공사 중으로 곧 완성되어 간다. 가까운 지역인 봉화에서도 2022년 사업으로 ‘활기찬 봉화, 봉화어린이들을 위한 기적의 놀이터’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봉화군도 영덕군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인구수와 매년 태어난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몇 명 안 되는 아이들과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아이들의 흥미마저 간과한다면 보육환경의 부재로 젊은 맞벌이 부부의 이주문제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지역의 특징을 살려 영덕에만 있는 상징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추억이 있는 영덕군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국내 ‘기적의 놀이터’ 현황

순천시1호 ‘영동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7월 개장• 하루평균 200명, 주말 700명 이용• 가공하지 않은 주변 지형과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기구 최소화
창원시1호 ‘송송통통’ 좋아좋아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5월 개장• 총사업비 6억• 기획부터 명칭선정, 디자인 등 전 과정을 어린이들이 직접참여
영주시1호 ‘신기한 나라의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6월 개장• 총사업비 10억•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역본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모를 통해 영주시가 선정
세종시1호 ‘땀뱀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0월 개장• 2024년까지 고운동 포함• 모두 7개소 놀이터 조성계획

1.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고 공감형성이 안된다면 사실상 추진하기가 힘들다. 관련부서 및 사회단체를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전문성과 상업적인 효과 등 정확한 정보를 통해 주민설명회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0~14세 연령의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2. 기적의 놀이터 선정 및 추진대상

영덕군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 주제로 미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품 선정 후 모형제작과정을 참여토록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학부모들과 주민들도 참여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그림 5〉 아이들이 만든 놀이터



자료 : EBS 다큐프라임 놀이터프로젝트

3. 추진방향과 놀이터의 메카 ‘놀이터관광도시 영덕’

영덕군은 지역대표 음식인 영덕대게로 인해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신태용’을 배출할 만큼 축구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코로나19시대에도 주말이면 영덕대게를 찾는 관광객이 무려 320만 명에 이를 만큼 국내 관광지1위에 손꼽힌다. 주말리 그를 포함하여 각종 축구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먹거리와 볼거리는 있으나 가족단위로 힐링 여행을 위해 영덕을 방문하면 막상 즐길 문화가 없어 늘 2%부족한 여행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부족한 관광사업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위해 영덕군은 동해안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영덕 아이 대관람차(400억)’와 ‘해상

케이블카(336억)’를 민자 유치하여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나 수익성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여론과 해양수산부의 말에 따르면 공유수면은 공공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려했고, 해양수산부는 태풍 ‘마이삭’ 때 해당 지역이 피해를 입어 안전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국내 ‘기적의 놀이터1’호를 시작한 도시이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속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험심과 협동심,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인생의 첫 배움터이자 유년기의 놀이시설이 평생의 삶의 질을 바꿀 만큼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할 만큼 엄마인 나보다 아이들의 대한 창의력과 모험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야호아이숲’, ‘유아숲체험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여 짚라인과 트리하우스 등 다양한 숲 체험 시설이 갖춰져 어린이들의 자연 체험장소로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예약만 지난해(2020년) 4만1,384명이었던 것이 2021년 7만3,926명을 기록하는 등 아이들의 방문이 계속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영덕군에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만들어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찾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면 영덕대게, 축구도시를 넘어 MZ세대의 ‘힐링’ 포인트를 잡아 자연에서의 다양한 놀이의 중심 ‘놀이터의 메카’로 영덕군의 인기를 한층 높일 것이다.

VI. 마무리

공유자적 - 놀이의 기능성: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맘껏 허하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놀이터 프로젝트명)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 즉 어린이들을 놀이터로 부르는 건 값비싼 조합놀이대가 아니라 ‘함께 놀 수 있는 친구’이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른들의 눈이 아니라, 어린이 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재차 강조한다. 아이들은 쉬운 일을 싫어한다. 모든 가능성에 도전하고 용감하게 경계선까지 접근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든다. 결국 알아서 잘 논다.

아이들의 놀 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호기심 가득한 창의력과 활기찬 모습들이 진정한 삶의 여유로 행복을 충전하고 다양한 미디어 문화보다 자연과 마을에서 찾는 꿈꾸는 놀이터로 인해 지속가능한 놀이문화가 될 것을 기대하며 작게나마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문제로 이주

하려 했던 학부모님들의 발길을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영덕군인 만큼 관광객들의 방문도 기대해본다.

따라서 위험하진 않지만 도전적인 곳, ‘기적의 놀이터’로 인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뿐만 아니라 영덕군의 군민들 모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추억의 놀이터로 일상생활의 재미를 느껴보길 바란다. 더 나아가 놀이터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들이 사회 협동놀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점과 ‘영덕군의 행복’과 ‘수준 높은 삶’이 있는 생명력 넘치는 영덕군에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다양한 놀이시설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의 추진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다른 종의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존재가 됐다. 더 다양한 놀이터가 조성돼 군민과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영덕이 되길 기대한다.

기적의 놀이터를 시작으로 다양한 놀이문화를 확대하여 관광메카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부지선정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대학도시 경산

- 「대학도시법」시행에 맞춰 경산소재 대학 활용을 중심으로 -

성기수 지역당원

1. 제언배경

1.1 경북 인구소멸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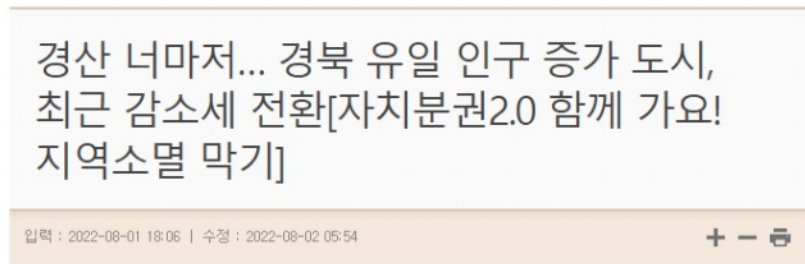
인구소멸의 위기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문제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총 23개 시·군 가운데 무려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위험지역¹⁾으로 꼽히고 있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수년간 경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였지만 최근 경산마저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전까지 증가하던 일부 증가하던 부분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인근 대구광역시에서 은퇴 또는 퇴직한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경북의 인구감소 지역



1) 만 20~39세 여성 인구[1]를 만 65세 이상 인구[2]로 나누어 낸 지수로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개념을 세웠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보통, 0.5~1.0인 경우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그림 2〉 경산시 인구감소



코로나 여파로 출산을 급감 탓
市 출산장려금 확대 등 안간힘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10여년 연속 증가하던 경산시의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인구 걱정 없는 도시’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샀던 경산시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자료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2010016>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10여년 연속 증가하던 경산시의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인구 걱정 없는 도시’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샀던 경산시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경산 인구는 2010년 24만 명을 돌파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4만6400명, 2014년 25만4000명, 2016년 25만8000명, 2018년 26만1100명, 2020년 26만3700명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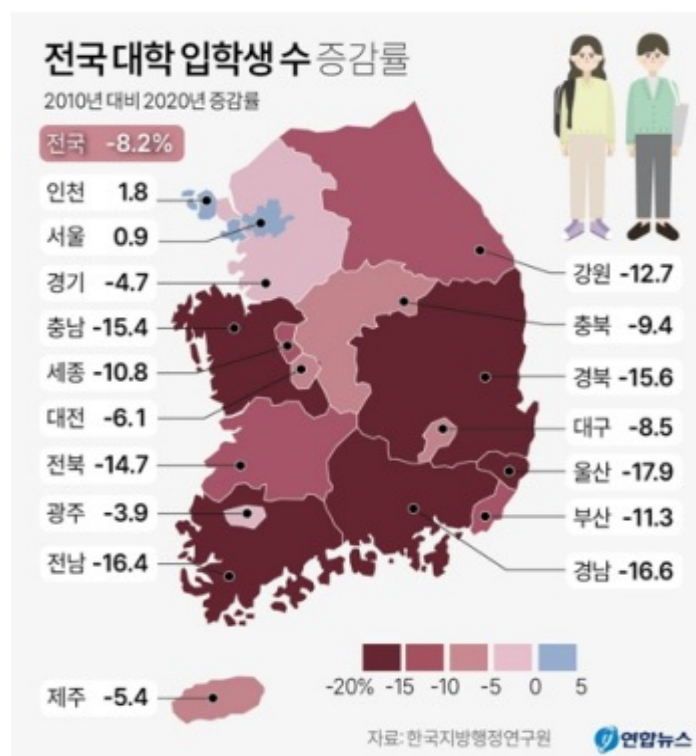
이런 영향으로 경산은 포항, 구미 등 도내 거점도시들이 뚜렷한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나홀로’ 휘파람을 불어 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경산 인구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대규모 택지(중산·백천·대평·계양·사동·하양 지구) 개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하

양·영남대 연장 등 편리한 주거·교육환경 개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산 인구는 2021년 11월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2년 6월 26만7,400명을 기록, 7개월 새 1,1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150여 명씩 줄어드는 셈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산이 크게 감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6개월(1~6월) 동안 시의 사망자 수(1,114명)가 출생아 수(645명)를 크게 앞질렀다.

1.2 지방대학의 위기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

두 번째 배경으로는 전국의 대학 입학생 수의 변화이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증감률이다. 전국 평균 입학생 수는 8% 가량 줄어들었지만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 같은 영호남 도 단위 지역 경우 평균의 약 2배나 되는 15~16%의 감소가 나타났다. 대학은 많은 수의 학생과 교직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주변의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대학가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변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대학주변의 상권은 1층 상가마저도 공실이 많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중심인 자영업의 몰락이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대학의 몰락은 곧 지역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림 3〉 전국대학 입학생수 증감률



박영석 기자, 이경아 인턴 20220511

〈그림 4〉 지역대학의 위기

[표지 이야기]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

반기웅 기자

▶ 목차 ▶ 크게

"갈수록 학생이 줄어요. 피부로 와닿죠. 장사? 안 됩니다. 해마다 매출이 20%씩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앞에서 복사집을 운영하는 김은정(가명·40)씨는 매일 포털에 대학을 검색한다. 인근 대학이 행여 '부실대학'에 지정될까 걱정이 돼서다. 또다시 구조조정으로 학생수가 줄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출력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오프라인 고객이 줄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김씨 정포 앞 대학 재학생수는 600여명 감소했다. 그나마 해당 대학은 50년 넘는 역사와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 덕분에 선방한 축에 속한다. 그럼에도 부실대학 딱지와 인원 감축은 피하지 못했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학교 앞 주택가에 학생 임대인을 찾는 광고판이 걸려 있다. / 반기웅 기자

자료 :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009241642201&code=#c2b

지방대 문제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골자이다. 규제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대학이 양산됐다. 10년 사이(1990~2000년) 대학 정원은 21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늘었다. 부실대학도 생겨났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일반대학 52개 가운데 10개가 폐교하거나 통합됐고, 13곳은 재정지원 제한 등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작용이 생겨나는 데도 정부의 대응은 더뎠다. 정원 자율화는 200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2013년까지 유지됐다.

대학 문제에 처음 손을 댄 건 참여정부이다. 2004년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사립대의 자율적 통폐합을 유도하고 국립대는 학부 정원의 15%를 감축하도록 했다. 통폐합 대학에는 통합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내놴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경쟁을 통해 평가하고 줄을 세운 뒤 평가 하위 15%에 속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고 퇴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²⁾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대학 한 곳

2) 실제로 강릉시 전체 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의 2.5배가 넘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한국은행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강릉지역 대학생 3600명이 감소하면서 연간 소비지출 규모가 278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소득·고용의 9%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강원도 강릉시 관내 대학생의 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600억원이다. 시 전체 예산 10%를 넘는 규모다.

1.3 「대학도시법」시행[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대학도시법」이 작년에 통과되어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³⁾이며, 주요 골자는 2가지이다. 첫째 기존에 산업단지에만 허용하던 산학융복합지구 대상을 지역의 대학캠퍼스로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형 공장을 대학 캠퍼스 내에 유치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지역 대학 내에 많은 기업과 공장일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역대학들은 우수 인력과 기업 간의 연결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5〉 강원대학교 산학단지 계획안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9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1. 4. 14., 2011. 7. 25., 2011. 8. 4., 2014. 1. 14., 2015. 1. 6., 2015. 1. 28., 2015. 12. 22., 2017. 1. 17., 2019. 1. 15., 2020. 3. 31., 2021. 11. 30.>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4. 6. 3., 2015. 1. 6., 2015. 1. 28., 2015. 12. 22., 2017. 1. 17., 2020. 3. 31., 2021. 11. 30.>

2. 경산시 현황

2.1 경산시 인구현황

- ◆ 경산시 인구, 고령화⁴⁾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현재 경산시의 인구는 279,303명이다.(2022.09.30 현재)
- ◆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은퇴자의 전입 등으로 경산시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산시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 ◆ 경산시의 고령자(65세 이상)는 2012년 30,060명에서 2021년 47,017명으로 56.4% 증가했다. 연평균 5.6%의 높은 증가율이다. 60세 이상의 노령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

경산시 고령화 지표

구 분	고령자 증가율 (2012~21 평균)	노령화지수	고령화율	노년부양비	비 고
경산시	5.6	152	17.5	24.7	주민등록 인구
전 국	4.8	139	16.5	23.0	kosi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북의 경산시 또한 인구가 감소세에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자 증가율, 노령화 지수, 고령화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2 경산시 대학 현황

경북 경산시는 28만 인구에 대학이 무려 10개나 존재하고 있어 가히 대학도시라고 불릴만한 곳이다. 등록된 학생 수는 약 11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물론 이 11만 여명의 등록주소지는 경산시가 아니고 인근 대구광역시 또는 타 지역의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경산시는 시 규모에 비해 많은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그 장점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림 6〉 경산시 관내소재 대학 리스트(사이버대학교 포함)

관내소재대학	• 1.경일대학교	• 2.대경대학교	• 3.대구가톨릭대학교	• 4.대구대학교	• 5.대구의대의대학교
	• 6.대신대학교	• 7.영남대학교	• 8.영남신학대학교	• 9.영남외국어대학	• 10.호산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영남사이버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4)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됩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정책 제안

이러한 배경 하에 경산시는 10대의 대학이 존재하는 강점을 살려 28만의 인구와 함께 상생하는 대학도시를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일회성으로 사용된 바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1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행사를 추진

- 지방대학의 특성상 부지가 넓고, 주차 공간 및 유희부지 여유가 있음
- 대학 내 운동장, 공연장, 강연장 등의 시설이 평균 이상
- 대학축제와 지역축제를 구분지을 필요는 없음

3.2 중·장년층의 대학도시 입주기업 재취업 제도화

-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일자리문제를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노력
- 학생뿐 아니라 중장년층 취업을 위한 교육현장으로 변화

3.3 지역 내 대학을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대학으로 탈바꿈

-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민들에 교육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의 역할은 대학에서만 가능
- 지역민들에게 모교라는 애착심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생할 수 있음

※ 지역 내 대학이 비교적 외곽에 위치해 있어, 활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교통 불편 극복을 위해 버스노선 재편 및 대학의 셔틀버스 증원이 필요함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인구소멸의 위기는 경북뿐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다. 지방대학의 위기상황 방치는 결국 폐교와 인구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내 대학의 폐교는 지역차원의 경제에도 큰 손실이며, 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있기에 지자체와 지역 내 대학 간의 적극적인 생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 내에 기업과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일명 「대학도시법」시행과 맞춰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대학과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고급 연구 인력에 의한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이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경산의 발전가능성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산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산학협동조례(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 운영조례⁵⁾)를 제정한 바가 있으며, 운영은 물론이고 산학협동의 주도적 중개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 지역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학은 경산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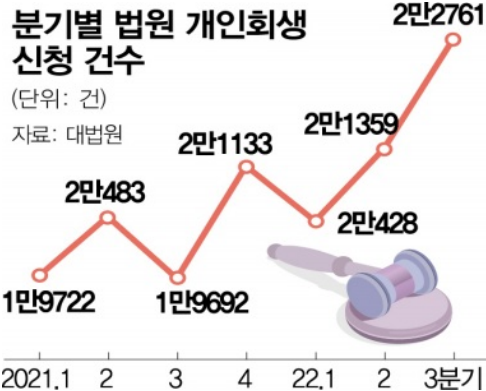
청소년 금융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큰 변화

임현규 지역당원

1. 문제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많은 인구가 빚에 허덕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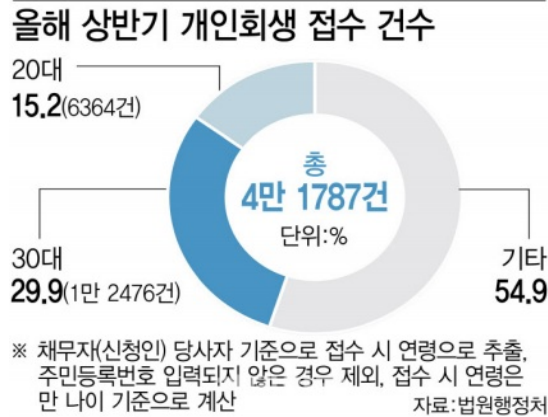
〈그림 1〉 분기별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



위 자료와 같이 분기별 법원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1년 1분기 19,722건, 2021년 2분기 20,483건, 2021년 3분기 19,692건, 2021년 4분기 21,133건, 2022년 1분기 20,428건, 2022년 2분기 21,359건, 2022년 3분기 22,761건으로 소폭 감소한 분기도 있지만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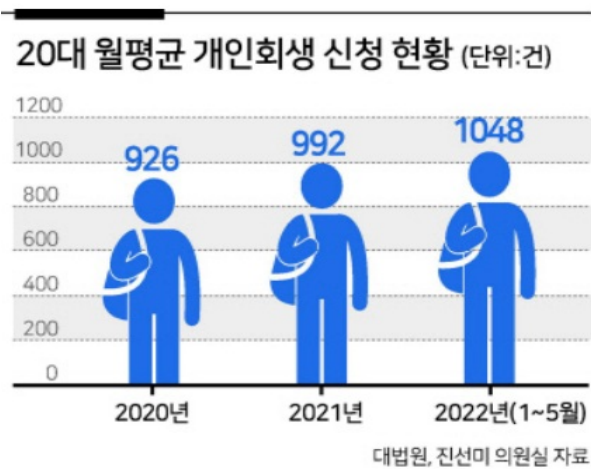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빚투나 영끌같은 잘못된 경제습관을 통해 많은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접수 건수



올해 상반기 조사된 개인회생을 한 사람들 중 20대와 30대가 신청한 비율과 건수이다. 20대가 전체 4만 1,787건 중 15.2%로 6,364건 30대가 29.9%로 12,476건으로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대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 현황



위 자료는 20대의 월평균 개인회생 건수이다. 2020년 월평균 926건, 2021년 월평균 992건, 2022년(1월~5월) 월평균 1,048건으로 20대들의 개인회생 신청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급작스러운 문제가 아닌 이전부터 꾸준히 커지고 있는 문제였다.

〈그림 4〉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2022년 6월 말)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2022년 6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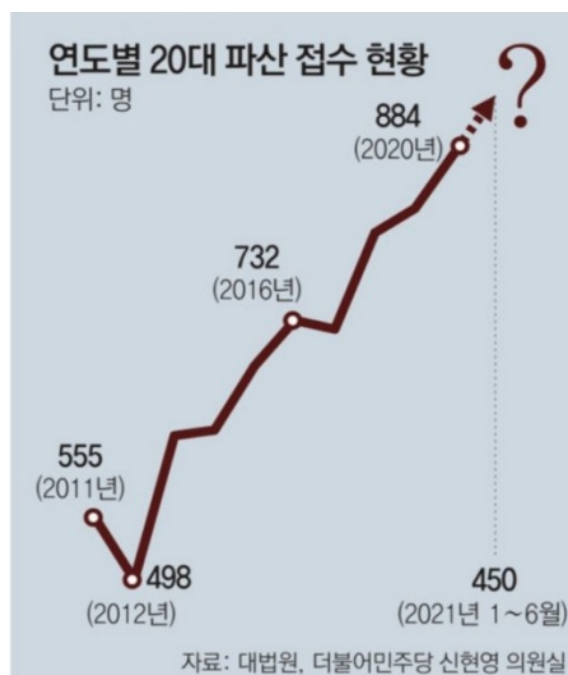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백 만원)

등록금액	인원 수	
		비중 (%)
500만원 이하	35.2	41.8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7.9	21.2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4.3	17.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6.9	8.2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7	6.8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	3.6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1	1.3
3억원 초과	0.2	0.2
전체 인원수	84.3	
평균 금액	15.8	

* 출처: 신용정보원,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20대 채무불이행자들의 대출금 구간별 비율이다. 500만원 이하가 41.8%, 500만원~1,000만원 이하가 21.2%, 1,000만원~2,000만원 이하가 17%, 2,000만원~3,000만원 이하가 8.2%, 3,000만원~5,000만원 이하가 6.8%, 5,000만원~1억원 이하가 3.6%, 1억원 초과가 1.5%로 5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가 4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을 빌려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보다 소액대출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경우가 훨씬 많아 많은 청년들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연도별 20대 파산 접수 현황



연도별 20대 파산 접수 현황을 보면 2011년 555명, 2012년 498명, 2016년 732명, 2020년 884명으로 집계될 때마다 20대의 파산 접수 현황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개인회생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파산 접수를 하게 되는데 20대부터 이러한 회생불능 상태에 접어드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2. 문제 원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학창 시절에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문제가 크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가르쳐 주었으면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교육이라는 것을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교육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것의 중요성을 몰라 배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이 이런 상황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금융교육을 해주고 사회에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장기적으로 사회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림 6〉 초·중·고교생 경제이해력 평균점수



이미 일부 청소년들은 금융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실제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인지는 미지수이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집중해서 재미있게 듣고 싶은 교육을 하여야 금융교육의 의미가 있다. 2020년 전국 초중고 학생 15,7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생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53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오히려 고등학생과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경제이해력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변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수학이 해도는 최상위권이지만 금융이해도는 OECD 평균인 64.9점에도 못 미치는 62.2점이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선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에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림 7〉 경제인식·이해도가 낮은 이유





한국은행이 청소년 경제캠프에 참가할 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들이 경제이해도가 낮은 이유로 제일 많이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경제 교육을 접할 기회의 협소였다. 무려 42.4%의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답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골랐다. 청소년들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인데 이것은 사회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청소년에게 경제는 꼭 필요한 것이고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와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 내용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것을 이유로 고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실제 금융교육을 해도 청소년들이 듣기 어렵고 지루해서 다시는 듣기 싫은 교육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금융 수준을 올리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또 듣고 싶은 그런 금융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교육을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맞춰진 교육을 하지 못하니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3. 해결 방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리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필요한 실무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일단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교육 분야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하여 청소년에게 맞춤교육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말 듣고 싶은 교육이어야 흥미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만 사용하여 수업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집중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나 종사자였던 전문가가 직접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교육을 하면 잘못된 금융상식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하고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발행해서 배부하면 청소년들의 수업 참여도가 많이 늘 것이다. 그리고 금융교육 주제는 지금 하는 교과서 위주의 딱딱한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사용할 실무적인 부분을 학습시켜야 한다. 타지에 가서 얻는 자취방의 임대차 계약이라던가 실비보험 가입을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이라던가 자동차 계약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직접 생활과 가까운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 기존의 교육보다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투자교육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자방법을 제대로 교육하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최근 3년간 여신사 2030 가계대출 신규취급 추이


최근 3년간 여신사 2030 가계대출 신규취급 추이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원)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20대 이하	250억	290억	526억
	30대	1531억	1939억	3429억
	합계	1781억	2229억	3955억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20대 이하	5857억	9108억	1조 1581억
	30대	1조 6516억	2조 3626억	3조 696억
	합계	2조 2373억	3조 2733억	4조 2277억

자료: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여신사 2030 가계대출 신규취급 추이를 보면 청년들의 대출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택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집을 무리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투자방식으로 대출을 해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금융교육의 부족함 때문이다. 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 투자하면 이런 상황에 올 수 있다. 이런 걸 교육을 해줘야 각종 금융적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을 받아 경제 관련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맞이하게 될 다양한 금융적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학창 시절에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금융과 관련된 학습을 하면 미래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게 된다면 지자체나 각종 기관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나은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아시아타임즈 | 2022.11.07.

카카오뱅크, 청소년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광성고에서 청소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교육 활동에는 광...



 조선비즈 | 2022.10.27. | 네이버뉴스

신한카드, 자립준비청년 금융자립 지원 교육 실시

한편 신한카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금융, 소비, 신용 등 금융교육, 느린 학습자를 위한 생활경제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및 금융범죄 피해 ...



KB손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 경제금융교육 진행



[사진 KB손해보험]

기 기호일보 | 2022.11.07.

인천 중앙도서관 12일 '실용 경제교육을 통한 재테크' 강연

'실용 경제교육을 통한 재테크'를 주제로 실용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경제 자유 획득, 재무관리와 재테크가 갖는 차이점, 경제교육 기초(금리, 저축)를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청소년문화공간...

지금도 이런 기관이나 지자체, 기업 등에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경제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교육과 청소년과 청년이 원하는 교육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금융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지자체나 기업들은 더욱 많은 프로그램과 원하는 교육을 찾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런 경제교육을 받으면 미래세대의 청년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청소년 금융교육은 꼭 필요하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아파트 난개발 방지 공약

- 단독주택 수당제도와 빈집은행 프로젝트 실시

강수훈 광주 광주시의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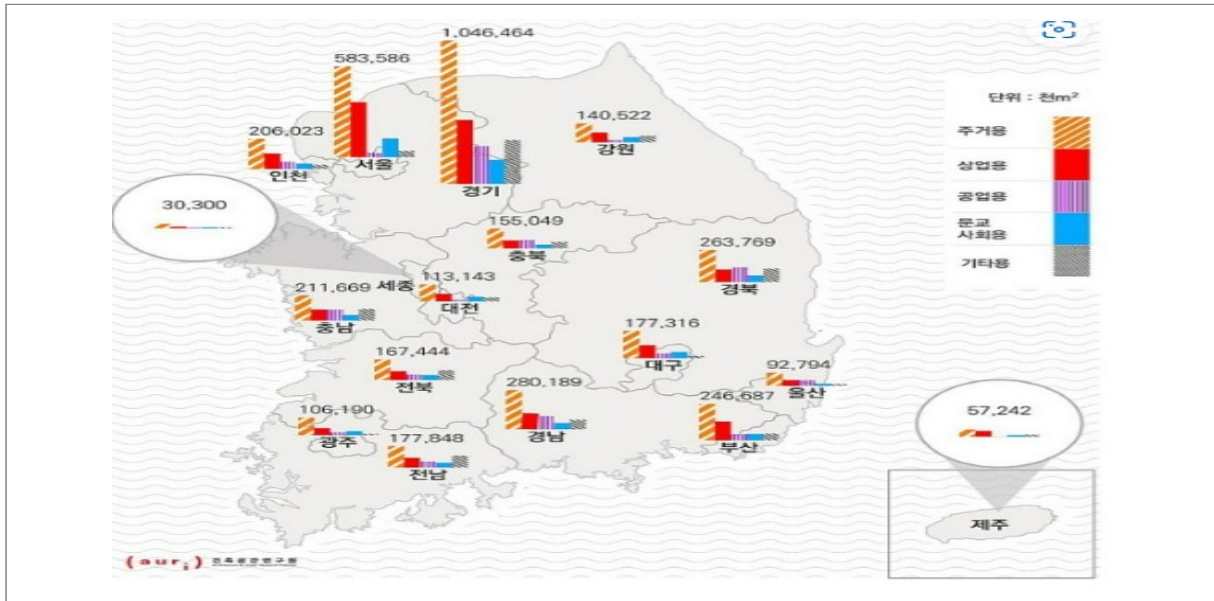
I. 문제의 제기

1. 광주는 아파트 왜 아파트가 많을까?



2.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 주거비율이 높은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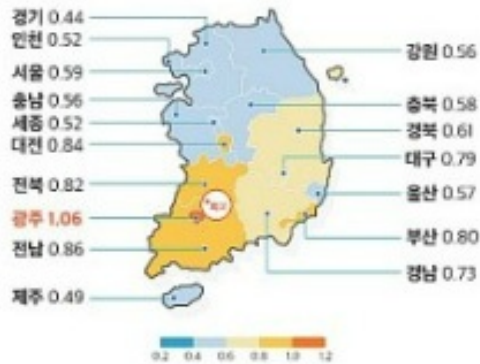
- 인구 10명중 7~8명 아파트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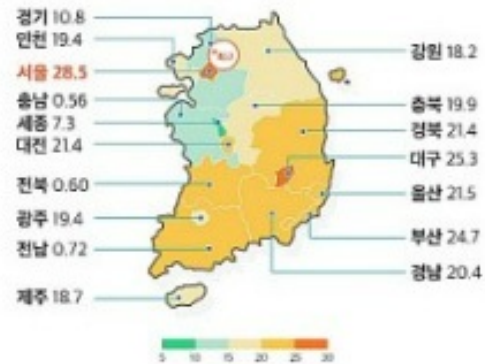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물 현황 발표(2022.03.08.)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동수가 전년보다 0.5%(3만8천998동) 증가한 731만 4,264동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40억5천624만3천㎡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건축물은 전년보다 1만3천745동(4천577만5천㎡) 증가한 203만5천525동(18억3천607만4천㎡), 지방은 2만5천253동(4천857만9천㎡) 증가한 527만8천739동(22억2천16만8천㎡)이었다. 용도별 면적으로는 주거용이 46.4%(188만2천918㎡)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상업용(22.1%·89만4천675㎡)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가 11억9천186만3천㎡(63.3%)로 가장 넓었다. 단독주택(3억3천194만1천㎡ 17.6%), 다가구주택(1억7천72만㎡ 9.1%), 다세대주택(1억3천59만6천㎡ 6.9%), 연립주택(4천347만6천㎡ 2.3%) 순이었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전남이 44.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아파트는 세종 84.9%, 광주가 75.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전국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로 서울이 28.5%로 가장 높았다. 광주는 19.4%, 전남은 0.72%였다. 광주는 의료시설 1인당 면적이 1.06㎡로 전국에서 가장 넓었다.

지역별 1인당 의료시설 현황



지역별 노후 건축물 현황



규모별 건축물 현황

가장 넓은 건축물 TOP5



품도별 가장 넓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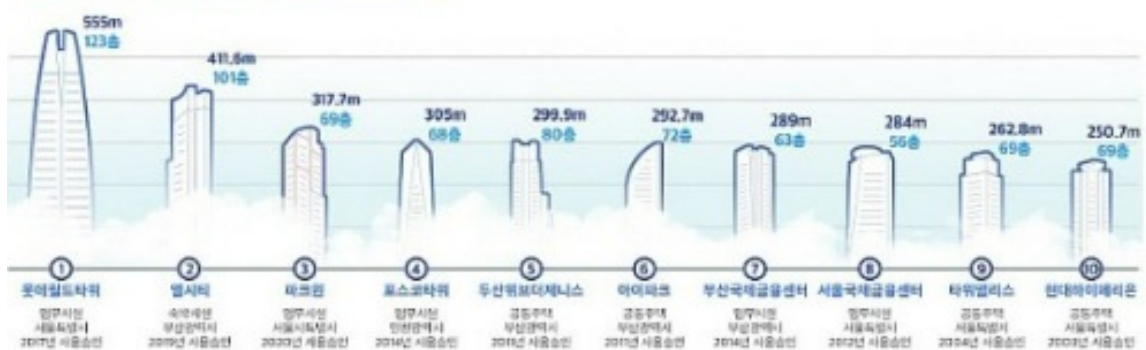


전국 건축물 층수 현황

최근 5년간 전국 건축물 평균 층수



가장 높은 건축물 TOP10



II. 문제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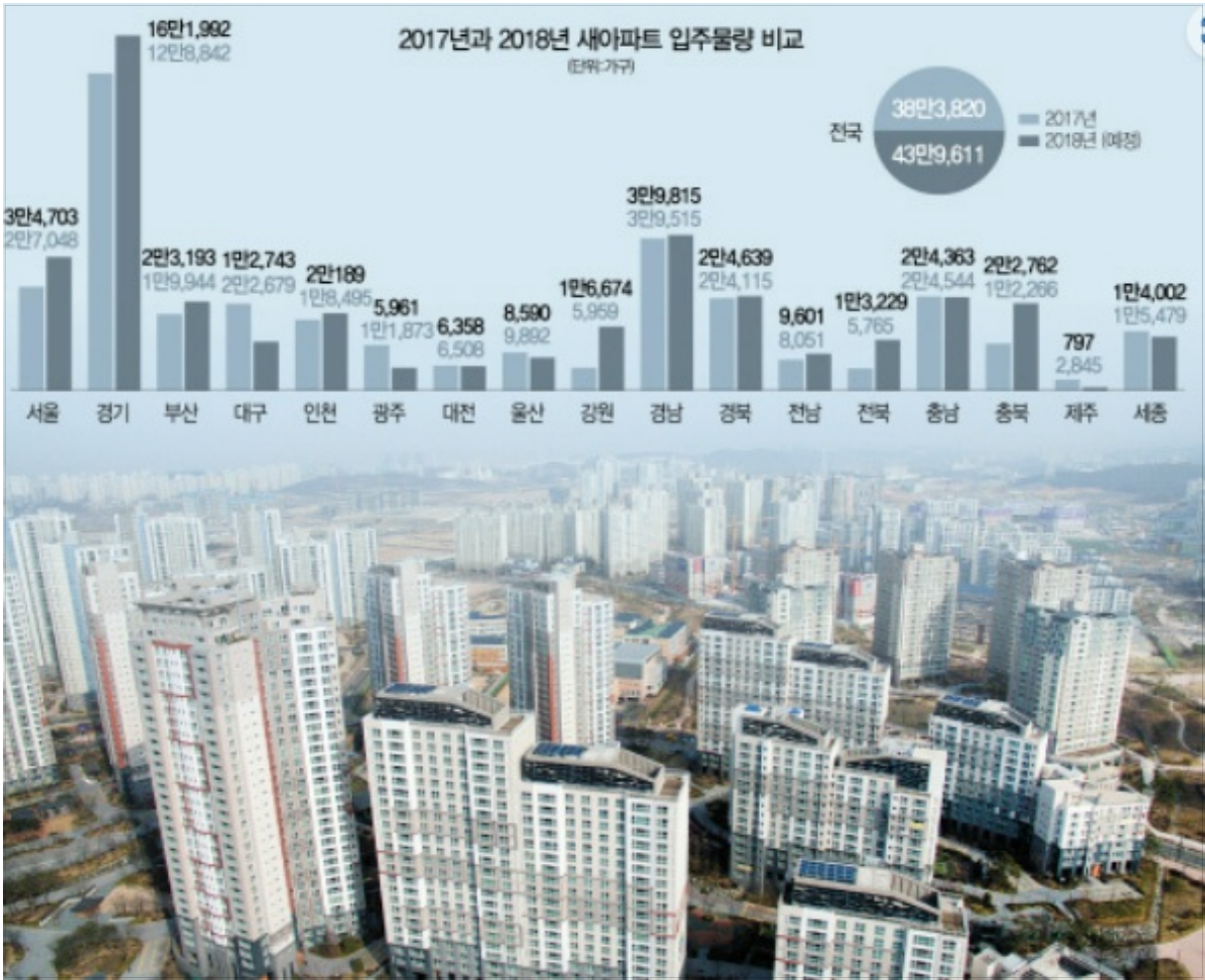
1. 인구소멸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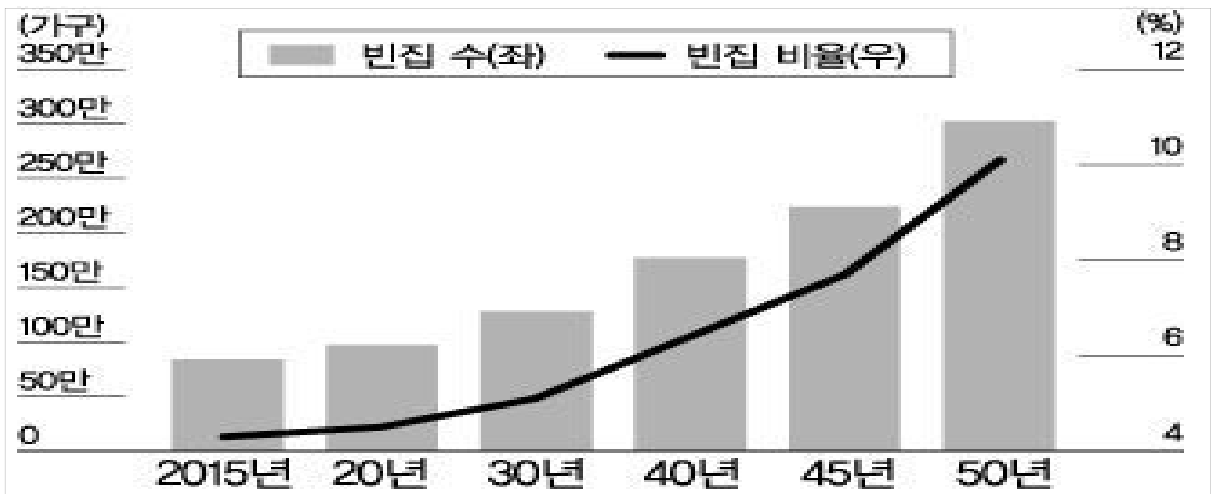
2. 인구절벽 연도별 추이



3. 빈집쇼크



4. 전국 빈집 수 예측량과 비율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III. 문제의 해결

1.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단독주택, 마을공동체 선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
- 아파트에서 살면서 “높게” 올라가지 말고, 단독주택에 살면서 “넓고” 자유롭게 살자!

2. 단독주택 수당제도 도입

-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수당 도입

3. 빈집은행 프로젝트

빈집 은행으로 가능성을 품다!

곽민재(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팀장)

빈집은 지역 쇠퇴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최근 5년간 지역의 빈집은 가파르게 증가하며,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도 빈집 쇼크를 겪고,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빈집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또한 빈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생기면 원도심의 인구가 신도심으로 유출되고, 원도심의 인구 감소는 빈집을 발생시킨다. 빈집은 군집성과 확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치할 시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한다.

빈집으로 인한 문제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빈집 은행'을 제안한다. 빈집 은행은 빈집의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이다. 빈집 소유자가 매매 또는 임대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면, 행정 이 중개자가 되어 빈집 사용자와 연결해준다. 빈집 은행은 빈집의 매수와 매도를 도와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빈집 은행은 우리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앞서 경험한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일본은 '아키야(空家)뱅크'라고 불리는 제도를 마련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빈집 은행은 중앙이 아닌 지방 정부에서 부터 출발했다. 빈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지방의 중소도시가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지자체의 60% 이상이 빈집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빈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빈집 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매매자의 세금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낮추고,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빈집 이용자가 빈집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빈집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빈집을 활용한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청년 창업 공간, 예술가들의 작업·전시 공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도 빈집 은행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빈집을 마을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마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빈집 은행을 설립했다. 미추홀구의 빈집 은행은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집 활용 계획을 제안하면, 미추홀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추홀구의 빈집은 청년 주거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스마트 도시농장 등으로 조성되었다. 청년 주거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는 지역 청년 및 공동체의 활동과 교류를 보장한다. 스마트 도시농장은 중년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추홀구의 빈집 은행은 빈집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빈집은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다. 더 이상 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니다.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지역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유통망과 시장성을 갖춘 빈집은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빈집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빈집의 가치가 다양해질 때, 지역은 훨씬 매력적이고, 힙(Hip)해질 것이다. 빈집을 나와 우리의 활동 거점이자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어보자. 빈집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IV. 문제의 보완

1. 학동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트라우마 도시 극복

[문제점 분석 및 안전한 아파트 도시 명예 회복]



2. 빈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광주광역시 자치구 입장 (약 2,000가구)

- 1년 이상 비어있는 주거공간
: 통계청 기준 (약 35,000가구)
- 공공 임대주택 포함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의의 도시

- 광주에서 인권 찾기

이명노 광주 광주시의회 의원

제1장 연구 배경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장소이자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광역시도 지금도 정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며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지향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또한 인권 관련된 사건, 사고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로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이 의지하고 보호를 받을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광주 예술계에 때 아닌 미투(me too)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이유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예술계 내의 인적 네트워크와 그로부터 가해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예술계, 정계, 공직계의 인물들이 서로를 감싸주는 방식으로 부당함을 묵인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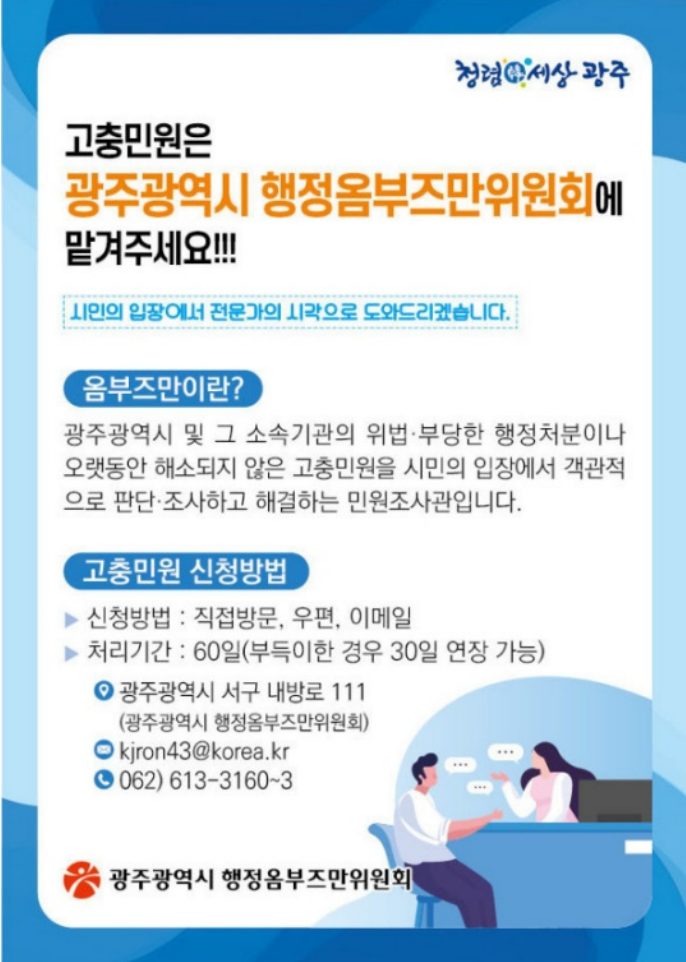
이에 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기보다 기존의 조례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광주와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1절 문제 제기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도 인권 옴부즈만 제도가 존재한다. 행정학사전에서 정의하는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행정 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체계 내에서 옴부즈만을 통해 부당한 상황에 처리를 요청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광주광역시의 옴부즈만은 단 1명으로 구성되며 시 청사 1층 로비에 위치한 상황이다. 과연 모두에게 노출되며 많

은 사람들이 지나는 로비에 있는 옴부즈만 사무실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이 몇이나 될지, 해당 사무실에 찾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옴부즈만으로 배치된 인력보다 옴부즈만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나마 수월한 실정이다. 덧붙여 행정옴부즈만으로 국한되어 편성된 인원 1명마저도 법률적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실제 사건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청정·세상 광주

고충민원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란?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 ▶ 처리기간 : 60일(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 kjon43@korea.kr

☎ 062) 613-3160~3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그림 2〉 광주광역시청



제2절 현황과 실태

〈그림 3〉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관련 조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7. 23.] [조례 제5752호, 2021. 7. 2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행정옴부즈만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5.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고,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6명으로 한다.

② 상임옴부즈만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 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상임옴부즈만 임무 등) ① 상임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상임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옴부즈만 중 선임자 순서로 위원장을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옴부즈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6조(옴부즈만의 해촉)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옴부즈만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의 결정, 감사 요구에 관한 사항
 2.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2. 시에서 자치구 위임한 사무의 경우 자치구 본청 및 소속기관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사람

제10조(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위원회의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자문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 민원의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수임,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예외)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9조(결과 조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하 “관계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와 통보) ①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나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직권 조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제 옴부즈만 관련한 내용은 「광주광역시행정옴부즈만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만 존재할 뿐 상임 옴부즈만은 몇 가지 조항으로만 보장하고 있다.

제2장 정책 제안과 결론

제1절 정책 제안

이에 옴부즈만 위원회 외에도 상임옴부즈만의 운영과 임명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된 조례를 신설하거나 옴부즈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제안한다. 덧붙여 옴부즈만 사무실을 청사 로비가 아닌 외부 및 별도의 공간에 위치할 수 있게 규정을 명시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배치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 인원도 상임 1인이 아닌 최소한의 상담과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인원이 배치되게끔 만들어 광주광역시 행정체계에서 생기는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끔 해야 한다.

제2절 결론

시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문제를 비롯한 부당함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작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금세 주권자들에게 전이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현수막으로 바라본 현실과 탄소중립의 실천적 전략

강민욱 대구 남구의회 의원

1.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현안 문제

기후위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학자들이 제기한 기후 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2022년도인 현재에는 ‘기후위기’라는 이제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경향신문의 기사¹⁾에서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을 필두로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총 상위 10개의 국가가 나타나 있다. 이중 대한민국은 전 세계배출량 비율이 1.66%를 차지한 10위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별 순위

2021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별 순위

단위: 톤, () 안은 전 세계 배출량 비율 %
자료: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



1) 박은하 기자, “영국, 덴마크 등 기후위기 기금 내겠다는 국가들”, 경향신문, 2022.11.07.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각 지자체에서 해당 법률에 맞게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법률은 제정되었고, 시민의식에도 사회문제로 남아있으나 정책적, 실천적 전략과 과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적 전략과 정책을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사용된 현수막을 기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지자체의 현실(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의 현실은 어떠한지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담당과의 자료요청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래의 사진에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환경과에 요청한 탄소중립 시행 사업에 관한 자료다.

〈그림 2〉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노력



■ 자원·재생 분야

- GS편의점과 연계 : 편의점에서 개인 텀블러 또는 장바구니 사용 후 SNS에 업로드 시 멀티탭 또는 재활용 가방 증정
- 잠자는 에코백 깨우기 : 기부받은 에코백을 전통시장 장바구니로 활용
- 폐현수막 재활용 : 폐현수막 마대 제작 및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폐현수막 처리 비용 절감, 저탄소 생활화 실천

■ 기후변화분야

-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홍보
-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 온실가스 진단 전문 컨설턴트 양성
- 각종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홍보

자료 : 대구광역시 남구청

자원·재생 분야에서는 편의점과의 연계, 기부 받은 에코백을 전통시장 장바구니로 다시 활용하는 사업,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정도이며, 기후변화분야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에너지절약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각종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홍보이다.

결국 대구광역시 남구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상당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후위기 속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지자체 스스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바로 폐현수막 재활용 부분이다.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은 폐현수막을 재가공하여 폐현수막 마대 제작,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처리비용 절감 및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한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결국 폐현수막을 재가공하여 사용하

더라도 다시 그 물품을 버릴 경우 폐현수막과 동일한 소각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되기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현수막의 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 기획조정실에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자.

〈그림 3〉 ‘2020~2022년 현수막 예산 현황 보고’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2020~2022년 현수막 예산 현황 보고

2022.8.29(월)

■ 현수막 예산

※ 작성기준: 지출내역,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단위: 천원)

부 서	2020년	2021년	2022년 (예상기준)
합 계	157,470	127,808	36,887
기 획 조 정 실	13,612	4,482	1,326
행 정 지 원 과	37,659	17,937	2,887
미 래 안 전 과	1,384	4,747	560
평 생 교 육 홍 보 과	16,214	10,551	4,871
문 화 관 광 과	1,673	1,501	261
민 원 정 보 과	150	110	0
세 무 과	1,326	1,423	460
행 복 정 책 과	5,405	9,740	1,762
복 지 지 원 과	1,363	1,645	603
생 활 보 장 과	200	274	50
시 장 경 제 과	10,243	7,630	3,043
녹 색 환 경 과	10,355	15,119	1,163
위 생 과	915	4,479	418
도 시 재 생 과	1,486	5,240	2,328
공 원 녹 지 과	5,905	3,773	1,154
건 축 과	193	55	0
건 설 과	3,946	1,912	858
교 통 과	15,137	9,157	2,338
토 지 정 보 과	775	330	132
의 회 사 무 과	1,197	955	50
보 건 행 정 과	5,129	4,627	1,328
건 강 증 진 과	3,837	5,284	2,314
대 덕 문 화 전 당	5,836	4,357	2,937
동 행 정 복 지 센 터	13,530	12,480	6,046

자료 : 대구광역시 남구 기획조정실

대구 남구 기획조정실에 요청한 자료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현수막 예산 현황이 나타나 있다. 2022년까지 많은 현수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서부터 급격하게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나 모임 등이 취소되며 함께 현수막에 사용된 예산도 줄어들었다. 그럼 일반적으로 1년간 현수막에 사용된 예산을 생각했을 때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원 정도이다. 현수막 1개를 약 5만원에 제작 및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약 3,000개의 현수막이 한 지자체에서 제작되었으며, 일일 8개 정도의 현수막이 제작되어 사용되어진 것이다.

현수막 단 하나의 물품으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약 3,000개의 현수막이 소각된다는 것,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수막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는 엄청난 탄소중립의 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많은 사업들, 물품들 중 단순히 현수막을 바라본 현실만 보더라도 개선해나갈 사항들이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3.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 구체적 정책과제

이제는 국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적 전략을 구상해야한다. 단순히 현수막이라는 물품에서도 나타났듯이 탄소중립과 반하는 지자체의 사업과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책들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수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의 비전과 구체적 정책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현수막 자체를 대체할 홍보수단을 찾는 것이다. 현수막을 사용하는 목적은 대부분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수막 개수를 줄이는 것부터가 탄소중립의 실천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현수막을 대체할 홍보수단인 디지털 앱 혹은 종이나 홍보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분해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사용하려면 분해가 가능한 재질인 생분해성 현수막(식물성) 혹은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분해가 될 뿐 아니라 소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수막을 통해 지자체의 현실과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나, 현수막만이 아닌 선거운동 당시 흔히들 사용하는 피켓, 공보물, 명함, 차량 모두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남구(가, 나, 다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청년의원을 보면 재생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보물과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였고 일반 플라스틱 피켓 대신 종이를 압축시킨 친환경

피켓을 사용하였으며, 명함 또한 재생지로 만들고 선거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 단점은 있다. 기존의 현수막과 명함 등을 직접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일반적 가격보다 1.2배~1.5배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으로 변경할 경우 세금을 아끼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피하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바라본다면 기존의 현수막 업체들이 현재에서 안주하지 않고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인식을 하고 새로운 친환경 현수막 업체들이 생겨나며 경쟁을 통해 다시 안정화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친환경 현수막 혹은 종이, 명함 등이 경쟁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장의 예산투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단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4.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시작은 현수막이었으나, 지자체의 인식변화와 정책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광역시 남구주민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지자체의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변화에도 자극을 주고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적 역량을 높이고 정책을 시행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법제화가 된 「탄소중립기본법」처럼, 한 지자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활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전략과 매뉴얼이 탄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기후위기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금, 작은 변화가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달성 산업단지 형성과 의료복지의 인과적 필연성

전유진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1. 달성산업단지 성장과 도시형태 전환

1) 달성산업1단지

달성산업1단지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한 대구 성서, 울산, 부산 등의 경남지역,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로 경북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전국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각종 산업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전망을 밝게 내다보았다. 그러나 실제 자동차 부품기반 R&D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코로나 등 경기 악화와 자동차 부품이 차세대 전기모터사업 등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산업단지가 쇠퇴함에 따라 도시인구는 물론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기반 산업이 기반이다 보니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가 주민들의 70%를 이루고 있어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적극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달성산업2단지

달성산업2단지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단지로 조성하려다 1997년 외환위기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대구도시공사가 부지를 인수하여 조성하였다. 현재 차세대 배터리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년 대구시 국비사업으로 전기차 모터사업을 건의한 상태이다. 약 3,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형성되어 있다.

3)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구지면, 현풍읍 일대에 조성되었다. 2009년 국토부로부터 국가 과학단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시작되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국립물기술인증원, 자율주

행자동차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기차모터혁신센터 등 전기차 모터밸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경제자유구역청(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달성군 유가읍, 현풍읍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복합형 산업지구이다.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DGIST, 국립대구과학관, 현대로보틱스, 현대 모비스 등 각종 기업 연구기관과 연구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혁신도시와 비슷한 형태로 달성군을 크게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할 때 남부권에 해당되며, 달성군 인구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장 젊은 도시로 2년 전까지 전국 평균연령이 37.2세, 출산율 1위로 손꼽는 지역이다.

〈그림 1〉 달성 산업단지 현황



2. 달성산업단지형성에 따른 달성군변화

달성군은 산업단지형성으로 크게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뉘게 된다.

또한 주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남부권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에 주거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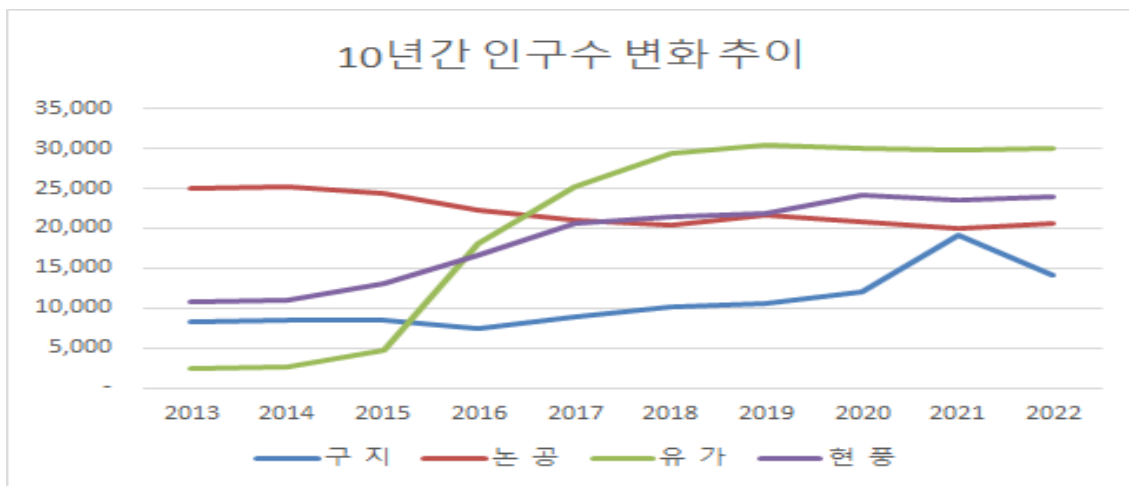
한 상권, 교통, 교육, 복지 시설 등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과 복지 정책 등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1) 인구 변화

〈그림 2〉 인구 변화

	매년 9월30일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구 지	8,194	8,511	8,533	7,529	8,986	10,104	10,496	12,117	19,118	14,151
논 공	24,923	25,208	24,371	22,357	21,051	20,467	21,615	20,928	20,091	20,701
유 가	2,539	2,699	4,816	18,212	25,298	29,342	30,399	29,964	29,717	29,962
현 풍	10,774	11,090	13,094	16,724	20,699	21,464	21,894	24,146	23,520	23,904

〈그림 3〉 10년간 인구수 변화 추이



2) 상권 형성

주 상권은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논공·구지·현풍·유가·옥포 중 유가와 현풍일대에 형성되어 있다. 실제 각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주거와 교육이 유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상권의 중심이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각 산업단지에는 주로 주거의 기능과 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학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교통편 확대

각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교통편이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대구시에서 교통편의 확충에 있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도시형성에 있어 사람을 우선 거주

를 먼저 시키고 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시설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거주를 시키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교통의 불편함으로 실제 다시 대구로 이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교육문제 대두

현재 테크노폴리스는 과밀학급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테크노폴리스내 제3학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4개의 산업단지 중 유독 테크노폴리스에 밀집되어 있다.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문제 해결에 중점이 되고 있어, 정작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및 학업수준이 대구 중심과는 차이가 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적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다. 현재 교육복합센터가 건립되고 있으나, 이 또한 1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기능을 발휘해야 하나, 예산부족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 결과 복합센터가 되었다. 테크노폴리스에서 다시 대구 중심가로 이사를 하는 가장 큰 사유 중 하나이다.

5) 전문의료복지단지의 필요성 증대

달성군 인구의 약 절반이 남부권인 산업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동산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이 없다.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젊은 근로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영유아들의 응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도시설계 당시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병원부지를 업자들에게 저렴하게 분양을 시키고 현재는 병원개설을 두고 주민들과 분쟁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점에 있어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병원 부지에 현재 병원의 입주가 어려운 점, 이를 군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 현 군수가 인근 병원과 함께 임시적인 24시간 응급병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국비로 운영되는 병원인 보훈병원 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대안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3. 달성군에 필요한 전문의료복지단지

달성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풍IC를 끼고 있어 교통의 사통팔달을 손꼽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 경남일대를 인접하고 있으며, 모두 군단위인지라 준종합병원조차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쇠퇴하고 있는 달성산업1단지 일대에 전문의료복합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아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1) 중대산업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의료시스템
- 2) 다양한 세대별 인구구성으로 인한 의료분과 필요성
- 3) 인근지역과 전문의료복지혜택의 공유
- 4) 전문의료복지단지 형성에 따른 2차 주변환경 성장 가능성
- 5) 전문의료복지서비스 지역관광 상품화

무엇보다 지역내에 종합의료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혜택에 대한 기대효과도 누릴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를 통한 단지조성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있어 응급 전문의료시스템의 구축으로 산업단지를 더욱 확충시킬수 있는 효과는 물론 쇠퇴하는 1차 산업단지에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함으로써 다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2차 발전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 1차적인 기본 목적 달성외에 파생적으로 어떠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도시의 성장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정주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수정·보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외국인 거주민의 지역활동 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방안

최영은 지역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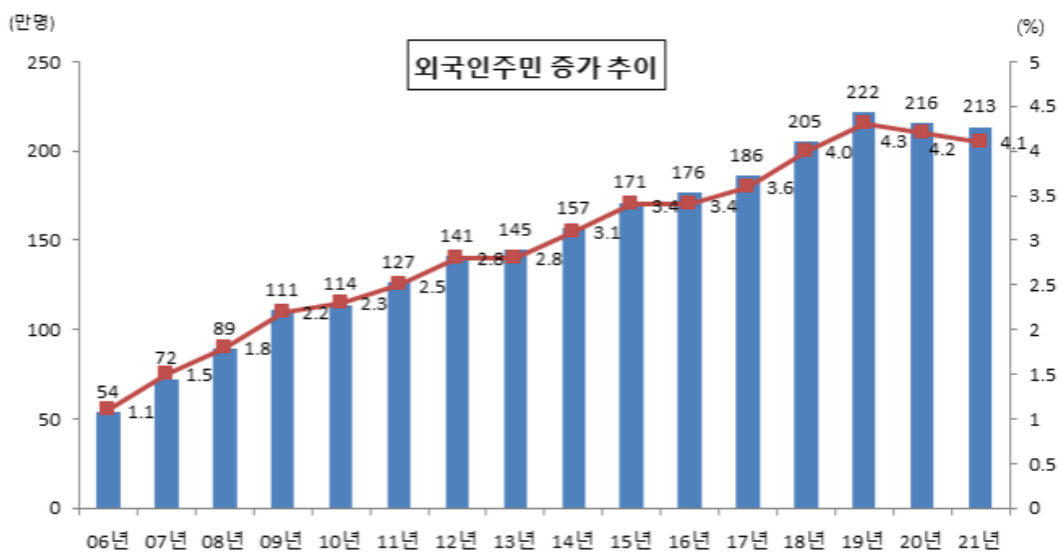
1. 서론

- 다름이 불러 일으키는 고정관념

길에서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가진 사람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뭔가 곤란한 게 있나? 나에게 길을 물어보진 않을까? 와 같은 질문이 먼저 생각나지는 않은가.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외국인들은 으레 여행객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주치는 외국인중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어느 정도 일까.

〈그림 1〉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



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은 2,134,569명으로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였을 때 충남(2,175,960명)과 전북(1,787,053명) 사이인 8위 정도에 해당된다.

대학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메꾸었고, 제조업, 광업, 건축업 등의 소위 3D업종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였다.

〈그림 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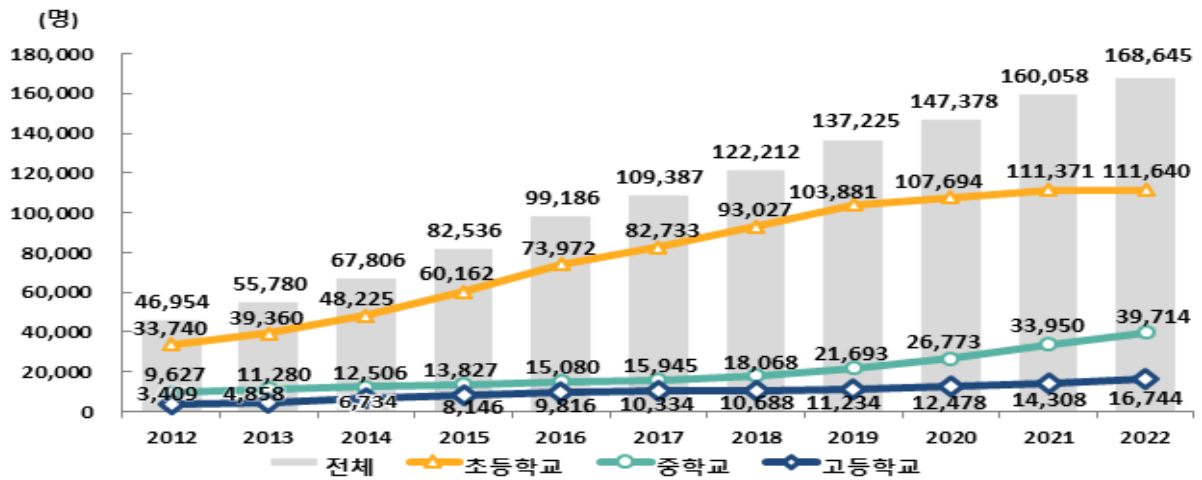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 합계(①+②+③)			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② 한국 국적 취득자	③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1년	2,134,569	1,090,073	1,044,496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210,880	273,722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51.1%)	(48.9%)	(77.3%)	(18.5%)	(8.2%)	(7.3%)	(17.3%)	(26.0%)	(9.9%)	(12.8%)
'20년	2,156,417	1,117,399	1,039,018	1,695,643	455,287	173,756	142,569	345,110	578,921	199,128	261,646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51.8%)	(48.2%)	(78.7%)	(21.1%)	(8.1%)	(6.6%)	(16.0%)	(26.8%)	(9.2%)	(12.1%)
증감	Δ21,848	Δ27,326	5,478	Δ45,676	Δ60,112	876	14,038	23,471	Δ23,949	11,752	12,076
	(Δ1.0%)	(Δ2.4%)	(0.5%)	(Δ2.7%)	(Δ13.2%)	(0.5%)	(9.8%)	(6.8%)	(Δ4.1%)	(5.9%)	(4.6%)

자료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만 5,676명(2.7%↓)으로 감소한 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1,752명(5.9%↑) 증가하였고, 외국인주민 자녀는 1만 2,076명(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적을 가진 체류 외국인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외국인주민 학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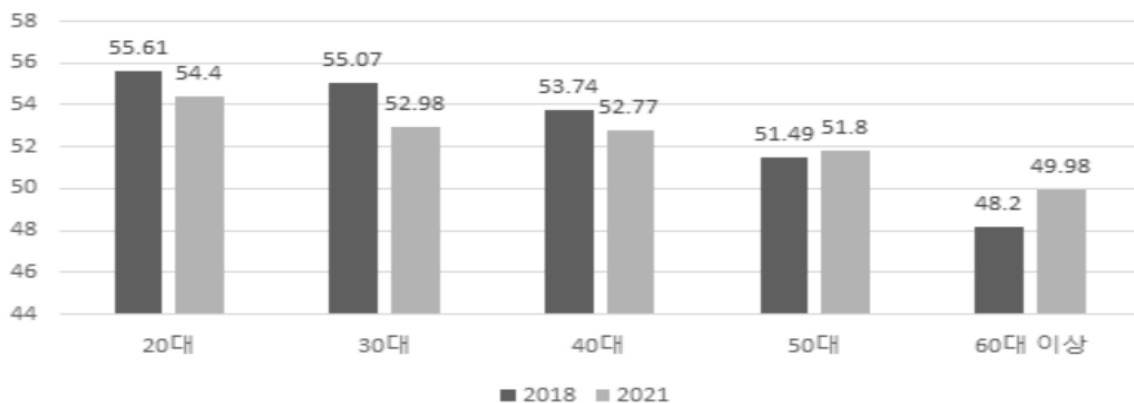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교육부, 2022.8.30.

이처럼 국적을 가진 체류 외국인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 외국인들의 거주 지역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역시 우리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족 형태가 되었다.

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올해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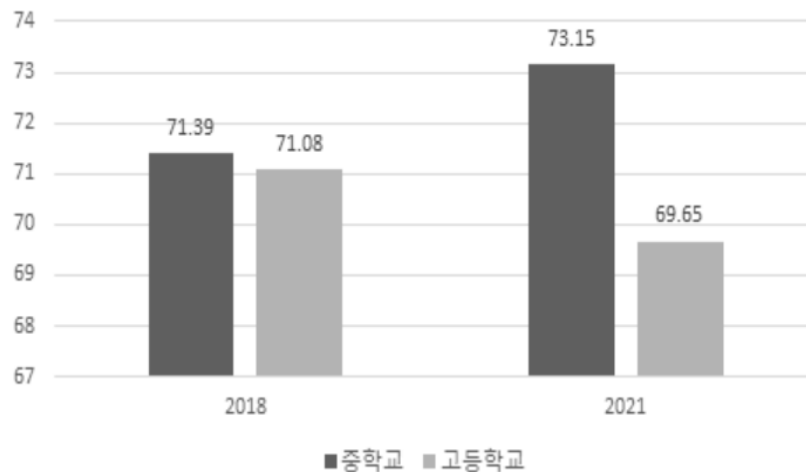
〈그림 4〉 성인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점)



자료 :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22.3.30.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장과정에서의 높은 다문화수용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청소년 학교급별 다문화수용성 격차(점)



자료 :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22.3.30.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하였을 때,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초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고했듯이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초기 확산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본론

- 인식개선 방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나가면 좋을까.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참여율 및 참여여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교육 참여자의 점수가 미참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상에서 이주민과 자주 교류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교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광주 광산구 - '외국인 명예통장'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최근까지 다른 지역구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사례는 외국인 주민을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는 '동화주의' 사업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은 지역 행정시스템과 외국인주민과의 가교 및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다.

- 개선점

행정시스템과 외국인주민들과의 소통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역 정주민들과의 소통·교류의 기회를 더 마련한다면 더욱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다.

- 제안

지역 내 자율방범대, 봉사단 활동과 외국인거주민 방범대, 봉사단 활동을 연계하여 협력관계 체제를 확립한다. 외국인거주민들로만 구성된 방범대원, 봉사단 활동을 더욱 확장시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도록 장려한다면, 도움을 받기만하는 외국인 거주민이라는 인식도 개선하고 방범대, 봉사단 활동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함으로서 소통의 기회도 가지고 편견도 깰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이음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도하는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을 말한다.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다이음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는 사업이다.

- 개선점과 제안

다이음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이 각 나라의 전통놀이 체험, 문화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이음 강사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이 어렵다. 따라서 다이음 강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바꾸어야 한다.

3. 결론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은 소극적인 태도로서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주민이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통합보다는 동화 정책에 가까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문화통합에 방해가 되고 있다.

진정한 다문화적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통해 구성원들의 인종, 민족, 문화, 언어적 배경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구성원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이주민의 사회적응 및 참여를 장려하여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을 배려한 정책의 도입 및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정주민은 이주민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강남숙, 중등교사가 지각한 학교조직문화, 자아존중감, 다문화교육인식, 다문화교수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 김상교, 거주 외국인의 다국어 서비스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 박인식, 인터컬처럴 시티에 관한 연구
- 엄지애, 캐나다 다문화주의 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친환경 공공부지 활용방안

- 대구시 신청사 부지 활용 정책제안

최홍린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I. 서론

기후변화 위기의 시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 정부는 기후 위기에 맞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로 제한하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현재 대구시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 대응을 시정 공식 의제로 설정했다. 이처럼 대구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국의 ‘그린시티’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도시 내에 환경친화적 자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방치되어 있는 공공부지의 활용’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대구시 또한 공공부지를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인 실천 방안은 부족하다.

대구시는 기후변화와 환경친화의 중심이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한 의미의 ‘그린시티’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에 현재 달서구에 위치한 옛 두류정수장 부지 약 2만 4천 평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신청사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주제를 테마로 하는 도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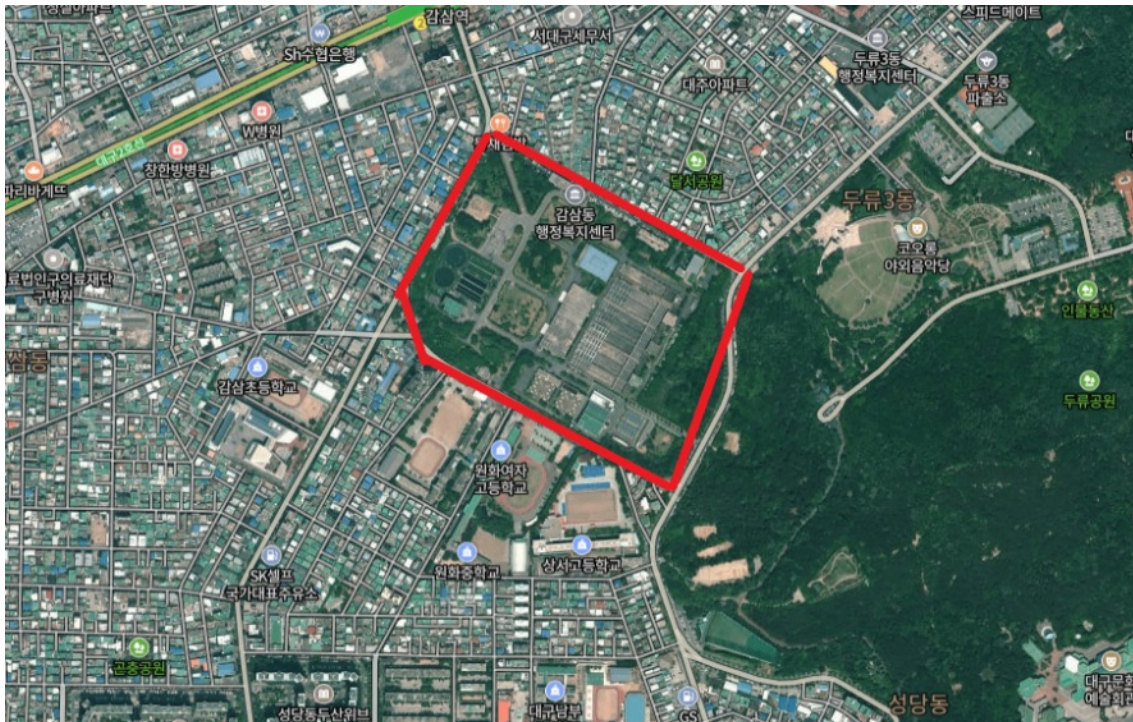
다양한 도시 내의 문화공간을 벤치마킹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담아 미래지향적인 대구의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역현안

1. 현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의 허점

현재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옛 두류정수장 부지는 2009년 8월에 가동을 중단하면서 약 4만 8천 평의 넓은 부지가 방치되고 있다. (<그림1> 참고)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대구시 신청사 건립¹⁾의 부지로 적합하다는 논의가 2019년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었다. 그 규모는 약 2만 4천 평으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의 절반가량이다.

〈그림 1〉 옛 두류정수장 부지



당초 계획은 신청사 외 남은 부지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²⁾으로 그 계획은 물론 시청 건립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더

1)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 2000년대 초반부터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함.
- 현 청사는 낡고 좁아서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오래전부터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현 청사는 공무원 업무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대부분이라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이자, 그 도시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부족함.

2)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2012년 50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200억원을 적립하였으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지난 코로나19 생계지원을 위해 1,300억원을 사용하였다.

해, 위에 언급한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대구시의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부지 일부를 매각해 건립 사업 및 채무 상환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매각 계획은 대구시의 재정 건정성 향상과 공공부지의 지속적인 방치를 타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러한 신청사 건립 계획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 나아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방향과 어긋나며, 많은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위험부담은 ‘부지 매각에 대한 불충분성’, ‘대구 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결정’에 있다.

1) 부지 매각에 대한 불충분성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은 시민참여 및 소통과 힐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미래상이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백분 활용한 이전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러한 초점과는 다르게 부지 일부를 매각해 부채 탕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부지의 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필지 분할 없이 통으로 매각해 랜드마크성을 갖춘 호텔이나 쇼핑몰 등 상업건축물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유치라는 가능성을 붙잡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 속 각 지자체에서는 강력한 재정혁신을 통한 긴축재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한편 이익 추구를 위해 2만4천 평 규모의 크기를 매입할 기업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위 지역은 좁은 접근 도로를 가지고 있어 상업 건물이 들어서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청사 건립 소요 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사용하려는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은 채무 상환 재원의 충당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부지 매각의 방향성에 혼란만을 가중하고 있다. 부채 탕감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지역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유용 가치가 있는 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충당은 합리적일 수 없다.

2) 대구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결정

대구 신청사 건립의 비전은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이자 대구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건립추진 방향에서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사실상 시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을 천명한 셈이다. 대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돋움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 단위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달서구는 신청사 건립과 함께 청사 주변에는 두류정수장의 역사성을 담은 ‘물의 정원’, 두류공원과 신청사를 연결하는 ‘이음광장’ 조성 등 실질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방향 및 주변지역 발전전략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일부 부지 매각이라는 발표는 사실상 신청사 건립 초기 취지를 완전히 뒤엎겠다는 것을 의미한 셈이다. 즉각 주민들은 반발에 나섰다. ‘대구시 시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 연대’를 대표로 주민 총 600여 명이 참여해 집회를 열고 “부지 민간 매각 계획은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대구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달서구 의원과 시의원들이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림 2>참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대구 신청사 건립은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탄생함과 동시에 도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 문화 공간의 모범답안이 될 수 있음에도 매각 발표와 시민들의 반대로 그 본질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대구가 진정으로 ‘그린시티’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건립 방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촉구 집회



Ⅲ. 정책과제 제안

- 방치된 도시자원 활용을 통한 시민참여형 문화공간 조성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활용한 도심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여 방치되어 있는 공공부지의 활용을 통해 대구의 랜드마크 건설과 동시에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표 1〉 시민참여형 문화공간 조성 계획

추진내용	세부내용
친환경 테마 공원 조성	대구 센트럴파크(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테마 :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주차장 없는 No-Car zone 운영,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 잔디광장 :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 야외전시 : 환경 관련 예술작품 전시 • 캠페인 : 환경 관련 체험, 육교, 행사 등 실시
복합문화 시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 체험공간 운영 • 친환경 업체 및 가게 유치 : 친환경 인테리어, 제로웨이스트 가게, 친환경 스타트업 등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 청년창업지원 : 입점 공모 시 청년 우대 등 미래지향성 추구

공원 조성이 부지 활용의 큰 이점이 되는 이유는 현재의 시대적 흐름 즉,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 대구의 이미지가 될 신청사는 그 시작에서부터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민간 매각을 통한 호텔이나 백화점 입점이 아닌 자연환경을 생각한 공원 조성이어야말로 미래 지향적일 것이다. 또한, 달서구가 지향하고 있는 그린시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신청서의 이러한 방향점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시설의 확대 및 보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화시설의 증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지의 한정성이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만 두류정수장이라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금, 민간 매각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조성은 다시없을 기회이다.

IV. 기대효과

1. 대구의 대표 랜드마크 건설

타 시·도 단체의 랜드마크를 생각하면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구는 뚜렷한 랜드마크의 이미지가 쉽게 생각나지 않는다. 현재 홍준표 시장은 대구를 ‘파워풀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의 얼굴을 담당하게 될 신청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주변 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자랑이 될 랜드마크의 건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뉴욕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센트럴파크는 뉴욕 시민들의 자랑이자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이다. 뉴욕에서도 알짜배기 땅에 위치한 공원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시선 또한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서는 안 될 뉴욕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이처럼 현재 신청사와 함께 부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할 대구시에게는 위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림 3〉 공공부지 활용 모범사례

	부산 F1963	런던 테이트모던
활용 사례		
활용 방안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폐공장을 문화시설로 탈바꿈	폐발전소를 리모델링하여 도심문화공간 조성
효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문화 창조 및 도시 대표 관광지로의 탈바꿈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활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표적인 공공디자인 작품으로 평가

2. 달서구의 ‘그린시티’ 이미지 공고화

현재 대구 달서구는 ‘그린시티’로서의 행보를 활발히 하는 중이다. 최근 달서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리 역량 제고 및 환경친화적 지방행정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그린시티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많은 인구수, 넓은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선제적인 환경오염 예방과 대기 질 개선, 도심 내 녹색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춰 달서구의 신청사 건립은 현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여 대구의 중심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민관의 협력으로 대규모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요소와 관광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고 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은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가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민간 매각으로 가능성을 잃는 것이 아닌 달서구의 미래지향적인 ‘그린시티’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실현 제도화 방안

한현희 지역당원

1. 서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공공병원’, ‘의료진’, ‘확충’, ‘전염병 대응’ 키워드가 떠오르며 우리 사회는 건강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에선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의료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는 민간의 미충족된 의료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거나 주로 공중보건사업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 1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며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라는 이름으로 민간의료에 동참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와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적 의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한 의료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대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한 확진자 폭증을 맞았다. 2020년 대구·경북지역의 초과 사망률(특정 시기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 건수를 넘어선 추가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2020년 국내 전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582.9명이며, 수도권 473.5명, 기타 지역 686.5명에 비해 대구 경북 지역은 719.6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월등히 높았다. 같은 해 3월 대구·경북지역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4명으로 전국 초과 사망률 49.7명을 훨씬 웃돌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한 8월에도 대구·경북 지역은 10만 명 당 60.8명(전국 48.6명)의 죽음이 발생해 전국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대구의 열악한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연히 드러났지만 현재 대구시는 개선하고자 하는 별도

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구시장 취임, 예비 타당성 및 수익성 문제, 건립 부지 선정 등의 문제에 따라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개선 의지는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II. 정책 연구배경

1. 대구의 열악한 의료체계

1) 대구시 건강 수준 현황

대구시민의 건강 수준은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을 웃돌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기관 6종(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의 개수는 서울(9,476), 경기(8,349), 부산(2,816), 경남(2,368) 다음으로 대구(2,077)가 많다. 충분한 병원 및 의료기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책임 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동북권의 건강 수준이 열악하고, 서남권은 의료자원과 건강 수준 두 분야 모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 수준은 입원 사망비(1 이상은 초과 사망)를 기준으로, 동북권 입원 사망비는 1.18, 응급·심혈관 분야에서 모두 사망비가 1을 넘어섰다. 서남권 입원 사망비는 1.22, 응급 사망비 1.19로 동북권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보고서는 서남권은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고 응급 건강 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입원병상수는 많지만 구조적으로 미흡해 적정수준 이상 주요 의료기관 육성과 응급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1〉 대구경북지역 중진료권 건강수준 현황

진료권	지역	지역책임의료기관	자원 현황	인구10만명당 병상수(정신/ 특수 제외)	건강수준			
					입원(권내입 원사망비)	응급(권내응 급사망비)	심혈관(권내심 혈관사망비)	뇌혈관(권내뇌 혈관사망비)
대구동북권	동/북/중/수성	-	충분	335(부족)	1.18(열악)	1.16(열악)	1.08(열악)	0.87(보통)
대구서남권	서/남/달서/달성	대구의료원	부족	450(충분)	1.22(매우열악)	1.19(열악)	0.87(보통)	0.97(보통)
포항권	포항/영덕/울진/울릉	포항의료원	충분	325(부족)	1.39(매우열악)	0.89(보통)	0.83(보통)	0.93(보통)
안동권	안동/의성/청송/영양	안동의료원	충분	725(충분)	1.24(매우열악)	0.95(보통)	1.16(열악)	1.15(열악)
구미권	구미/칠곡/군위/김천 /고령/성주	김천의료원	충분	216(부족)	1.19(열악)	1.01(열악)	1.08(열악)	1.28(열악)
경주권	경주/경산/청도/영천	-	부족	238(부족)	1.28(매우열악)	1.16(열악)	1.66(열악)	1.33(매우열악)
영주권	영주/예천/봉화	영주직접사병원	부재	352(부족)	1.08(열악)	0.92(보통)	1.99(매우열악)	1.48(매우열악)
상주권	상주/문경	상주직접사병원	부재	660(충분)	1.31(매우열악)	1.13(열악)	2.37(매우열악)	1.33(매우열악)

자료 :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19.

대구시민의 적색 건강지표는 이뿐만 아니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6~2019 전국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경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45.24명으로 충북(46.95명), 강원(46.73명), 전북(46.1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대구 또한 치료가능 사망률이 43.73명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41.83명)에 비해 약 2명 많았다. 2015~2019년 환자의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 또한 대구(1.14), 경북(1.11)을 기록하며 충북(1.15)과 함께 ‘매우 열악’ 판정을 받았다.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사망한 환자 비율(2017~2019)도 대구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2019년 기준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DOA·도착 즉시 사망 인원 제외) 100명 중 1.4명(전국 평균)이 사망한 가운데 서울은 1.3명, 인천 1.2명, 경기 1.1명으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대구는 2.4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표 2〉 전국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 명당)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국		47.34	44.66	43.81	41.83
연도별 전국 지역격차(비)		2.272	2.086	1.860	1.779
연도별 5분위 지역격차(비)		1.474	1.482	1.394	1.450
1	서울	42.22	37.79	38.09	36.36
2	부산	52.21	50.93	48.62	44.24
3	대구	53.60	50.42	46.57	43.73
4	인천	49.63	48.15	48.17	44.86
5	광주	43.48	45.66	44.62	39.12
6	대전	44.66	43.58	38.85	41.34
7	울산	46.36	40.79	43.98	42.38
8	세종	51.08	44.14	45.71	36.48
9	경기	45.99	42.70	42.42	44.93
10	강원	53.89	50.28	48.33	46.73
11	충북	55.01	52.06	47.01	46.95
12	충남	45.74	46.25	46.57	43.61
13	전북	50.93	47.72	42.78	46.13
14	전남	49.56	48.03	48.36	44.08
15	경북	48.88	45.68	47.17	45.24
16	경남	49.47	48.48	46.17	42.95
17	제주	42.21	38.48	45.15	43.28

자료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2. 대구의료원의 한계

중앙정부 정책으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에는 서남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 동북권의 책임의료기관은 미지정(설치) 상태이다. 대구의료원은 서구 중리동에 소재해 서쪽에 치우쳐있어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 서구 주민이 환자의 과반이 넘고 반대편의 동구 주민은 2.1%에 불과하다. 또한 대구의료원은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 전담 병원이 되며 취약계층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대구시민들 간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격차로 인해 현재 대구는 지역 내 공공의료 불평등이 초래된 실정이다.

3. 대구시민의 건립 욕구

2020년 대구시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54.6%)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민에게 의료체계 장기 대기의 불편함이 크고 시간 단축과 넉넉한 병상 확보에 대한 욕구를 보여준다.

〈표 3〉 2020 대구시 의료 서비스 불만 이유 조사

1위		2위		3위		4위			
진료대기 및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비(약값)가 비싸다		필요이상으로 진료(검사 등)를 많이 한다		치료 및 진단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54.6%		32.4%		30.7%		20.4%			
5위		6위		7위		8위		9위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진료가 불성실하다		불친절하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기타	
12.1%		11.8%		6.9%		6.5%		3.4%	

자료 : 대구시 홈페이지

또한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구지역 공공병원 수요에 대한 인식조사(2021년)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찬성하였으며 건립 시 87.6%가 이용 의향을 보여 대구시민의 높은 건립 요구도가 나타났다.

〈그림 1〉 대구시민 제2 대구의료원 기자회견



자료 : 뉴스민

III. 정책 목표

제2 대구의료원을 동부권역에 설립하여 대구 내 공공의료전 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는 향후 감염병 위기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정 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적 의료를 공급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여 적정한 의료이용 지침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공공의료성을 강화할 것이다.

〈표 4〉 정책 목표 : 제2 대구의료원 동부권역 설립

정책 목표 : 제2 대구의료원 동부권역 설립
 - 향후 감염병 위기등으로부터 대구 시민 건강권 보장
 - 적정 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확보

Ⅳ. 정책 과제

1. 정의

공공의료의 법률적 의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공의료는 개인의 건강서비스를 다루는 민간의료와 집단보건을 다루는 공중보건을 합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조직이 창출하는 가치를 통해 지역주민이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공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수익성 창출과 도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지역 차원에서의 감염병·질병 대응 등 다양한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추진 근거

1) 법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추진 근거 법률로는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다.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대구지역주민 건강권 향상에 관한 근거가 된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대구 주민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 법률이 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후 재난 상황·신종 바이러스 예방의 근거를 둔다.

〈표 5〉 추진 근거 법률

추진 근거 법률	세부 조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

- 문재인케어에 의한 지역 공공의료 확충

2017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 논의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소위 ‘문재인케어’인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중심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었다. 2017년 8월 문재인케어 시작 이후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자체 완결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18년 10월 전국의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기반을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19년 11월 정부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지역의료강화 대책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에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대책의 내용에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가 아닌 전국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의 신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시작된 문재인케어의 전국적 실현과 연계된 정부의 2018년, 2019년 지역공공의료 강화계획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2020년 1월부터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 의료정책의 최우선과제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방역·치료와 연계된 지역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제시하였고, 먼저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국 20여 개 지방의료원을 4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때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확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립과정을 합리화하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향후 3년간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3. 추진계획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의사결정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구광역시의 의사결정과 대구광역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원 설립을 지향하는 사회적 논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기초하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대구광역시의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대구광역시는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팀 또는 과 단위의 조직 혹은 위원회를 신설하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대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대구광역시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대구광역시 산하 연구기관, 기초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수평적 방식으로 협의체 및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하여 의료원 설립에 대한 공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협조를 확보할 것이고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6〉 추진 계획

추진과제	수단 및 세부사항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제2 대구의료원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 • 대구시 차원에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천명하고, 시의 정책방향을 담은 대구시 조례를 제정
제2 대구의료원 설립위원회 구성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대전략 논의 • 대구시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
국고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 가산
협의체 및 공적 숙의(커뮤니케이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협조 확보를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제고 •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학습 장 마련 • 시의회·시민단체와의 협상 및 공적 숙의 환경 조성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2 대구의료원 건립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는 울산, 광주, 대전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산에서도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공공의료원이 비용 대비 편익분석(B/C)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시민들이 대전시립병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함께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은 ‘대

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을 발의하여 지역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의료원의 재정악화를 대비한 국가의 지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전의료원은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지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지방정부·의원의 역할이 뒷받침되는 한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 한계

1) 공공병원의 수익성 문제

여러 공공가치 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은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설립의 어려움이나 설립 이후에도 적자로 인한 불안정한 운영 등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정책의 운영과 효과성 측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과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사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념적 충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직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방정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2) 홍준표 시장의 진주의료원 폐기 사례

현재 대구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시장은 일전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원시킨 사례가 있다.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의료공급 과잉, 귀족노조,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며 제2 대구의료원 사업추진 요구는 대구지역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주민발의로 의료원 설립 추진이 진행된 성남시 사례처럼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 촉구에 대한 주민의 입김이 계속된다면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V. 의의

1. 실현가능성

최근 활발하게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 광주에서도 지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방의료원 정책은 지역 차원의 감염병 대

응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2013년 폐업된 진주의료원으로 인해 지방의료원이 없던 진주시는 최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최종 입지로 선정되면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서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방 의료원 설립 분위기가 도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력과 의지만 있다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현 우성진 동구청장은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안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퇴임 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 계획을 밝혔다. 윤석준 대구시 동구청장 당선인은 “동부권 공공 의료기관 설립은 대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인접 지역인 경산과 영천 등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우리 동구에 제2 의료원이 유치되도록 대구시를 설득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한 바 있다.

2. 기대효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면, 적정진료의 모델을 만들고, 전염병 재난발생 등 재난적 의료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며,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미래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기대효과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구시민의 건강권 보장 전염병 재난발생 등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과 시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 궁극적으로 한국 미래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
------	---

V. 결론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문제는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의료복지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제공할 이유가 있다.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건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료원

설립에 더해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기존 취약계층 진료와 일반진료 축소 없이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대응 설계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종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혁신 설계안 마련 연구와 기술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에 더해 의료취약지 및 보건소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기능 강화도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의료 확충 기금, 공공의료관리청, 예비타당성 면제, 국고지원 확대, 거버넌스 혁신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료원 설립은 공공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지방의료원 설립은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정책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사업, 지역 의료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등 지방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감 신,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2010.
- 국립중앙의료원, 「2019년 공공의료기관현황」, 2020.
- 김경일, 「[지역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야」, 부산발전포럼, 2020.
- 김용익, 「포용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 포용국가포럼 종합토론회, 2021.
- 김정희·이정면·김해준·김선제·정현진·이용갑,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 양호민, 「보건 위기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국토연구원, 2020.
- 정백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20.
- 정호경·황지혜,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59: 215-244., 2020.
- 유명순·권순만·정연·손효정,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평가 및 공공의료 수행방안 연구」, 서울대학교·보건복지부, 2013.
- 최은희·최승호·황명구, 「[코로나19 이후 분야별 현상과 과제 09. 보건복지부문] 사회복

지안전망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 충북 Issue & Trend 40, 2020.

-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전략 연구 보고서, 2019.
- 윤영균,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제2 대구의료원 유치 나서겠다”, 대구mbc
- 대구시청 홈페이지. 2019 대구사회조사, 2019.
- 이주형, 대구 동북권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2027년 개원목표, 대구일보
- 김성주, [보도자료] 전국 주요 사망률 지표, 수도권-비수도권 건강격차 고착화 우려, 2021.9.29.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청년 창업지원 정책

홍지민 지역당원

I. 서론

2017년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희망이 없는 한국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젊은이에게 도전이 없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또 ‘삼성이나 현대 창업자 들처럼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국에 안 보인다, 전부 좋은 대학 나와서 공무원 이 되거나 삼성을 가려고 한다’¹⁾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데에 치중하는 한국 사회를 비판한 것이다.

〈표 1〉 연령대별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인구 (단위: 천명)	실업자 (단위: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8					
20 - 39세	13,786	582	3,903	4.22%	71.69%
2019					
20 - 39세	13,722	557	3,882	4.06%	71.71%
2020					
20 - 39세	13,587	550	4,072	4.05	70.03%
2021					
20 - 39세	13,442	486	3,994	3.62%	70.29%

〈표 1〉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인구와 실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을 정리한 표이다. 인구와 실업자수,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취업이나 구직활동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나 재학생,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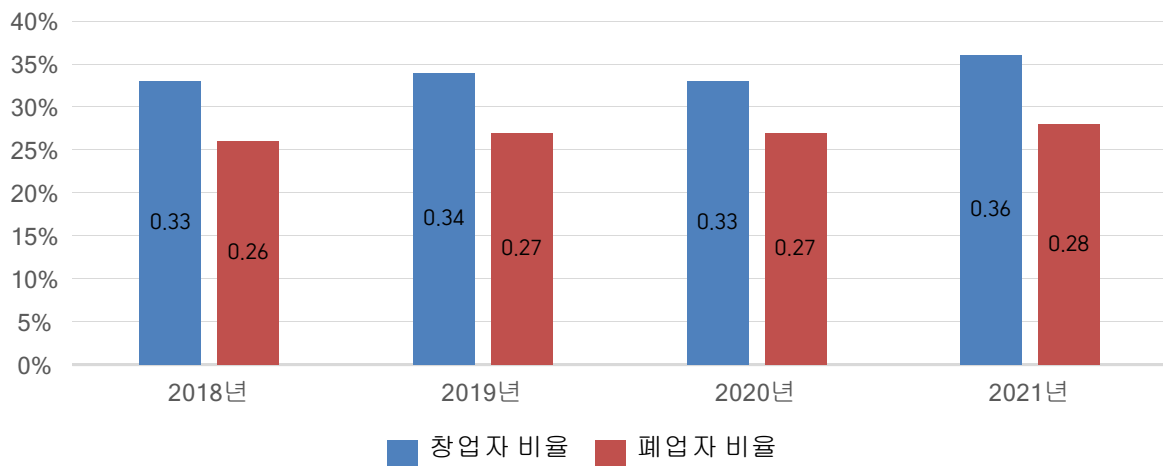
논문에 따르면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을 장려²⁾하며, 지원하고 있다

1) 이신영, 한국의 젊은 부자들, 131~135p

고 한다. 따라서 지원 정책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어떠한 결과를 빚어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하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II. 현황

〈그림 1〉 창업자 및 폐업자 비율



〈그림 1〉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의 청년 창업자 비율과 청년 폐업자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전체 창업 기업 중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39세 미만의 창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33%, 2019년 34%, 2020년 33%, 2021년 3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폐업 기업 중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39세 미만 폐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26%, 2019년 27%, 2020년 27%, 2021년 2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율과 폐업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청년 사업체들의 생존율에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매출 0원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²⁾.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6기 기업에 투입된 예산은 1,035억원이고, 1,515개 기업 중 383개의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 청년몰 ‘이화52번가’에서도 비슷하다. 청년몰 사업은 정부가 상점가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정책으로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2년 간 임대료와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하지만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2개 청년몰 중 285개가 문을 닫아 휴·폐업률이 42%에 달한다.

2) 김성훈, 김현준, 이명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계획(한국주거학회2019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1권 제2호)”

3) 단독 정부 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 | 한경닷컴 (hankyung.com)

고속도로 휴게소 내 청년창업매장 운영사업의 폐업을 역시 2021년 7월 기준 전체 340개 매
장 중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⁴⁾

III. 지원 정책

1. 국가정책

1) 두루누리 지원사업


사회보험 가입 부담 뚫!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수준
신규 가입자: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지원기간
’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4) <https://www.fnnews.com/news/202110251807094944>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이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나 성장 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이어도 참여 가능하다.

인위적 감원 방지를 위해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해 두었다.

3) 청년창업사관학교



- ① 실무 중심의 **다중코칭 체계** ②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③ **신사업분야 코칭**(친환경, AI 등)
 ④ 원하는 분야 전문가 **바우처방식으로 연계코칭**(22년 시범도입) ⑤ 비대면 **해외온라인 코칭 확대**



🌀 졸업기업에 대해 5년간 후속지원 >> Death Valley 극복 및 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창업 위주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교육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안산, 구리에 본교가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글로벌로 확대되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 제공, 창업 교육(단계별 집중 교육), 사업비 지원(창업활동

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창업코칭(전담교수 1:1 집중 코칭), 기술지원(제품 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연계 지원(정책자금, 판로지원, 입지 등 연계지원), 글로벌 지원(해외 판로,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2. 지역정책 - 달성군

1) 현풍 도깨비시장 청년몰⁵⁾



전통시장인 현풍도깨비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이다. 2019년 3월에 개장하였으며 2021년 7월 기준 1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2)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달성군과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진행하는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 1년 이상, 연매출 1.5억 이하의 창업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수 완료 시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5) 달성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 '현이와 풍이의 청춘신난장'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299>

3) 2023년 준공 예정인 청년혁신센터

기술 습득부터 창업 컨설팅과 금융지원, 정부와 학계 네트워크까지 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IV. 보완점

달성군에서 진행하는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도 40시간이라는 짧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 교육이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⁶⁾에 따르면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2주 정도의 짧은 창업교육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장기 창업 교육이, 일회성 교육보다는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 혹은 지역은 사업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팀 빌딩, 관련된 법안에 대한 교육, 지역 내에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사장님을 초빙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유관 기관에 대한 정보, 재무에 대한 교육, 청년 창업 기업 참여가 조건인 정책 홍보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들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정책들의 공통점으로는 창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 고용을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소수만이 해당되고 있어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V. 멘토가 될 청년들을 위하여

창업은 현실이다. 청년이라는 세대가 가진 패기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단 창업을 하고 나면 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에 현실이 보다 무겁고, 각박하게 느껴진다.

멘토가 될 청년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경험하길 소망한다.

6) 전인오,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 V. 결론

참고자료 및 출처

- 이신영, 한국의 젊은 부자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2022.11.15.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업종별·연령별 창업기업 수, 2022.11.15.
- 김성훈, 김현준, 이명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계획, 한국주거학회 2019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1권 제2호., 2019.
- 전인오,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
- 한경닷컴, 단독 정부 지원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 5년 뒤 매출 0원
- “정부 지원 끊긴 뒤 대부분 폐업”... ‘구멍 뚫린’ 청년창업사업
- <https://www.fnnews.com/news/202110251807094944>
- 신아일보, 달성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 ‘현이와 풍이의 청춘신난장’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299>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따뜻한 동행, 다함께 행복한 돌봄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2070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육박 예정!

아동 돌봄 시설, 경로당 수만큼 늘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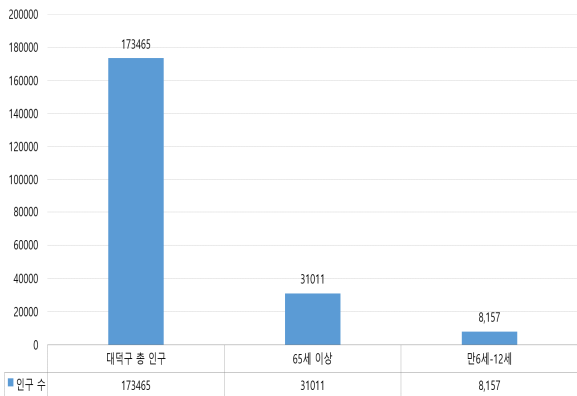
고령화시대의 노인 인구 증가와 아동 돌봄 시설 부족 현안 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모든 지역의 공통 현안 문제입니다. 저희 대전시 대덕구의 민선 8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핵심 과제에 오른 현안이기도 합니다.

현안의 문제에 따른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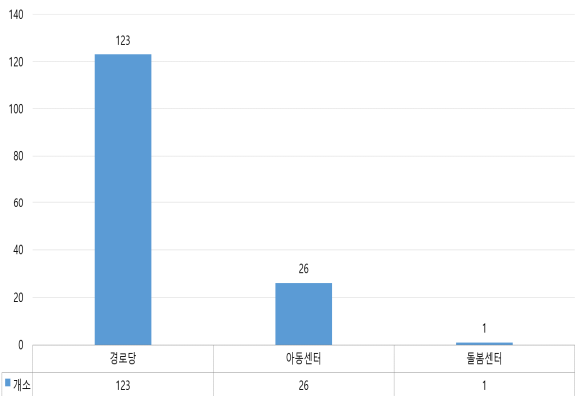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와 건강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젊은 층과 세대 갈등, 외로움과 고독, 사회와의 분리에서 오는 소외감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아동 돌봄 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로는 워킹 맘들의 경력 단절과, 부모님의 맞벌이로 하교 후 혼자 시간을 보내야하는 아이들의 불안전,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대덕구 인구 현황



〈그림 2〉 돌봄시설 현황



자료 : 대전시 대덕구청

대덕구의 인구현황은 총 인구 173,465명 중 65세 이상 노인 31,011명

돌봄 시설 이용 나이인 만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8,157명이며, 시설 현황은 경로당 123개소, 지역아동센터 26개소, 다함께 돌봄 센터는 1개소가 운영중이고, '23년 1개소가 개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의 경우 이용 대상이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센터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돌봄 시설이 부족한 권역마다 돌봄 시설을 설치한다면 좋겠지만, 낮은 재정 자립도와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대덕구에서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더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수도권 및 지자체에선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 시설을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로 입주를 시작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권역별로 경로당과 돌봄 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기존의 경로당 중 권역마다 1,2곳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 연계 돌봄 시설을 설치한다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도 돌봄이라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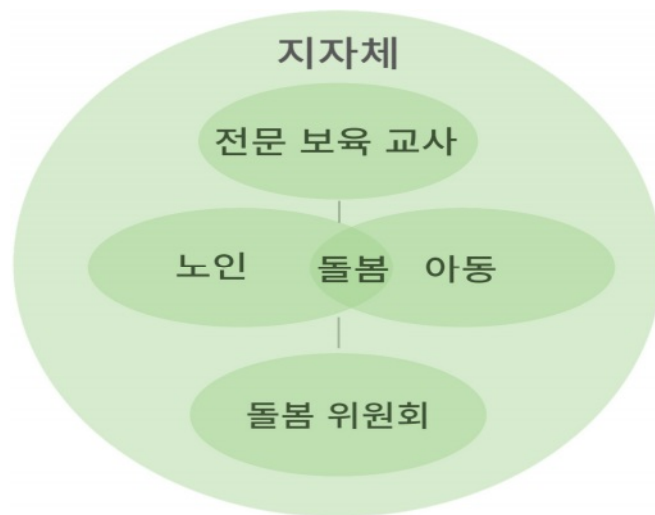
기존의 사례들은 오전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하교 후 아이들이 돌아오는 오후가 되면 공간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처럼 노인의 돌봄 또한 중요한 만큼 이제는 함께하는 돌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내어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단순 일자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설 환경 정리, 보육교사 보조도우미 외에 돌봄 시설에서 필수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저학년 아동들을 위한 하교 후 돌봄 시설까지 등원을 도와주시는 안전도우미와 외부 강사로 운영되는 돌봄센터 특별활동 수업을 어르신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동화 구연, 손유희, 종이접기, 보드게임 등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 시설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어르신들은 연계된 돌봄 시설뿐만이 아닌 배달강좌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자체 어린이집의 협력기관 체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뿐만이 아닌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악기 연주, 생활 요가, 텃밭 가꾸기 등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르신들에겐 아이들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을, 아동들에겐 어르신과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효 문화 및 전통 문화를 배우는 계기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인과 아동, 다른 연령층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며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을 대하기 어려워하실 어르신들을 위해 세대통합교육, 조부모교육 등의 교육을 실행하여 노인과 아동, 모두의 심리적 돌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참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들과의 주기적인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학부모와 어르신의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SNS를 통해 아동들의 활동 모습들을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시설 내 활동 모습들을 상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센터장 및 전담 보육교사의 주도로 모든 운영 시간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학부모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심 운영 방안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협의체들을 통한 돌봄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마을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위원회 위원으로 시설의 운영 감시 및 재능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마을 공동체 돌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안심 운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간 공유로 지자체의 예산은 절약하고, 노인과 아동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돌봄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참여도를 느끼며, 학부모의 마음의 안정까지 동반 된다면 완벽한 다 함께 돌봄이 실현되리라 봅니다.

노인과 아동이 만나 마음을 나누며, 온 마을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돌봄
서로의 마음까지 돌볼 수 있는 돌봄은 함께 하는 마을을 이루어 나가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동행, 다함께 행복한 돌봄의 시작을 대덕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노잼 도시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변화

이창기 지역당원

1.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문제

- 대전은 왜 노잼 도시인가?

→ 지역 주민 및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결과

- 대도시이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
- 유적지도, 관광지도 없다.
- 볼거리, 먹거리 없는 아쿠아리움
-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대전 오월드

〈그림 1〉 놀이 시설(1970년 ~ 1999년까지)







- 과거 1970년 ~ 1999년까지 대전 시민 및 전 국민이 대전을 즐기던 놀이 공간이 있었음

〈그림 2〉 놀이 시설(2000년 ~ 현재까지)





대전 직장산 야경



대전 보문산 야경



대전 계족산 황토길





-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 및 전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함.

2.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 이런데도 왜 대전은 노잼 도시?
 - 지역 주민 및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 결과
 - 흥미로운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
 - 즐길 수 있는 요소(Activity)가 없다.
 - 홍보성이 부족한 도시
 - 공무원 및 정치인이 노력하지 않는 도시

3.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제

-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지역 내 체험 존 및 푸드 트럭 유치
 - 생활 체육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
 - 활발한 SNS 활동 및 블로그 홍보 활용
 - 지역 주민의 국한된 행사가 아닌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홍보
 - 선거 기간에만 주민을 돌아보는 정치가 아닌 언제나 주민을 생각하는 정치
 - 공무원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행정

4. 나의 지역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 국토 지역 균형 발전
 - KTX시대가 열리면서 수도권 및 각 광역시 급의 인구 밀집으로 인한 지역 균형 분열 상태로 소멸도시가 증가함
 - 중·소도시의 인구 소멸 현상 완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및 체험활동 증진
 - 1순위 소멸도시인 농어촌에는 농어촌의 체험 활동 및 경험으로 귀농·귀어·귀촌 장려
 - 각 지역의 관광산업 및 지역 행사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이루고, 푸드 트럭 및 청년 창업을 확대시켜 취업률 증진
 - 각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하여 지역 내에 경제를 재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 각 지역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통 및 교류를 활성화하며,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
 -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각 도시, 각 지역의 활용방안이 없는, 1년에 한 번 이용하는

공설 운동장 및 종합 운동장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민 없이 장소를 대관할 수 있는 편리함과 그로 인한 주변 상권의 활성화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전한빛 지역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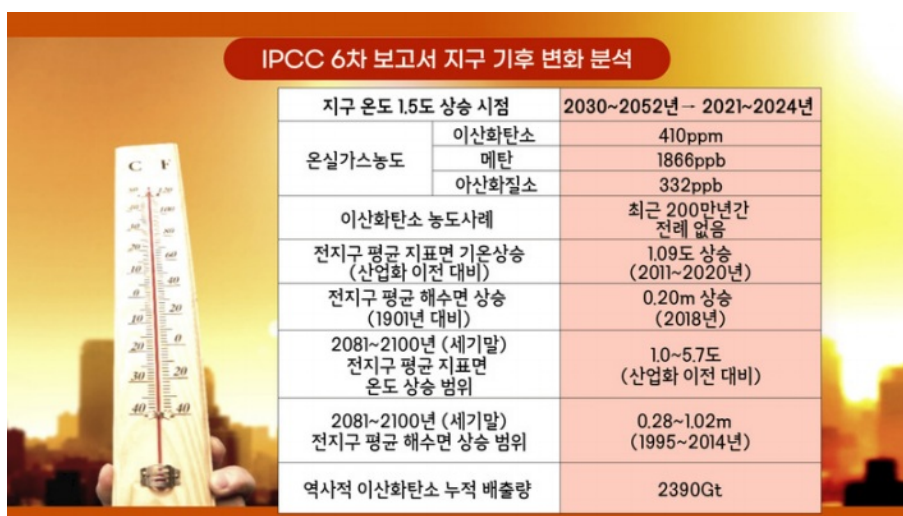
1. 배경 및 필요성

(1) 들어가며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록적인 홍수로 국토의 1/3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유럽에서는 올여름 최소 1만 5천 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또한 올해 굵직굵직한 가뭄,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파리협정 이후 주요국이 연달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나섰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그림 1〉 IPCC 6차 보고서 지구 기후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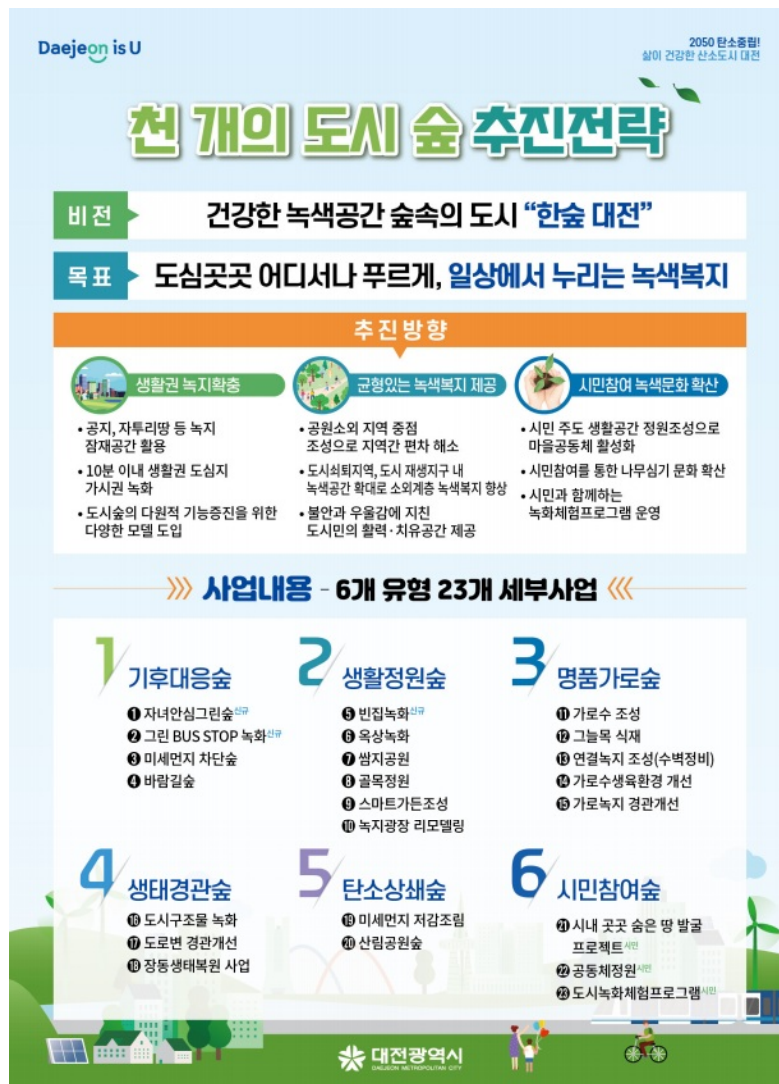


자료 : 비건뉴스(<https://www.vegannews.co.kr/mobile/article.html?no=11325>)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위한 사업 발굴·지원 최우선 추진 ▲탄소중립 위해 선도적 기후행동 실천·확산을 선언했고, 이어 9월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후 각 지역에서는 녹색에너지로의 전환, 탄소흡수원 확대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숲 조성 정책인데, 대전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2021년 6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2050년까지 도시숲 1,000개를 만들겠다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림 2〉 천개의 도시 숲 추진전략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 왜 도시숲인가?

「도시숲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조성관리 정책 연구」(송갑수, 2018)에서는 도시숲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기후조절 효과**이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도시열섬, 각종 콘크리트 등 인공시설물, 자동차 매연, 취사 및 냉난방 등에 의한 인공열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열섬화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등 기후조절 효과가 있다. (중략) 두 번째로는 **방음 및 소음을 감소시키는 효과**이다. (중략) 세 번째는 **대기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느티나무 한 그루가 1년간 만들어내는 산소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 해당할 정도로 공기정화에 탁월하다. 네 번째는 **정서함양 효과**이다. (...)

기후 위기시대에 폭염에 맞서 온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도시숲은 이제 필요가 아닌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특히나 먼 거리가 아닌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누구든지 불편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II. 대전의 현황

대전시 미세먼지 8대 특·광역시 중 세종, 인천 다음으로 높아

- 2019년 대전시의 대기오염도를 살펴보면 아황산가스(0.003ppm), 이산화질소(0.028ppm), 오존(0.025ppm), 일산화탄소(0.4ppm) 모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의 경우 $42\mu\text{g}/\text{m}^3$ 로 8대 특·광역시 중 세종($44\mu\text{g}/\text{m}^3$)과 인천($43\mu\text{g}/\text{m}^3$) 다음으로, 서울, 광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그림 3〉 대전의 대기오염도

지역 및 연도		아황산가스 (SO ₂) (ppm)/년	이산화질소(NO ₂) (ppm)/년	오존 (O ₃) (ppm)/8시간	일산화탄소 (CO) (ppm)/8시간	미세먼지 (PM-10) (μg/m ³)/년	미세먼지 (PM-2.5) (μg/m ³)/년
대전	2010	0.006	0.025	0.021	1.0	48(44)	-
	2011	0.004	0.021	0.022	0.5	44(41)	-
	2012	0.004	0.021	0.024	0.5	39(39)	-
	2013	0.004	0.021	0.024	0.4	42(42)	-
	2014	0.004	0.020	0.026	0.5	41(40)	-
	2015	0.004	0.019	0.025	0.5	46(44)	28(28)
	2016	0.003	0.019	0.028	0.5	44(43)	21(21)
	2017	0.003	0.018	0.029	0.4	45(44)	21(21)
	2018	0.002	0.019	0.027	0.4	44(43)	22(22)
	2019	0.002	0.019	0.025	0.4	42(41)	22(22)
전국		0.004	0.018	0.030	0.5	41(41)	23(23)
서울		0.004	0.028	0.025	0.5	42(42)	25(25)
부산		0.005	0.019	0.030	0.4	36(36)	21(21)
대구		0.003	0.019	0.029	0.5	39(39)	22(22)
인천		0.005	0.024	0.028	0.5	43(42)	23(23)
광주		0.003	0.018	0.030	0.4	42(42)	23(23)
울산		0.005	0.020	0.031	0.5	37(36)	20(20)
세종		0.003	0.019	0.028	0.5	44(44)	26(26)

자료 : 2021 대전의 사회지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시의 미세먼지 수치가 8대 특·광역시 중 세종과 인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대전시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림 4〉 전국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좁은 순서대로)

	2017			2019		
	생활권도시림	1인당도시림	1인당생활권도시림	생활권도시림	1인당도시림	1인당생활권도시림
	㎡	㎡	㎡	㎡	㎡	㎡
서울	4,315.00	14.91	4.38	6,685.00	18.53	6.87
경기	9,306.00	112.11	7.69	10,462.00	119.66	8.37
인천	2,373.00	47.48	8.23	2,861.00	49.25	9.89
대전	1,571.00	164.70	10.46	1,658.00	189.18	11.24
합계	47,318.00	256.73	10.07	54,354.00	256.62	11.51
광주	1,649.00	124.57	11.27	1,791.00	129.08	12.29
충남	1,677.00	427.13	11.40	1,853.00	450.63	12.41
대구	2,748.00	119.11	11.52	3,021.00	150.36	12.50
부산	4,313.00	84.73	12.49	4,525.00	91.15	13.32
제주	976.00	1,413.87	15.72	905.00	666.02	14.27
경북	3,043.00	794.71	15.00	3,074.00	790.30	15.40
충북	1,918.00	648.30	15.29	2,082.00	592.84	16.40
경남	3,477.00	265.20	13.00	4,487.00	272.99	16.89
울산	1,956.00	297.31	17.87	2,090.00	332.26	19.12
전북	2,693.00	298.26	18.56	2,850.00	336.90	19.88
강원	2,385.00	2,359.91	19.73	2,506.00	2,548.83	21.03
세종	559.00	54.90	24.22	622.00	51.51	21.18
전남	2,359.00	878.07	17.97	2,883.00	852.67	22.05

자료 : 산림청

대전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1인당 도시림 면적은 높은 순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녹지 면적에 비해 생활권 도시숲 구축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도시공원 통계

(단위 : m²)

구 분		합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공원별														
합 계		598	28,509,896.0	87	1,293,628.8	93	14,455,503.1	138	4,186,875.1	194	7,098,199.5	86	1,475,689.5	
도 시 공 원	소 계	596	19,853,620.0	87	1,293,628.8	92	6,098,254.1	138	4,186,875.1	194	7,098,199.5	85	1,176,662.5	
	생 활 권 공 원	계	521	14,249,013.6	73	870,470.1	83	5,874,795.9	126	3,901,549.5	168	3,119,335.3	71	482,862.8
		근 린	102	13,301,194.1	13	753,905.0	12	5,720,050.7	20	3,644,217.5	46	2,839,592.5	11	343,428.4
		어 린 이	316	760,836.8	36	74,514.9	39	108,138.2	96	226,517.8	96	240,377.1	49	111,288.8
		소 공 원	103	186,982.7	24	42,050.2	32	46,607.0	10	30,814.2	26	39,365.7	11	28,145.6
	주 제 공 원	계	75	5,604,606.4	14	423,158.7	9	223,458.2	12	285,325.6	26	3,978,864.2	14	693,799.7
		역 사	8	293,587.9	5	106,259.1			1	19,479.0	1	112,270.5	1	55,579.3
		문 화	25	866,033.0	4	220,677.7	2	189,934.3	4	103,634.9	10	151,648.4	5	200,137.7
		수 변	14	384,019.9	3	49,265.0			1	15,745.6	10	319,009.3		
		묘 지	1	3,235,379.0							1	3,235,379.0		
		체 육	12	630,048.9	1	40,266.0	1	24,050.0	4	135,058.3			6	430,674.6
		기 타	15	195,537.7	1	6,690.9	6	9,473.9	2	11,407.8	4	160,557.0	2	7,408.1
	도시자연공원구역		2	8,656,276.0			1	8,357,249.0					1	299,027.0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도시숲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가 없어서 도시공원 통계자료로 대체하여 제시해 보자면, 유성구와 서구에 비해 중구와 동구, 대덕구는 도시공원, 그중에서도 생활권 공원의 수가 절반 정도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III. 정책제안

(1) 도시숲 조성 추진전략 구체화

대전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을 위해 2050년까지 총 사업비 4,150여억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도시숲을 1,0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000개의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숫자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2050년까지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요즘, 2050년이라는 목

표 범위는 상당히 먼 미래로 보인다. 따라서 그 수를 줄이더라도 2035년으로 정책 목표 기간을 단축 설정하여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켜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권 도시숲 면적의 불균형은 이미 타 시·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자치구 간의 균형 있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 과정에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민참여형 생활권 도시숲 조성’의 구상 과정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도시숲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도시숲 조성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도시숲 활용방안 - 〈우리동네 도시숲 잇기〉

새로이 도시숲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도시숲을 잘 활용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숲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생활권 도시숲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숲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대전에서 도시숲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그 목적이 있다.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도시숲에 대해서 잘 알고,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행사나 축제, 활동을 펼치면서 만남의 장까지 열어나갈 수 있다면 도시숲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주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에 있는 도시숲을 소개하며 〈우리 동네 도시숲 잇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6〉 대전 유림공원



자료 : 네이버블로그 소소한 하루

2007년 조성된 대전 유성구의 유림공원은 도심 속 한가운데 만들어진 도시숲으로, 사계절의 특색이 드러나는 울창하고 다양한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열리고 있는 국화축제에는 한 해 7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 즐겨 찾는 도시숲 중 하나이다.

〈그림 7〉 대전 월평공원



자료 : 본인

도솔산으로 가는 길을 잇는 월평공원은 대전의 시민들이 도시개발로부터 직접 지켜 낸 산물이다. 월평공원 안쪽으로 보존된 자연습지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로서 그야말로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줍깅과 같은 활동이 매주 열리고 있다.

〈그림 8〉 대전 은구비공원



자료 : 대전시 유성구 공식 블로그

산책 명소로 소문난 은구비공원은 유아 숲체험과 일일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가족 혹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이다.

○ 〈우리 동네 도시숲 지도 제작 및 배포〉

대전 내 도시숲 위치와 간단한 정보를 담은 〈우리 동네 도시숲 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

○ 〈우리 동네 도시숲으로 놀러 WADADA!〉

각 동네의 도시숲에서 진행하는 축제·행사·활동 등을 홍보하고 서로 참여를 독려

예를 들어 유림공원의 국화축제, 월평 습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줄깡, 은구비공원에서의 일일 캠핑 체험 같은 다양한 여러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면서 대전 시민에게 놀 거리와 쉼 자리를 동시에 제공

○ 〈우리 동네 도시숲 아카데미〉

자치구별로 거점이 되는 도시숲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기후 위기대응, 탄소중립, 제로 웨이스트 등 교육·실습 실시

평소 시민들에게 비교적 알려져 있는 기존의 도시숲을 활용하여 작은 도시숲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새로 조성될 도시숲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면, 도시숲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이용도 증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마무리

기후 위기 시대에 ‘일상에서의 탄소중립’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민 생활권내에 매년 460여 개소의 정원을 조성¹⁾하며 도심의 자투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 중에 있다. 도시숲과 더불어 비교적 작은 면적과 적은 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한 생활정원을 함께 활용한다면 탄소중립도시 대전으로 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정책 제안으로 도시숲을 균형 있게 조성하여 도시가 숨 쉴 수 있어지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발하게 이용하고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아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까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여러 동네의 도시숲을 이어 대전 시민들이 우리 집 앞에서부터 대전 전역까지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충남일보,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과 정원,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458>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소셜 웨어 프로젝트”

이지오 지역당원

1. 서론

1) 정책의 제안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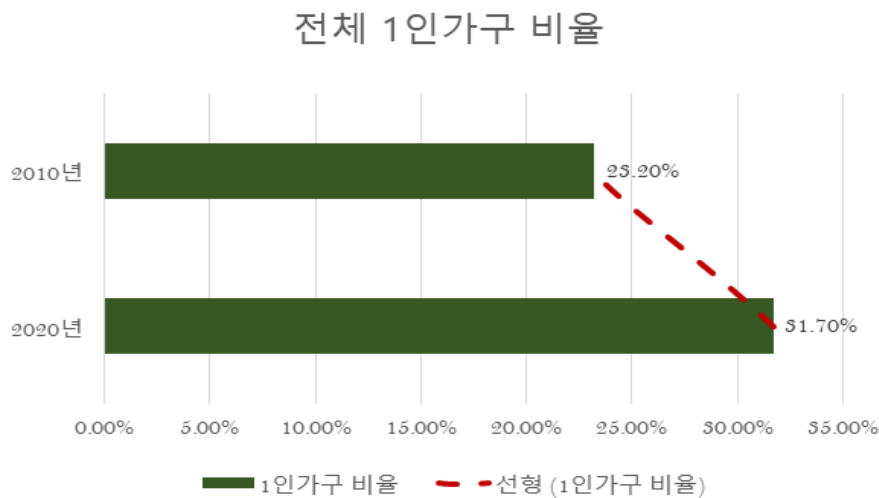
가족의 구성과 형성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는 변화하고 있다. 1인가구 정의에 있어「건강가족기본법」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1인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건강 가정 기본 계획의 수립)에서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¹⁾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상위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가구 지원 또는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에 관한 지원방안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정도이다.²⁾

2020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인가구 비율은 2010년 23.2%에서 2020년 31.7%로 8.5%p 증가하였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고, 1인 관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만 존재했다.

2) 박지영·김지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87-108., 2022.

〈그림 1〉 전체 1인가구 비율



부산지역의 1인가구 또한 2020년 기준 455.207가구(32.8%)를 차지하며,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라 할 만큼 우리 사회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1인가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2〉 부산광역시 세대별 가구 구성

(단위: 명, 가구)

구분	전체	평균 가구원수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가구	1인가구	비혈연 가구
2005	1,186,378	2.9	170,735	699,525	82,836	826	222,515	9,941
2010	1,243,880	2.7	208,241	658,845	75,826	619	290,902	9,447
2015	1,335,900	2.5	240,190	650,111	72,025	555	361,749	11,270
2020	1,405,037	2.3	273,820	604,157	48,778	217	455,207	22,638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2) 1인가구 조례 제정 현황

각 지자체에서는 가구 형태와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증가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가구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다.³⁾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12월 21일 기준

〈그림 3〉 국내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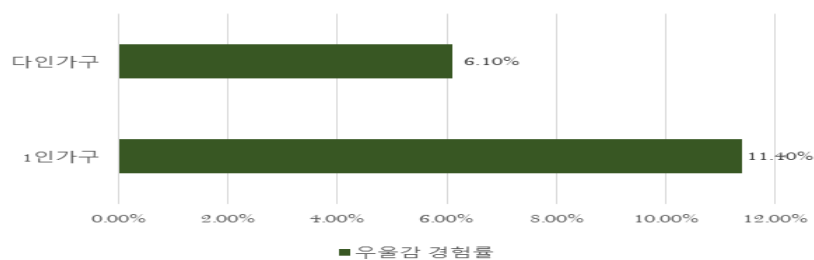
하지만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을 비롯한 총 10곳으로 조사되었다.

II. 본론

1) 1인가구의 문제점

앞선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인가구의 첫 번째 문제로는 ‘고독과 고립’ 이 있다. 통계청 따르면 1인가구의 11.4%는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⁴⁾ 즉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우울감 경험률이 2배가량 높았다.

〈그림 4〉 우울감 경험률



자료 : 통계청

4)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2021.

1인가구가 평소 삶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즉,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⁵⁾에 따르면 건강과 의료가 6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주거 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1.1%) 항목에서는 거주지 적응, 연애 및 결혼, 인간관계, 혼자 살다 죽을 때의 노후 문제 등 사회적 교류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외로움의 만성화는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 및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⁶⁾

〈그림 5〉 1인가구 스트레스 요인 분석

변수	f	%
건강과 의료	61	61.7
소득	60	60.6
주거안정	57	57.6
문화와 여가	41	41.5
일자리	35	35.3
가족관계	15	15.2
기타	11	11.1
사회보장과 복지	7	7.0
자연환경과 재난안전	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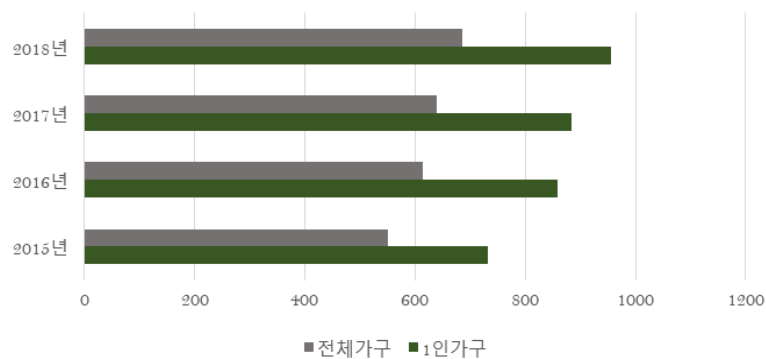
자료 :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영주·곽인경, 한국공간디자인 논문집, 2020.

1인가구의 두 번째 문제로는 건강과 돌봄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인가구와 전체 가구의 연간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확연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연간 의료비 지출

연간 의료비 지출 (단위 천원)



자료 : 한국의료패널조사

5) 김영주·곽인경,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 논문집, 241-250, 2020.

6) 서울시 의료돌봄복지과 보고서, 2021.

이와 관련하여 1인가구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및 위기 대처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중 42.4%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을 호소했었고 62.6% 하루 1회 이상 식사를 결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 구조, 발생 시의 대처 어려움이 58% 의료 보건기관에 혼자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는 1인가구가 80.7%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1인가구는 의료, 안전, 고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부산의 1인가구 지원 정책

부산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지원으로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과 돌봄〉

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우나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신체. 건강〉

① 가족관계 및 심리상담 서비스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상담을 통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증진으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누구나

지원내용 : 개인 상담 또는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는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해결 상담

②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정신건강이 취약한 1인가구원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 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1인가구

지원내용 :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의한 단계별 사례관리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 연계

〈관계향상 및 커뮤니티〉

① 사회적 고립기구 집단활동 프로그램

다양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과 생활력 향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립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사회적 고립기구(고독사 위험군)

지원내용 : 정서지원 프로그램(텃밭 키트 제공, 안부확인 등)

생활력 향상 프로그램(기초요리, 운동교실, 문화체험활동 등)

지역봉사활동

이처럼 부산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청년 그리고 1인가구에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 ❶ 대부분의 청년들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잘 모름
- ❷ 청년 정책의 운영기간이 너무 짧거나 실효성이 부족함 등이 있다.

III. 결론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개인에 맞는 세세한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흥미 있을 만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1) 대안 제시

공유경제를 활용한 〈소셜 셰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공유경제란 전통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모델로 최근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시회복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도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소셜 셰어 프로젝트〉는 기존의 공유도시 정책을 계승하여 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에서 공유 옷장, 공유책장, 공유도서관 등 쓰지 않고 놀리는 공간이나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재능과 정보를 나누는 공유경제를 도시 전체에서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림 7〉 소셜 웨어 프로젝트 관계도



특히, 〈소셜 웨어 프로그램〉은 사회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들이 흥미 있을 만한 주제로 소모임을 만들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자체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8〉 유사모델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최근 대도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서로의 감정적 경험을 공유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고독과 외로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IV 마무리

공유경제의 핵심은 새로운 물품의 생산이 아닌,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전 세계 공유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3,350억 달러(365조 8,87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유경제 전담 조직(시장직속 서울 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팀) 구성을 통해 공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글로벌 서밋 개최 등을 통해 해외 공유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공유문화 도시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공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산시도 주요 사례로 꼽힌다. 수원, 용인, 성남 등 도내 주요 도시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다.⁷⁾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공유도시 형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결코 질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공유도시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하향평준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에 특성에 맞게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유도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7) 「공유경제, 지속가능 도시 위한 대안될까」, 고양신문.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청년을 위한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 다시 활력있는 부산이 되기 위한 고찰

이지원 지역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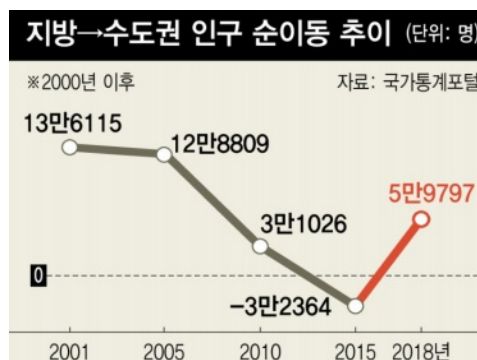
1. 서론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도시 인프라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 정책 아래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 총 경제력의 52.6%, 금융거래 비중 70%가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21세기 국가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확실한 지방분권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균형발전 정책이 중단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꿈은 좌절되었다. 2015년 이전까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약 3만 명 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이후부터는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 지방→수도권 인구 순이동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1)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사료관, 2008.

2021년 기준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약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도시는 인구 감소의 위기와 주거, 교육, 의료 혜택의 불균형 속에서 소멸해 가는 도시 속에서 생존해야 하며 수도권의 서민은 지나친 인구 집중으로 부동산 과열, 주택 공급 부족, 교통 체증 속에서 높은 자살률마저 기록하며 하루하루 생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 여성, 아동, 장애인은 생존 경쟁 속에서 서로를 품어줄 여유조차 잃어가며 관심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하면 부산 사람들은 모두들 ‘당연히 부산이지’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제2의 도시는 인천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의 인프라, 인천 공항을 열고 수도권 그 어떤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청년, 아동, 여성, 장애인 중 그나마 나은 부류는 청년일 것이다. 아직 이들은 기회가 있다면 어떤 도시는 찾아 떠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부산의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려 발버둥을 치고 있다.

“~~부산~~부산청년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조원C&I에 의뢰한 ‘부산 청년 정치·사회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을 위해 부산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1.6%가 ‘있다’고 답했다. ‘부산을 떠나지 않겠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부산을 떠나겠다고 답한 비율은 중동부 도심권(동래·연제·수영·남구)이 84.2%로 평균보다 높았다. 강서 낙동권(강서·사상·사하·북구)은 79.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청년 일자리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은 77.7%에 달했다.”

약 80%의 부산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80%의 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영남지역 청년 74.8% “부산은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청년 80% “부산 떠나고 싶지 않아”²⁾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부산에 머물게 하려면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 하지만 부산 스스로 조차도 불균형 발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김윤지, 부산제일경제, 2022.02.21.

<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791>

당장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의료격차와 교육격차는 부산시민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큰 문제가 되었고 청년들의 일자리 균형조차 무너져 버렸다.

부산의 일자리와 도시 재개발을 통한 부산 균형 발전을 이룬다면 더 이상 청년을 부산에 붙잡아 둘 필요 없이 그들 스스로 부산에 정착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메가시티와 같은 광역도시권을 구현하는데 큰 발걸음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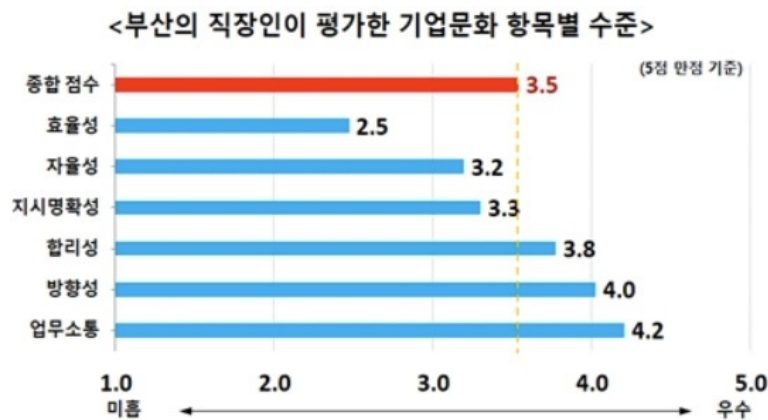
2.1 부산 청년의 일자리 현황

부산 산업의 특징은 전통 제조업과 항만·물류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부산 산업 전반의 저생산성은 생산성이 낮은 내수형 서비스업 비중 증가와 낮은 제조업 생산성에 기인...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동생산성 또한 높아 저생산성과 산업의 구조가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 1990년대 신발 등의 경공업이 쇠락함과 동시에 도소매업, 운수업 등의 내수형 서비스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이들 내수형 서비스 산업들이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오래된 전통기업의 높은 노동생산성, 저생산성이 부산 내수 경제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향산업의 길목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부산의 직장인이 평가한 기업문화 항목별 수준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2021.

3) 김동복·이우평, 산업패러다임 변화와 부산의 과제, 산업&혁신 Brief,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1.

부산 기업의 자유롭지 못한 기업문화도 저생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상위 200개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직문화는 개선시도가 꾸준히 되어 왔지만, 효율성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부산 산업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 문화는 청년들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기 꺼려하는 이유가 되었다. 가장 결정적으로, 낮은 임금이 부산지역 취업을 꺼리는 큰 이유라는 사실이 상공회의소 조사결과 나타났다.

“대졸 사무 관리직을 기준으로 기업 입장에서 구인난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임금 구간은 2600만원이었다. MZ세대에서 구직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2800~3000만원, 3000~3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결국 기업과 MZ세대 간의 임금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인 초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600만원 미만 기업의 임금을 구직 초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800~3200만원 구간의 평균 임금인 약 3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됐다.”⁴⁾

2.1.1 일자리 창출 해결 방안 모색

부산을 포함한 지방 도시와 서울 수도권의 일자리 형태는 어떻게 다를까? 2021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 심화 주요 원인이 수도권을 탈제조업화, 고학력·고숙련 노동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 이라는 진단을 냈다.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은 ‘양질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층 고용률 격차는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5~6%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의 청년들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이라는 제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얼마 전 김희재 의원은「지역본사제 3법」이라는 법안을 발의 했다. 지역본사제란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 개정안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본사제 3법이 지방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방 이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이 잘 시행이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유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수준과 수도권과 비교되는 기업 문화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부흥이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 도약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4)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 부산 MZ세대, 임금 격차 400만원에 일자리 미스매칭 발생 (2022.06.1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614054475206>

출생률 감소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강력한 국가의 등장으로 국내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 스스로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 기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은 국토 균형발전이 잘 이뤄져 있고, 실업률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산업 구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은 중국, 인도가 제조업 강자로 부상하고 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산업을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주마다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Arbeit 4.0’이라는 제도로 정부주도 하에 중소기업의 혁신을 이루고 지방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 자동화가 아닌 기술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산학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기존의 노동자를 재교육하여 실업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유럽 각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지방에 분산되도록 해야 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방 인재의 효율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부산에서는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와 같이 IT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양성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기고 있다.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인재 활용방안을 더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2.2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 개발 방안

대한민국의 제2 화폐는 부동산이다. 중산층 기준 아파트의 모양은 방 3개, 거실하나, 화장실 2개로 하나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설사는 잘 팔리는 집이 중요하지 입주민의 취향과 삶의 질은 두 번째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내 친구의 집과 내 집, 아는 사람의 집 모양은 방향과 위치만 다를 뿐 다를 것이 없다. 마치 화폐처럼 말이다. 모두가 동일한 모양의 집에 산다면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가격이 된다. 누가 더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가 아닌 비싼 아파트에 사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집값을 결정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요와 공급이다.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률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림 3〉 주택 보급율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
전국	가구수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주택수	19,877	20,313	20,818	21,310	21,674
	주택보급률	102.6	103.3	104.2	104.8	103.6
서울	가구수	3,785	3,813	3,840	3,896	3,982
	주택수	3,644	3,672	3,682	3,739	3,778
	주택보급률	96.3	96.3	95.9	96.0	94.9
부산	가구수	1,344	1,354	1,364	1,377	1,405
	주택수	1,376	1,396	1,413	1,439	1,460
	주택보급률	102.3	103.1	103.6	104.5	103.9

자료 : e-나라지표

전국 기준으로 2020년도 주택 보급률은 103%로 전 국민이 한 채씩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가구 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 전국 주택 보급현황

행정구역별(시군구)	성별	2021							
		1인가구	주택_계	주택_단독주택	주택_아파트	주택_연립주택	주택_다세대주택	주택_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_계
		▲▲▲	▲▲▲	▲▲▲	▲▲▲	▲▲▲	▲▲▲	▲▲▲	▲▲▲
전국	계	7,165,788	6,356,409	3,024,891	2,373,162	126,862	699,190	132,304	809,379
	남자	3,583,770	3,121,254	1,616,676	1,035,510	56,344	336,932	75,792	462,516
	여자	3,582,018	3,235,155	1,408,215	1,337,652	70,518	362,258	56,512	346,863

자료 : KOSIS

2021년 기준 1인가구 수는 700만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은 약 600만호로 나타났다.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가구 수는 증가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기준 1인, 2인가구 수는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가 가구 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3, 4인가구 수는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가구 수별 수요에 맞지 않는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 할 때 3,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주택 하나를 시장에 공급하기보다 1, 2인가구를 위한 주택 두 개를 공급해야 한다. 신도시도 개발하되 낙후된 동네를 재개발할 때 수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형태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부산의 주택 개발 현황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은 동서 균형발전이 무

너진 지 오래되었다. 사하구, 사상구와 동부산의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 차이가 같은 부산인가 싶을 정도이다. 현실은 2030 엑스포를 위해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고급 아파트를 위한 재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산이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서부권을 재개발 할 필요가 있다. 서부권 재개발을 함과 동시에 산업단지를 잘 활용한다면 부산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난 해소의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임대 주택 공급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임대 주택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적은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시민을 임대 주택으로부터 졸업을 시켜주는 것이 최종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3. 결론

청년을 생각하는 부산이 되기 위해선 그들의 고민거리를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일자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에는 총 14개의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즉, 그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지산학이 협력해서 기존의 제조업 중심 기업에 대해 기술적 혁신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자리가 마련되고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주거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단기간에 주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부산의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을 재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1, 2인가구 수에 맞는 새로운 주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각화된 문화를 소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드웨어가 준비된다면 소프트웨어는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청년을 붙잡기 위해 읍소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이 떠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기회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한 도시는 해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왜 그토록 청년을 붙잡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는 기회가 있는 도시, 활력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라면 중장년도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라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2030 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활력을 되찾는 첫 번째 지역 도시가 되는 부산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가족/가구형성
- KOSIS, 총조사 주택총괄(행정구역/주택의 종류/ 거주가구수/ 총방수별)
-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2021.
-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사료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 지역자치TV, 박혜수, ‘지역본사제 3법’ 국회 문턱 넘을까?, <https://www.jjctv.co.kr/article/view/jjc202211040019>, 2022.11.4.
- 강성명, 동아일보 ‘부산 청년 70% “부산서 취직하고 싶다”… 중소기업은 인력난, 왜?’,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20/114013350/1.>, 2022.6.20.
- 부산일보, 이상배, ‘[요즘것들] 부산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 내친 도시의 미래 ‘안 봐도 유튜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2319200167551>, 2022.7.11.
- 이창효·장성만, 점유형태 선택과 주거환경 및 주거의식의 관련성 분석. 지역연구, 32(2), 31-44., 2016.
- 천현숙,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4), 215-247., 2004.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역불균형 서부산이 살아야 부산이 산다

장리혜 지역당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전히 무산되면서 수도권에 대항할 길은 더욱 멀어졌다.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언급된 바 있는 정책은 시민들의 실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비록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동서 간의 격차 서부산권의 정책을 다루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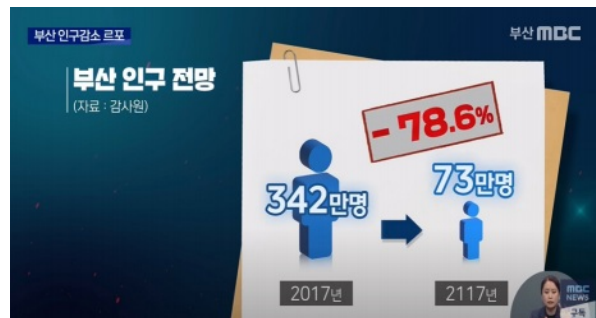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부산의 뿌리 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것 중 하나는 동서 지역 간 불균형이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동서 불균형을 없애겠다고 다짐하며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동부산권보다 서부산권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사하구는 동부산권인 해운대, 중부산권인 부산진구와 더불어 인구 3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서부산권의 대표 도시로 꼽히고 있지만 그간 지역 발전에서 늘 소외됐다.



□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

1. 인구 유출 현상



자료 : 부산 청년 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 인구 유지방안, 부산연구원, 2020.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부산 청년 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 인구 유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20년 타 시·도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는 연평균 12만 6,458명, 부산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15만 5,815명으로 연평균 2만 9,357명이 순유출 됐다.

나이별로는 25~29세의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34세로 나타났다. 부산 청년 인구 순유출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인구 순유출 요인은 직업, 가족, 주택 순으로 높았으며, 순유입 요인은 교육, 주거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청년 인구 순유출 문제는 지역 내 대응 차원을 넘어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순유출에 따른 결과로 일자리, 교육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부산의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하며 이대로라면 부산은 소멸해 버릴지도 모른다.

2. 부산 청년 일자리 부족

부산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산에 계속 살고 싶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8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는 청년이 부산을 떠나면서 지난해 부산 인구는 339만 1,946명으로 340만 명마저 무너졌다.

청년 떠나지만 `부산 살고 싶은 도시`...73% "계속 살고 싶다"

박동민 기자

입력 : 2021-01-06 14:01:12

가   

매년 1만명 이상 청년 떠나 부산 인구 340만명 무너져..."좋은 일자리 없어 수도권으로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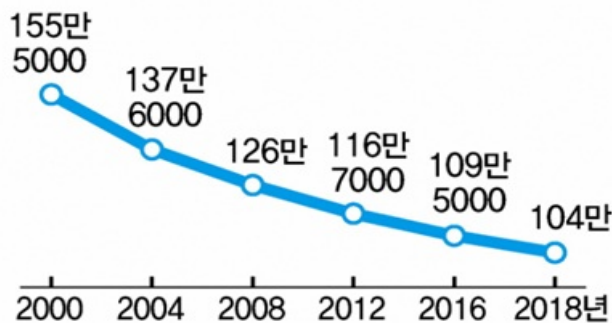
자료 : 청년 떠나지만 '부산 살고 싶은 도시'...73% "계속 살고 싶다", 매일경제, 2021.01.06.

‘2020 부산사회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계속 살고 싶은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3.7%, ‘그렇지 않다’가 7.4%로 나왔다. 2019년 조사(그렇다 67.3%, 그렇지 않다 8.7%)보다 부산에 살고 싶은 비율이 증가했다. ‘부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6.6%로 조사됐다. 이 질문도 2019년 조사(자랑스럽다 38.8%, 그렇지 않다 8.6%)보다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이 늘었다.

〈그림 1〉 부산지역 15~39세 청년 경제활동인구

부산지역 15~39세 청년 경제활동인구

(단위:명)



그러나 이들은 왜 부산을 떠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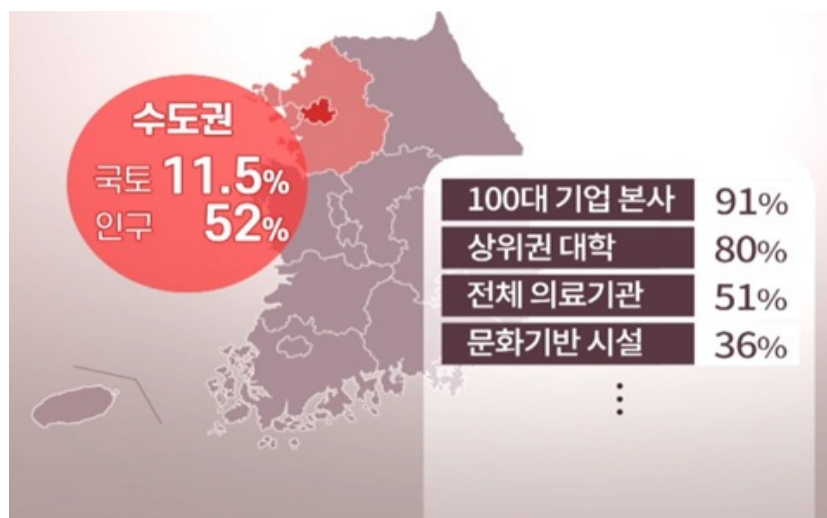
첫째, 취업.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58.6%만이 부산에서 첫 직장을 가지고 나머지는 경남, 서울 등지로 떠난다. 또한, 부산 순 유출 인구를 사유별로 보면 ‘직업’이 과반수(67.9%)를 차지했다.

둘째, 기업이 부산에 없다. 부산에 존재하는 100대 기업은 르노삼성 1곳이며 1,000대 기업중 34곳 뿐이다. 취업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유출된 인구는 거의 수도권으로 향했는데 가뜰이나 침체한 지역 고용시장이 코로나 19 이후 더 악화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임금이 낮다. 지역별 평균급여액 4,000만원을 웃도는 울산, 서울과 비교해 부산은 3,000만원 초반대로 전국 16개 도시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다. 먹고살 길이 막막한 청년들은 부산을 떠난다.

청년이 없는 도시에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그림 2〉 수도권 집중 현황



청년들에게 있어 취업은 최대의 고민이다. 특히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말이다. 청년 인구 유출은 지금 부산의 최대 현안이지만 전체 예산 중 청년 관련 예산은 0.2%를 넘지 못한다. 그마저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준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형식적인 일회성 지원에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무관심 현상, 인구대비 고령층이 많은 탓에 유권자를 고려한 정책결정자들의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이 균형 잡히게 발전해야 하고 나는 서부산과 동부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고민해봤다.

[현]부산 사하구

무지개공단



신평공단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란?
공장 + 지원시설로 구성된 3층 이상 집합건물



공장들이 굉장히 낡아 못 쓰게 되어있고 본래 있던 공장들이 녹산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비어 있는 공장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 공장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가 들어서는데 더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지 격차도 심각하다. 동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와 광안리에는 고급 호텔들이 즐비하지만, 서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호텔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부산 서부산의 관광지 격차

동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서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균형 잡힌 부산 - 노인과 바다가 아닌 청년과 바다.〉

○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

〈서부산과 동부산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들〉

[서부산 관광지 홍보]

지자체 차원 영상창작물 공모 사업

(ex : 공개입찰로 창조성의 제작 역량, 보유채널 파급력 등을 평가해서 제작비, 장소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장 마련

[접근성]

1. 급행열차 시행

1호선을 중심으로 부산역에서 서부산 관광지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루트 구축

2. 관광택시 (ex : 서부산 관광지 운행 시 미터기 요금의 30% 할증 정책)

[동부산 서부산 관광지 격차 해소]

가덕도 신공항, 에코델타시티 등과 연계하여 개발

세계적인 관광거점지역으로 다대포를 동부산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격차 해결

○ 나의 지역 비전과 정책이 국가에 할 기여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과밀, 과포화 해결

국가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동민, 청년 떠나지만 ‘부산 살고 싶은 도시’…73% “계속 살고 싶다”, 〈매일경제〉, 2021.01.06.
- 최상구·함규원, [신년대담]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 맞춰야”, 〈농민신문〉, 2018.01.01.
- 김주완, ‘지방소멸이 도시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죠?’, 〈표표스스〉, 2018.04.05.
- 이석준, ‘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대 이유는 ‘일자리’’, 〈국제신문〉, 2021.01.26.
- 이우영, [청년들의 탈부산] 젊은 층, 집값 비싸고 일자리도 없는 ‘부산’ 떠날 수밖에…, 〈부산일보〉, 2019.06.10.
- 박신, 청년들의 탈부산 러시 심각...대안은 있을까?, 〈시빅뉴스〉, 2019.10.01.
- 김동현,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방 생존전략... 경쟁력 강화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서울pn〉, 2021.03.25.
- 정윤식, ‘자동차 도시’의 몰락...美 디트로이트 파산, 〈SBS〉, 2013.07.20.
- 청년이 떠나는 부산...좋은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해답, 〈한경사회〉, 2019.11.18.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서울시 청년가구 안정적 주거복지 시행을 위한 정책제안

김지환 지역당원

1. 서론

최근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의 대한 담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양질의 교육기회 부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패적인 주거 부족 등의 상황 등의 놓이며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여가생활을 향유하거나, 혹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2021년 8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며 경제,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시급함의 중·경도를 논하며 다양한 정책과 의제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하고 보완하여야할 점들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청년의 신분에서 큰 걱정과 부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의 문제이다.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 10명 중 8명이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으로 빈곤 위험 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의 따른 원인으로는 소득의 격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과열된 주택시장 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어려워진 배경으로 지목된다.

2022년 8월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월세 평균 가격은 108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 동월(약 96만원)과 비교할 때 약 12만원 정도 상승한 수치이다. 목돈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찾는 것이 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서울시의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일반 가구 월세 비율의 3배 이상이다.

이처럼 치솟는 주거비용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학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충분하게 지불할 수 여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 공급(청년층 할당과 관련하여)과 같은 현 상황에서 청년은 경제 자립과 문화생활, 주거안정의 대한 필요도가 높다. 이러한 욕구가 큰 청년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 주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이 집을 구하면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남지 않는다. 이는 미래를 위한 준비부족, 심리적 곤경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II. 정책연구

1. 주거문제의 중요성

- ①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 : 의식주 중 하나로 인간이 기본생활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② 인권으로의 주거권 :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로서 정의된다.
- ③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주거는 물리적인 주택 뿐 아닌 거주자의 정성을 담는 사회 및 심리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지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은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나, 그 성과가 지역적으로 차별화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내비친다. 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2. 4가지 핵심 논점

국민이 살아야하는 주택의 최저수준 즉 최저주거기준은 개인이 영위하는 주거의 형태에 적합하지 못하고, 값비싼 임대료, 열악한 시설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에 대한 안정을 느끼지 못함 등의 문제의식과 주택 공급 및 운영 등이 새로운 형태(공유주거, 사회적 주택 등)로 주거가 나타남에 따라 4가지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인구학적 측면(수혜대상이 왜 청년일까?)



2022년 서울시 청년 1인가구는 20년도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의 비율은 청년 48.9%, 중장년 32.3%, 노년 18.9%로 청년층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지난 20년간 청년은 약 39만 명 증가하였다.

청년 1인가구가 전 세대 중 가장 많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의 통계가 보여주듯 청년층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주거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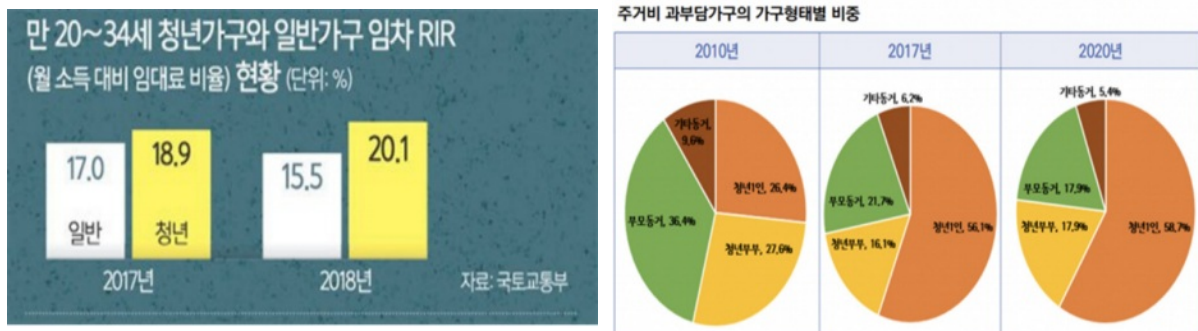
2) 정책적 측면(실태조사 필요)

서울시 기준 청년 1인가구는 경제자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로 중장년(30.1%), 노년(19.3%)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청년 1인가구는 대부분 직장에 종사하여 주거비의 부담을 느낀 이들로(66.8%)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이들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고 10명 중 4명은 부모의 도움 없이 생활을 유지한다.

청년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544만원이며 중위소득 30%이하는 0.3%, 중위소득 50%이하(OECD 빈곤선)는 3.4%, 중위소득 85% 이하는 66.1%로 나타났다.

3) 경제적 측면(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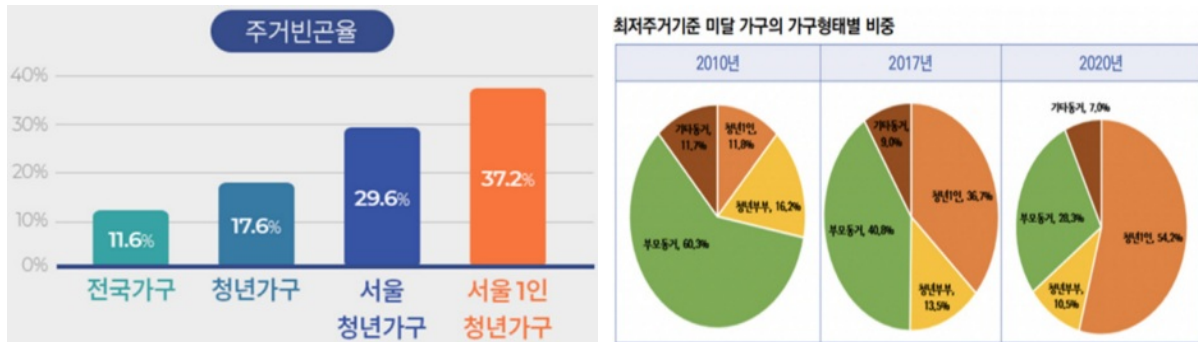


자료 : 국토연구원,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2.

RIR은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을 말하며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RIR이 3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전체 대비 청년의 RIR 지표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0년과 2020년을 대비하였을 때 청년 1인가구의 과부담 비율이 높아짐과 청년층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는 매달 지출하는 주거 대출 이자, 원금상환, 월세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66.8%), 매달 지출하는 관리비의 부담이(57.9%)로 응답하여 주거비 부담에 대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주거권 측면(최저주거기준 및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자료 : 국토연구원,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2.

202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난다. 매해마다 전국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낮아지는 데에 반해 서울의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서울의 물가, 주거환경 등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의 작용이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 상승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년주거복지의 필요성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중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를 살펴보면 주거복지와 관련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주거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 및 법률안이 필요하다.

1) 청년주거의 불안정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75.9%가 전·월세 가구이며, 일반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임에 비해서 청년가구의 거주기간 1.4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년층은 보다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거주지를 불가피하게 옮겨나가는 현실에 처한다.

2) 임대료 지출 과다

20~34세 청년가구 RIR은 2017년 18.9%에서 2020년 20.1%로 상승하였고 21년 서울 청년 1인가구 RIR 30%초과 가구는 35.4%로 서울 청년 1인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월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출한다.

3) '지옥고' 주거빈곤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31.2%에서 37.2%로 증가하였고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주거빈곤율이 감소된 한국사회 전반적 경향과는 다르게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역주행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청년들은 최저주거기준에조차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일명 '지옥고'인 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된다.

4. 안정적 청년주거복지 정책의 세부내용

1) 최저주거기준 제고

- 면적(현행 1인가구 14m²) 중심의 최저주거기준에 물리적 기준을 포함한 점점 기준을 수립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제고한다.
- 4인가구를 중심으로 보는 현재 기준에서 벗어나 1~2인가구 등 여러 유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 사람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적당한 넓이에 대하여 다양한 논란이 따르지만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주거 공간으로 6평을 명시하고자 함

2) 비주거시설 별도의 규제 항목 수립

- 최저주거기준 미적용 대상인 비주거시설에 별도의 규제 항목을 수립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한다.
- 소방 설비시설, 화재점검표 등 점검과 관련하여 감시·감독이 미비하기에 점검표 및 항목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 현 개정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고시원은 전용면적 7m²이상으로 되어있지만 명확한 점검 시행과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며 건물 신축 뿐 아닌 증축이나 수선, 용도 변경 등의 경우 적용되지만 기존 고시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3) 현금성 지원

- 임대차 보증금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된 삶의 여건을 제공한다.
- 월세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닌 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4) 사회적 주택 활성화

- 사회적 주택인 셰어하우스, 공유주거 환경 등 입주 시에 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 1인가구 13.6%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62.1%가 외롭다고 인식한다는 지표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은 낮지만 외롭단 인식이 높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는 비율이 적지 않기에 관계망에 대한 또 다른 비전으로서 주거를 제시할 수 있음

III. 정책적 함의

1. 기대효과(4가지)

- 1) 기회 - 사회적 주택인 셰어하우스, 공유 주거환경 등에 거주함을 통해 다양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형 그룹을 형성을 통한 사회적 관계 단절과 청년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계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 2) 공정 -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별도의 규제항목 적용과 주거시설의 최저주거기준을 제고하여 역주행하는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을 안정화하여 어떠한 거주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쾌적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한다.
- 3) 자립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하여 임대료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청년들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물질적으로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촉진한다.
- 4) 여유 - 보금자리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하여 안식처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청년들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 결론

청년이라는 수식어는 연관키워드로 ‘헬조선’, ‘N포세대’, ‘흙수저’ 등 다양한 부정적 신조어가 뒤따른다. 이는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짐작하게 하는데 사회·경제적 고립으로 관계형성이 저해된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특히 저성장과 경제둔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주거빈곤까지 이어지는 행태를 보인다. 청년세대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연애, 결혼, 취업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 치솟는 집값에 설자리가 없어지고, 명확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주거 환경에 의해 살 자리가 없어지며, 기업의 고용 축소 등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는 여유가 없어진 삶에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펼칠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내일을 준비할 다음자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본 정책이 시행된다면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여유를 줄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제고하여 질 좋은 주거의 환경을 제공받고, 비주거시설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쾌적한 보금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보증금 이자를 지원 받아 부가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주택의 입주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망 형성이 가능해진다.

청년세대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놓치며 여유까지도 잃는다. 정서적 안정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가지는데 현재 주거의 불안은 인간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그릇된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역주행하는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을 잡고 삶의 질을 안정화 할 수 있다. 이에 사회가 개인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사각지대에 가려진 청년들에게 우리사회가 공공의 역할을 정립하고 보편적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된다. 이는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청년가구가 체계화 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누리며 주거가 본래 모습인 안식처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차별 없는 우리 동네 놀이 환경 조성

- 놀이속에 자리 잡는 더불어 민주주의

노연수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

1. 통합놀이환경의 필요성

○ 놀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장애아동의 놀 권리

저출생, 고령화 시대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체로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 아이들에게 놀이는 선택이 아닌 성장·발달과정에서 필수적 요소이다. 놀이는 아동 스스로 자기 삶에 권한을 갖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까지 겹치면서 오늘날의 아이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공 돌봄 또한 실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더 빨리 노출되고, 수동적 수용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은 실외에서 더 넓은 연령층의 또래를 직접 접하고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며 사회성을 기른다. 특히 놀이터에서 신체적 활동을 하며 성취를 배우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한다. 도전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내게도 걸음마를 곧잘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9살 아들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날 동안 놀이터에서 장애아동은 만나지 못하였다. 과연 장애아동은 어디에서 실외놀이를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실외 통합놀이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2개국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들의 놀 권리(제31조)¹⁾와 장애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23조)²⁾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 1)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2)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 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우리는 장애아동의 놀이환경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엄선희 공익변호사는 2019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놀이터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놀이권은 장애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에 해당하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위해 동등하게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의미 있는 놀이공간과 시설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³⁾

※ 통합놀이터란?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와는 다르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동등한 주체로 함께 즐기는 놀이터이다. 무장애놀이터는 ‘장벽이 없는(BF, Barrier Free)’를 의미하여 물리적 장벽,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 등을 허물어 장애아동이 놀이터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성한다.

통합놀이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놀이터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이 놀이터를 동등하게 이용하는 것과 함께 동등한 놀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을 만들고 ‘함께’ 이용하며 놀 수 있도록 하여 통합놀이를 실현한 공간이 바로 통합놀이터이다. 따라서 통합놀이터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기초하여야 한다.⁴⁾ 장애아동과 동행한 비장애가족, 비장애아동과 동행한 장애인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유년기부터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교류하며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

2. 국내 통합놀이환경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만 14세 미만 전국 장애아동수는 61,170명으로 우리나라 아동 중 약 1%를 차지한다.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77,949곳이다. 이 중 통합놀이터는 약 0.03%에 불과한 23곳이다. 장애아동을 고려한 놀이공간과 시설물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통합놀이터의 부족은 숫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분리로 볼 수 있으며 장애감수성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원인과 단면을 동시에 드러낸다.

3. 통합놀이환경 조성 시 고려할 점

플레이월드(playworld)⁵⁾는 통합놀이터의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참조 : inclusiveplayground.org)

제 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 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엄선희.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pp.24-25., 2019.

4) 김남진.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pp.19-20., 2017.

5) 1971년 생긴 미국의 놀이시설 브랜드로 2012년부터 통합놀이시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다. (www.playworld.com)

〈그림 1〉 통합놀이터 7가지 원칙



자료 : 플레이월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놀이터의 본질인 놀이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아동의 모험심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아동 스스로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의 특성과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고 당사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박현철(2022)은 좀 더 큰 범주의 통합놀이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장애 아동의 유형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로 구분하고 유형별 놀이특성과 고려사항을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2〉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별 놀이특성과 고려사항⁶⁾



6) 박현철,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p16.,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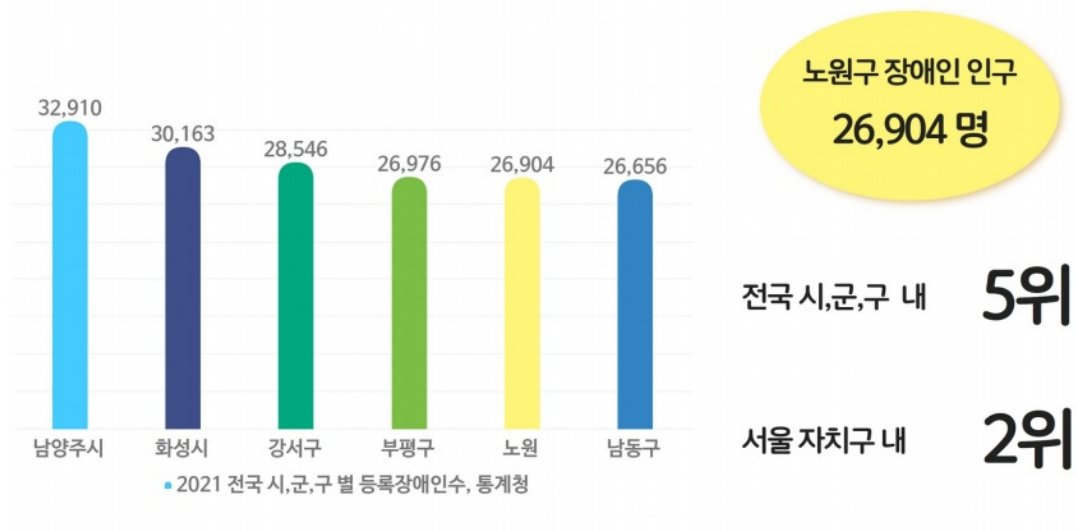
4. 노원구 통합놀이환경 개선 방향 제시

○ 노원구 장애인구 현황

노원구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각별히 필요한 지역이다. 장애인 인구 26,904명⁷⁾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 중 5위이며, 서울 자치구 중에는 강서구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원구 전체인구 507,076명⁸⁾ 중 약 5%를 차지한다. 또한 노원구 만 14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544명으로 노원구 만 14세 미만 아동 수 14,591명 중에 약 3.7%이다.

통합놀이환경은 아동, 특히 장애아동에 국한되어서 대상을 정하면 안 된다. 전체 아동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돌봄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 단위로 수요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만으로 그 수혜 대상을 한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림 3〉 노원구 장애인 인구 현황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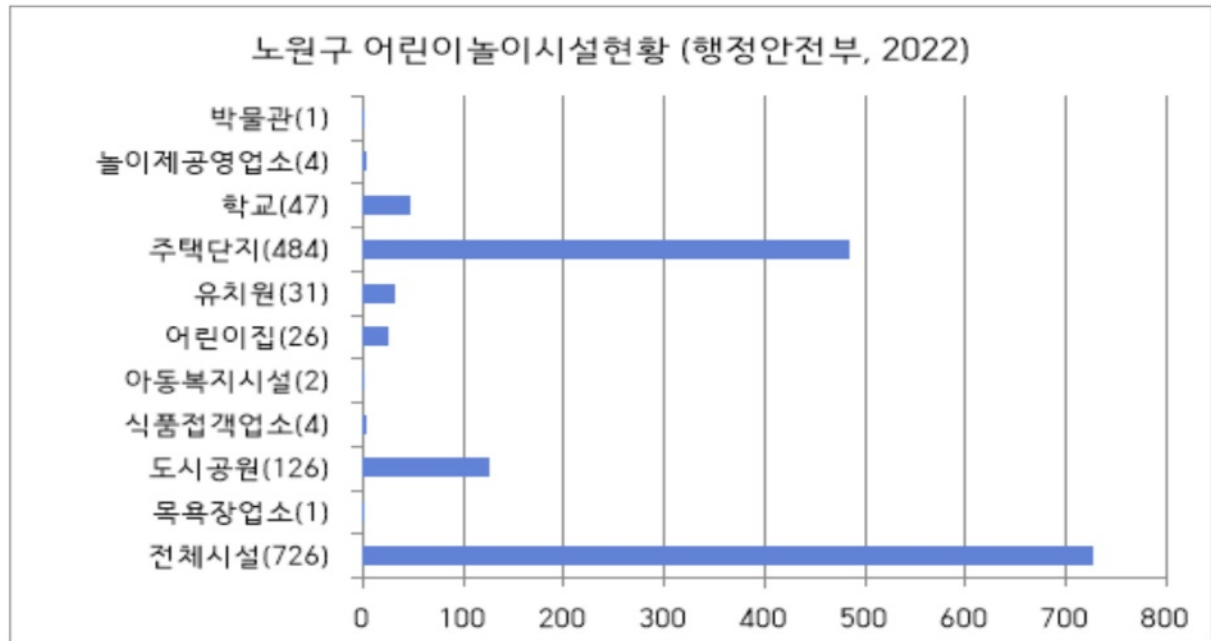


7) 통계청, 시군구별 등록장애인수, 2021.

8) 통계청, 시군구 연령별 인구수, 2022년 8월 기준 2021년 노원구 총 인구는 510,956명이다.

○ 노원구 놀이환경 현황

〈그림 4〉 노원구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노원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은 총 726곳이다. 이 중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실내 1곳, 실외 1곳뿐으로 무척 열악하다.

올해 노원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이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조사를 진행하였다.⁹⁾ 노원구의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 모두 관내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 공통되게 지적하며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장애아동 놀이환경 개선 관련 평가문항이 지역사회 만족도·삶의 만족도·행복감과 아동 친화도를 평가하는 유의한 관계를 갖는 지표였다는 점이다. 소수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주민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정책시행을 위한 후보지 선정

노원구 어린이 놀이시설 소관부서인 여가도시과와 함께 기존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통합놀이시설로 개선해 볼 후보지를 살펴보았다. 상계1동에 위치한 ‘늘푸른 어린이공원’이 적합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우선 인근에 복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으며, 올해 수락산 무장애숲길이 완공되어 이동약자를 포함한 많은 구민이 찾는 지역이다. 또한 장애인통합체육시설인 시립 어울림체육센터도 2025년 준공 예정이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원구

9)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2차 노원구 아동친화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1.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계획에서도 2023년 이후 예정지로 기선정되어 있으며 부지가 타 놀이터에 비해 넓어 다양한 놀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놀이환경 개선 방향 제안

구체적으로 통합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향을 3가지 관점에서 기대효과와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놀이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통합놀이터의 조성 취지를 살리려면 차별 없이 노는 방법에 대해 아동과 함께 할 활동가가 필요하다. 놀이의 질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실외까지 돌봄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여 세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포착하고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놀이시설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지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의 스펙트럼에 대해 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올해 처음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Public Design Festival)에서 작가가 고안한 시소이다. 이와 같이 작가와 협업하여 공공미술 오브제로서 놀이 환경 조성한다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이는 광장의 역할을 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5〉 작가가 제안한 놀이시설 사례-시소



5. 해결과제

이처럼 효능이 큰 통합놀이환경 개선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 예산 확보

세이프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2014년부터 아동 놀이환경 개선사업인 ‘놀이터를 지켜라!’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합놀이터 조성 예산이 6~8억 정도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자치구 단위에서 단일놀이터에 집행하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다. 통합 놀이환경이 아동의 참여권, 장애인 복지, 가족 중심의 활동, 마을주민의 유대감 강화 등 복합적 분야에서 효과가 있기에 각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예산을 마련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개인이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위해 후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를 알리고 민간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담론 형성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생소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98%를 위한 기존의 디자인에 2%를 위한 시각을 더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 의의이다. 그러려면 당사자와 소통하고 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한 접근방법인 통합놀이터 또한 이 놀이시설을 사용하고 누릴 주민과의 담론 형성이 필수이다. 사업에 대한 안내, 수요조사, 의견 청취와 보완 등 적극적으로 주민과 교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 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관련 법 개정

작년 한 TV 프로그램에 조수미 성악가가 나와 2014년부터 해 온 휠체어 그네 기부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기부된 휠체어 그네를 맘껏 타며 환하게 웃는 지체장애의 아동의 모습이 기사화된 바도 많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설치한 그네가 사실은 얼마 후 하나씩 철거되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유는 휠체어 그네를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다는 안전인증기준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직 국내법에는 장애인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이 없다.

놀이터를 위한 규정은 「어린이 놀이시설법」, 「어린이 제품법」, 「주택법」, 「도시공원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아동을 놀이터의 이용 주체로 하는 시각에서의 내용은 없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¹⁰⁾과 강선우 의원¹¹⁾이 노력하였지만 아직은 바뀐 바가 없다.

○ 놀이시설의 개발과 이를 위한 지원 근거 필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 시킬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내 놀이시설 산업 또한 발달되지 않았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놀이기구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놀이기구에 대해 사전에 안전인증과 설치검사를 강제하고 있고, 2년 주기로 공장과 제품을 모두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미국의 경우에는 임의 인증을 하고, 인증기관도 민간이다. 공장심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지며 EU는 이에 제품검사를 5년 주기로 더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안전인증 단계가 엄격하여 각기 소재와 색구성이 다를 뿐, 그네, 미끄럼틀, 시소 그리고 약간의 구름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천편일률 놀이터가 보급되고 있다. 법령의 지나친 규제보다 업체에서도 신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6. 참고 사례

○ 국내 사례

〈그림 6〉 국내의 참고 사례로 선정한 어린이 공원



도봉구 <똑딱똑딱놀이터>
서울 최초 모험놀이터, 놀이지도사 상주, 2017



서울어린이대공원 무장애놀이터 <모험의 나라>
휠체어를 타고 진출입가능, 2012



서울 숲 무장애 놀이터 <삼상 거인의 나라>
우리나라 최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2006

도봉구의 똑딱똑딱놀이터는 놀이지도사가 주말을 제외하고 상주하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 놀이 인력을 배치한 사례이다. 두 번째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무장애놀이터는 휠체어를 타고 진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히 놀이의 요소가 없어 인기가 없다. 마지막은 서울숲

- 10) 장애아동의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해 설계 및 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합법화를 위해 「장애아동복지법개정안」 입법발의
- 11)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하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상 거인의 나라이다. 소재나 마감 면에서 아이들이 놀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고 놀이시설이기 보다 조각품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

○ 해외 사례

〈그림 7, 8〉 미국, 독일 놀이시설 사례



텍사스, Yellowjacket Park



독일, Schwanheimer Waldpark 공원 내 놀이터, 2007



독일, Heinrich-Kraft공원 내 Tabaluga 놀이터, 2012

미국의 놀이시설 제작 회사 플레이월드(playworld)가 텍사스에 조성한 놀이터를 보면 장애인 부모가 휠체어를 타고도 아동을 보호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통로의 폭이 넓다. 시각장애의 경우 모두가 100%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색채 대비를 높이고 촉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독일 사례의 경우 놀이터 전체 요소를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소와 그네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설치되어 있다. 제약이 있어 사진 자료를 첨부

하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playworld를 검색하면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직접 놀이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7. 맺으며

어렸을 때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은 것은 몸과 마음에 각인이 되어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부족함이 아닌, 다양성으로 장애를 인지하고 친구로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가치를 아는 민주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란다. ‘놀이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아동이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나가 놀고 싶어서 가슴 뛰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본다.

참고문헌

- 박현철,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2022.
-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2차 노원구 아동친화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1.
- 유조안 외,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21.
- 박현선, “놀이친화적 환경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놀이공간 조성과 지역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2020.
- 황옥경·김정화·명준희,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학교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초점집단 면접연구를 중심으로”, 2019.
- 김남진,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 2017.
- 장현아, “통합놀이터의 필요성”, 2017.
- 배용호 외, “무장애통합놀이터 매뉴얼-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2015.
- <https://playworld.com/why-playworld>

앞으로 메타세종!

장규영 지역당원

1. 디지털 메타버스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통치형태를 결정하고, 국가 통치 권력을 형성하며, 형성된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려고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다스리고 국민이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국민자치의 원리이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국민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치제도이기도 하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국가 창설로부터 국가 권력 형성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치과정에 작동하는 원리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User Generated Content)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가상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과 인간적으로 교류를 하고 현실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은 없다.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데 널리 쓰인다.

〈그림 1〉 메타버스 개념의 이해



〈그림 2〉 메타버스의 주요 유형

[메타버스의 주요 유형]

유 형	주요 기능	사례
사회관계 형성	· SNS·게임에 집단놀이, 문화활동 등 접목	로블록스, 제페토
디지털 자산 거래	· 가상부동산이나 가상상품 등을 직거래	디센트럴랜드, 어스2
원격협업 지원	· 원격 의사소통 및 다중협업 지원	MS 메시, NVIDIA 옴니버스

SNS라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중요한 정보가 대중에게 빠르게 퍼지고 ‘전자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탄생했다.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전자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해 각 개인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투명하고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정보의 다양함이 반드시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정치인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긍정적 결과만을 도출하지 않고, 더불어 오히려 인터넷이 독재체제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거운동 미디어를 메타버스로 활용했다. 다양한 계층과 경로로 시민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나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경선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의원이 메타버스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메타버스라 부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이미 다가온 현실’인 메타버스를 미래 기술로 지목했고, 파급력이 큰 기술로 지목받고 있다.

〈그림3〉 메타버스 활용 사례



▲ 제20대 대선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캠프 입주식



▲ 닌텐도 '모어비오 동물'의 숲'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2. 디지털 메타버스 민주주의의 활용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서 메타버스가 일종의 정치적, 행정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필요하고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선거의 영역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후보와 정당이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또한 유권자 역시 누가 가장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를 스스로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인터넷과 이메일, 문자와 SNS 등 디지털매체를 통한 선거운동과 의정활동이 광범위하고 활발히 진행 중이며, 후보가 직접적으로 유권자와 대면하여 소통 할 수 없는 시·공간의 한계를 이러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 측면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 들어간 총 비용은 1조700억원이다. 이는 경기 김포시(1조352억원) 예산과 비슷하다. 또한 전체유권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은 4,600억원에 달하는 등 선거에 있어 낭비되는 세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비대면 온라인 선거를 진행 한다면 높은 투표율과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및 벽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4〉 선거 관련 비용

(단위: 억 원)

합 계	투·개표 등 선거 비용	보전·부담비용 (정당·후보자)	선거보조금 (정당)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정당)	재보궐선거 비용
10,700	5,113	5,063	425	32	67

지방선거예산 (a)	제6회 지선 투표율	유권자(b)	유권자 한 명의 투표 비용 (a/b)	버려지는 세금
1조700억 원	56.8%	42,907,715명	25,000원	4,622억 원

둘째, 정당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는 기관으로서 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예비경선을 하며, 차기 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 창출을 목표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각 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제도를 당헌과 당규에서 다양하게 제도화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경선에서 모바일 투표 등 아직 본 선거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다양한 디지털 선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각 정당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의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이나 당원들의 많은 정치 참여를 중점으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메타버스의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의회 민주주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은 각자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적 의사나 운명을 결정하는 공적 활동을 한다. 만일 의회가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그 밖의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사당에 신체·물리적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라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원격회의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허용될 수 있다(「국회법」제73조의2). 메타의회가 실현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구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진 중 지역구 보다 국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국회와 지역구를 이동하며 보내는 시간도 상당하다. 메타의회를 통해 지역구 근무 보좌진의 비중을 늘리고 이동간 소요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지역구 의정활동 및 조직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으로 ‘메타행정’을 활성화시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인 행정관행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행정관행으로 자리 잡고,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란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행정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활성화 시킨다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메타버스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행정적 측면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 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함에 따라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 지방의회의 디지털화

안정화되고 보안성 강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원들의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며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불필요한 의정활동 비용을 축소시킨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으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2022년 1월 발표했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세종시는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2023년 까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시범도시 대상지가 5-1생활권인 합강리 일원이지만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세종시 공공의 모든 분야에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주민 참여와 토론, 문화,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격차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존 읍·면 지역과 신도심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전혜경 지역당원

저는 도서관운동가입니다.

저는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조직된 시민들이 민주주의적 훈련과 토대를 쌓아나가는 중요한 기지입니다. 북유럽의 근대화과정에서 말해주듯 도서관은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동떨어져 버린 울산시 중구는 그 기능을 수행할 제대로 된 권역별 도서관이, ‘걸어서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도서관운동을 할 거점 공간이 없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근간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2018년 네 아이의 엄마인 저는 뜻을 함께하는 8명의 이웃과 함께 울산 중구 남외동 ‘주민자치 도서관’ 건립추진 비대위를 구성, 2019년 주민서명운동을 기점으로 3천5백명 주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았고 지난 5년간 시청과 구청을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닌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2022년 8월 주민자치도서관인 남외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중구는 안타깝게도 주민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년간 남외동 주민들은 이렇게 활동하였습니다.

주민자치도서관건립-서명운동진행, 부지 선정을 위한 위치 검토, 고군분투하여 확보한 100평의 소중한 공간을 200평 같이 활용하고자 타 지역 도서관 답사 및 벤치마킹, 주차장에 설립한 도서관의 운영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방문, 취재하고 자료 취합, 주민의견을 설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제안, 두차례의 공청회 실시로 주민의견 90%이상 반영 (1층의 천고가 높은 점을 감안-복층설계로 추가공간확보,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좌식 및 바닥난방,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도로면(숨은 공간)을 활용해 계단식 강의실 설치 제안, 공사 중 수차례 현장점검 등

피땀어린 주민의 노력으로 지어진 주민자치도서관입니다.

아래는 ‘주민 뜻대로 못 짓는 게 현실’이라는 2010년부터 약 12년 동안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도서관도 주민 뜻대로 못 짓는 게 현실” - 경향신문 (khan.co.kr)

- 인터뷰 장소로 일월도서관을 지정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역에서 도서관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싶었다. 도서관 건설을 추진하며 공원과 연결된, 카페 같은 도서관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부터 무수히 많은 규제를 어겨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페다. 도서관 전체를 하나의 개방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브랜드의 카페를 넣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무조건 최고가(價)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 결과를 보라.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음료를 사지 않고 밖에서 유명 브랜드 음료를 사서 들고 온다. 도서관 내부 카페는 적자가 나서 영업을 포기한다. 결국 다시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카페는 문을 닫는다.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도서관은 책도 볼 수 있고, 카페도 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도무지 규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일월도서관 내 카페는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다시 최고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왜 이렇게 많나? 개선을 요구해 봤나?

“중앙관료 입장에서 규제가 곧 직위이고, 권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현장 상황은 모르면서 규제 조항만 쳐다보고 있다. 결국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부터 위법을 해야 한다. 이를 도운 직원들도 전부 감사를 받고 징계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누가 선뜻 나서서 그런 일을 하겠나? 지방자치를 30여년 동안 했지만 비현실적 규제에서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힘들게 지어진 소중한 공간이지만 2022년 6월 정권이 바뀌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스스로 모인 자원봉사자 143명은 현재 도서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기존의 정식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서관에서 서가 배치 및 다양한 봉사를 도와줄 수 있고 소정의 봉사료도 지급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중구청은 도서관이 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다.

남외어린이도서관은 공립이지 사립이 아니다. 하지만 ‘남외어린이도서관 지킴이’ 143명이 도서관에서 봉사하려면 10명~15명으로 나눠 독서동아리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한 개의 단체가 6개~7개의 동아리로 나눠져야 했고 이마저도 3개월에 한번씩 계속 신고를 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봉사계획서 제출-검토-승인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남외어린이도서관이라는 단체가 중구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로 주체성의 한계를 느낀 봉사자는 떠나기도 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보듯 울산시 중구청은 불공정의 장벽을 세워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

화시켜가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그것 모두가 기득권의 욕심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최고의 봉사를 헌신적으로 해왔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선거를 따로 치른다.

이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한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선거에 당선된 자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주민자치의 역설적 사회현상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과 행사가 ‘국민편의위주’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회혁신을 그동안 공공기관이 주도하였다면 최근에는 민간 사회 혁신가들이 주도하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산시 중구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려면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어야 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남도지 발대식 영상물 상영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나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그들의 엄마와 아빠 143명은 남외어린이도서관에서 봉사를 위해 모였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발선에 다 함께 서 있습니다.

- 1) 저는 남외어린이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참여와 봉사를 통해 저와 같은 수많은 ‘도서관 운동가’가 양성되고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서관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 2) 저는 남외어린이도서관과 같은 권역별도서관을 울산시 중구지역에 확충하고 권역별도서관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3) 저는 남외어린이도서관이 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다양한 업무 사례를 미디어매체로 만들어 도서관 보급과 운영 개선에 힘쓰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 4) 저는 남외어린이도서관을 울산 중구 복지정책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울산광역시 전체에 도서관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과제

2022년 남외어린이도서관지킴이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2023년 도서관활동계획수립을 위해 11월 27일 총회를 실시하고 2022년 활동내용 평가와 검증, 내년에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을 각 동아리 별로 제안 받아 검토한 후 주민의견 제안서를 울산시 중구청과의 12월 정기간담회 실시 전 제출하고 내년 남외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도 도서관이 주민 자치로 운영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례와 결과로 보여 주고 개선하기위한 점을 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입니다.

2022년 남외어린이도서관지킴이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동아리명 : 책만대장경, 미리내(중학생들의 재능기부)

- 초등학생 대상 매주 토요일, 일요일 : 학습 멘토링, 독후활동멘토링 수업진행





2) 동아리명 : 나뉘모개 (어머니들의 재능기부)

- one day class - ex. 자이언트 안 가방 만들기
- 행복해지는 다이어트 - 건강 토크콘서트 진행
- 전주도서관여행 : 견학 활동 2022.11.10.

3) 동아리명 : 아빠가 점심주까 (아버지들의 재능기부)

- 정지말공원에서 아버지들이 분기별로 동네아이들에게 주말 점심 봉사 (2023년 시행 예정)

4) 동아리명 : 나는 초딩나뉘모개 (초등학생들의 재능기부)

- 또래상담가 교육과정 수료, 또래상담가로 활동, 또래들의 고민을 들어준다



5) 남외어린이도서관지킴이 전체 활동

모든 동아리가 함께 정기적인 도서관 내외 환경미화와 정화



6) 전체 활동 : 분기별 정기총회, 중구청과의 매월 정기 간담회



7) MOU 체결 : 숲과 정원(산림청 사회적협동조합)

- 트리클라이밍, 멍키클라이밍, 해먹그네 등 다양한 숲체험활동



8) MOU 체결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2023년 도서관진행프로그램 - 예산 2,000만원



나의 지역 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 위기에 서 있습니다. 도서관운동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유럽의 변방이었던 북유럽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19세기 북유럽의 사회운동가, 노동조합 활동가, 계몽운동가들은 도서관을 통해 민중의 학습과 계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세기 초에는「민중도서관지원법」을 시행, 도서관 문화가 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도서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졌고 시민들의 가장 높은 도서관이용률로 그 시스템의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독서 문화와 높은 문해력(Literacy)**은 종교개혁, 스웨덴과 덴마크의 교육개혁, 핀란드의 평등과 신뢰의 문화로 이어져 유럽의 변방이었던 북유럽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 미국은 공공도서관제도의 틀을 흡수하였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도서관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높은 문해력은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높은 문해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규범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문해력이 높은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저는 도서관운동을 통해 주민자치의 가치를 입증하고

우리나라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자료인용 : 윤송현, 학교도서관저널,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경차 주차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김만수 지역당원

□ 제안이유

날로 늘어가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 중 실생활에서 느낀 경차 주차구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 문제를 제안함

□ 현 「주차장법」

경차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표 첨부

〈표 1〉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전문개정 2010.10.29.]

[시행일 : 2019.3.1.] 제3조제1항제2호

〈표 2〉 경차 전용 주차장 주차구획 규정

구분	너비	길이
평형주차형식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평형주차형식 이외의 경우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표 3〉 타 주차구역과 너비 및 길이 비교(평행주차형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표 4〉 타 주차구역과 너비 및 길이 비교(평행주차형식 이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개정후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5미터 이상(개정후 2.6미터 이상)	5.1미터 이상(개정후 5.2미터 이상)
장애인 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특징	2019년 3월 1일 이후로 개정된 규정으로 변경될 예정	

자료 : <https://m.blog.naver.com/amanoparking/221406523227>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 문제점

경차 주차구역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생기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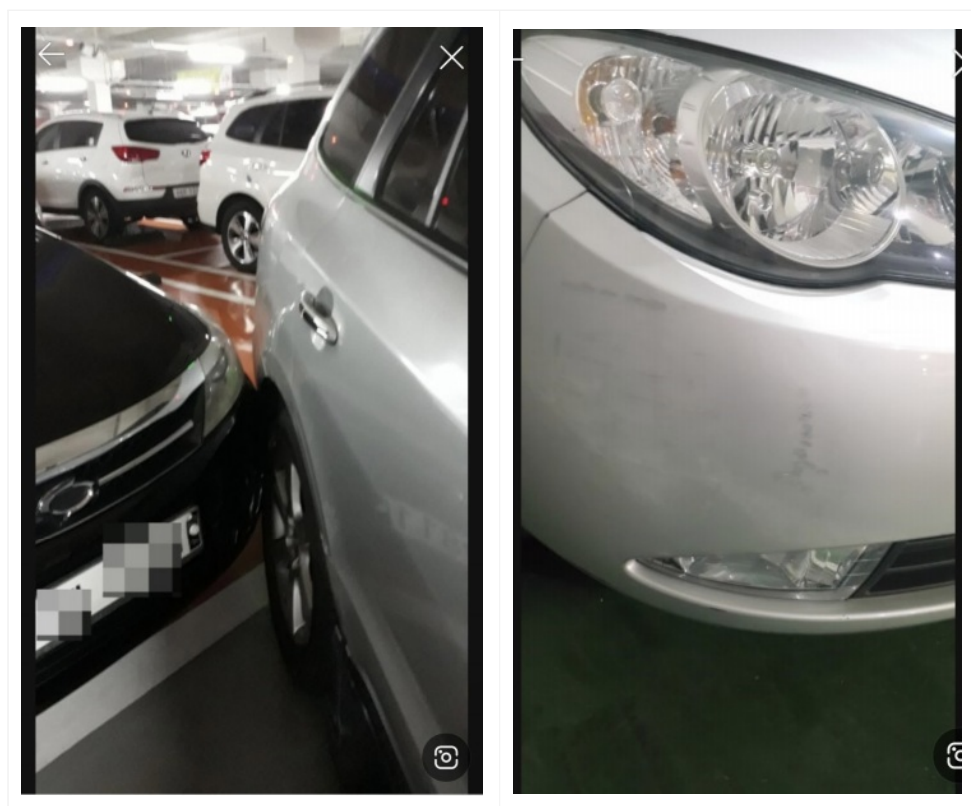
1. 통행 불편





실내 공영 주차장의 경우, 경차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로 인해 양방향의 통행이 어려워져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2. 사고 발생



맞지 않은 곳의 주차로 인해 빈번한 접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3. 차주 간의 다툼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과 경차가 만났을 시 서로 대졌다고 싸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 때로는 경찰까지 부르는 사례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 해결 방안

- 불법주차 스티커와 같이 “경차 주차구역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제작하여 일반 차량 주차 시 스티커 부착
- 경차 크기에 맞는 센서를 부착, 일반 차량 주차 시 경고음 울림
- 장애인 주차 구역과 같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차 주차구역 위반 법 조항 개정

□ 기대효과

- 실내외 양방향 통행이 원활해질 수 있다
- 접촉 사고 사례가 확 줄어들 수 있다
- 경차 주차구역에 경차 차주와 일반 차량 차주의 다툼이 해소될 수 있다

□ 느낀 점 및 결론

이번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에 지원하며 ‘과연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 ‘뭔가 전문가적인 포스가 느껴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같은 여러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지원해서 시작한 만큼 끝까지 잘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제일 먼저 어떤 주제를 정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내가 생각하는 정책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산재해 있는 불편함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걸 가장 우선시하는 정치적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을 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무엇이었고 주위 사람들의 불편함은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다가 이번 기회에 제안한 경차 주차구역에서의 여러 불편함을 목격하고 느꼈다.

그래서 담당 시청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재로선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이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기 위해「경차주차구역에관한법률」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중간발표 후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이해관계를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도교수님의 조언

이 있었다. 경차 운전자보다 일반 운전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경차는 주차비나 통행료 등 여러 혜택을 보는데 일반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차까지 경차가 혜택을 봐야 하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현재 모든 공영 주차장에 일정 부분 경차 주차구역이 들어간다. 실외지역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실내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반 차량이 댈 수 없는 작은 공간에 경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대부분이다.

경차는 일반 차량 주차하는 곳에 주차해도 통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 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불편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 차량과 경차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조건 법 개정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기보다 위에서 제시했던 해결 방안을 차례대로 적용해 보았으면 한다. 일단, 불법주차 스티커와 같은 “경차 주차구역입니다”라는 경고성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경차주차구역에관한법률」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님이 있다면 좀 더 다듬고 개선해서 좋은 정책으로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직업계 학교의 미래지향적 운영방향

복혜정 지역당원

고졸 취업의 핵심 통로로 적극 지원한 직업계의 취업률이 점차 줄어들고 신입생 충원율이 역대 최저치며 사회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산업 기술의 고도화로 과거 각광받던 직업들의 소멸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이때, 첨단 산업 육성에 발맞춰 직업계고 학과 미래지향적 학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1. 제안배경

- 고졸 취업의 핵심 통로로 적극 지원한 직업계의 취업률이 점차 줄어들고 신입생 충원율이 역대 최저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영평가지표에서 고졸 취업 성과 관련 항목 배점을 줄이거나 삭제하고 있어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직업계 학교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미래 직업교육 체제 구축, 맞춤형 교육지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직업계고는 최근 몇 년간 신입생 미달 사태에 직면해있고, 이로 인해 학교경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성장과 사회혁신을 이루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내실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함.
- 이에 직업계고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산업 기술의 첨단 산업에 발맞춰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지원과 다양한 학과 개편으로 미래 직업교육으로 전환하여 직업계고 발전과 직업교육 활성화
-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직업계고와 인천의 직업계고의 전반적인 운영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 직업계고의 교육 개선과 함께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II. 직업계 고등학교 현황 및 분석

1. 직업계 고등학교

직업계고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교과를 운영하는 일반고(구 종합고)의 고등학교이다.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특징

취업위주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능력 중심의 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 직업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가. 특성화고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공식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다.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한다.

다. 차이점

특성화고의 경우, 졸업 이후 ‘특성화고 전형’으로 바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마이스터고는 3년 직업 활동을 한 후에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마이스터고는 취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산학협력, 기업과의 채용 협약 등으로 취업률이 100%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

2) 직업계고 학과

최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 학과 개편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2016년 이후부터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중

심으로 학과 개편을 하고 있다.

가. 직업계고 교과군 별 학과

직업계고는 총 578개교에서 1,769개 학과가 운영 중(2020년 기준)

- 경영·금융 교과군에 속하는 학과가 18.9%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교과군과 기계 교과군에 속하는 학과가 각각 14.9%, 13.8%로 나타남
- 디자인·문화콘텐츠 7.9%, 농림·수산해양 6.7%, 건설 6.4%, 정보통신 6.1%, 미용·관광, 레저 6.0% 교과군 학과 비율이 높음

나. 직업계고 변경 학과

학과 개편 후 교과군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교과군 별로 상이함

- 경영·금융,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교과군 : 교과군으로 이탈, 융합
- 디자인·문화콘텐츠, 농림·수산해양, 기계, 건설, 전기·전자 : 개편 후 동일하게 유지

다. 직업계고 학생, 학교 현황(2021년 기준)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업계고 학과(교과군) 분포 변화

- 상업계열을 대표하였던 교과군인 ‘경영·금융’,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교과군의 축소
- 디자인·문화콘텐츠, 농림·수산해양, 기계, 건설, 전기·전자 교과군은 개편 후에도 동일한 교과군 유지

〈표 1〉 직업계고 현황

유형	학교수	(비율)	학생수	(비율)
마이스터고	52	(2.19)	18,396	(1.38)
특성화고	463	(19.49)	196,008	(14.73)
종합고 (전문반)	68	(2.86)	27,526 (9,958)	(2.06) (0.74)
계	583	(24.54)	241,930 (224,362)	(18.18) (16.86)

2.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교육

1)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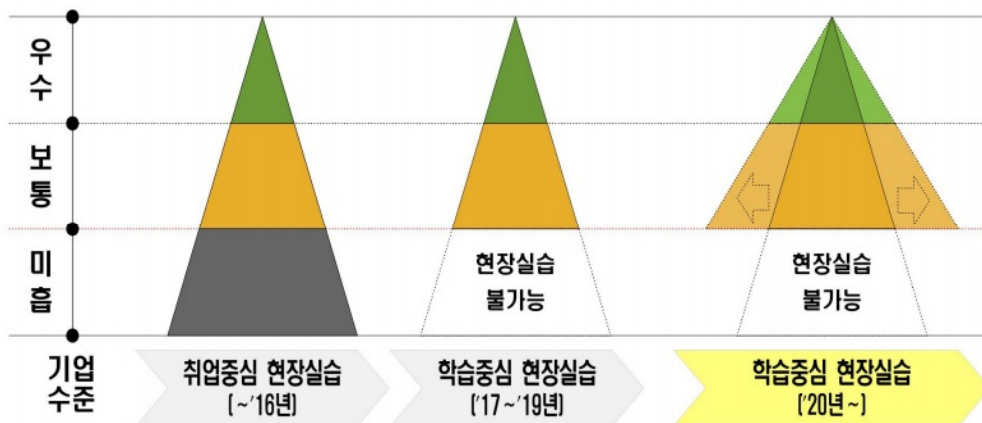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으로만 현장실습 및 취업이 가능 하도록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현장실습·취업이 감소되고 있다.

가. 현황

취업역량이 낮은 학생들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도입에 따라 미흡한 수준

-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의 변화에 따라 강화된 안전기준
- 체계적인 학습 제공 등의 의무 확대로 역량이 부족 기업은 현장실습 참여 어려움
- 고졸자 채용의 유인 부족 등으로 고졸 채용 주저

〈그림 1〉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의 원인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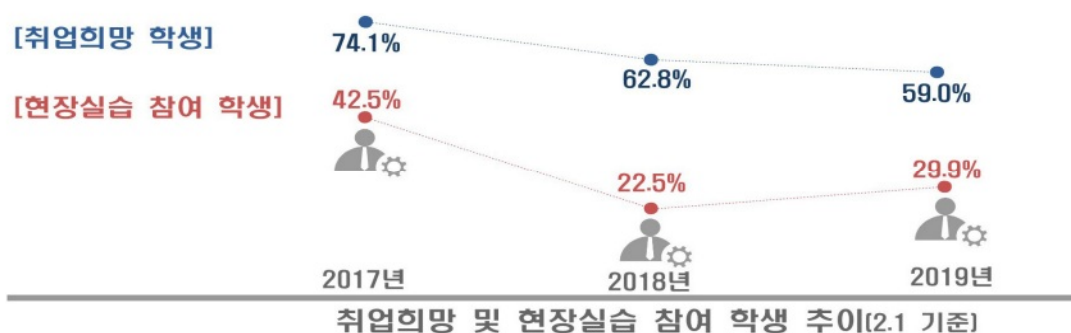


나. 현장실습 안전사고

현장실습 안전사고(2017.11.) 이후 ‘학습중심 현장실습’ 도입(2017.12.)에 따른 후속정책으로 학생안전등은 개선 되어가고 있으나 현장은 취업지원에 어려움

-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년 동기과 비교해 증가
- 희망학생의 50% 정도에게만 현장실습 기회제공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졸채용 수요가 대폭 감소

〈그림 2〉 취업희망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추이



※ 현장실습생 취업 전환율 약80%(최근 3년간 평균)

2) 직업계고 직업 교육

가. 취업전 중등직업교육

- 실무중심 교육으로 체질개선을 위해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
-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전문가 직업계고 교사 확대

나. 취업 시 중등직업교육

-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 및 민간기업 취업 지원
- 부처협약형 직업계고 시범운영

다.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지원

- 고졸 취업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
- 능력개발기회 확대

3. 직업계고 취업

최근 직업계고는 취업률에 비해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학생이나 직업에 대한 연장으로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요구가 진학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1) 직업계고 취업률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2020년 50.7%)로 전체 취업률로는 직업계고 졸업자 78,994명 중 취업자는 22,583명, 진학자 35,529명, 입대자 1,809명, 제외 인정자는 862명이고 전년 대비 4.7%p 증가하였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55.4%로 전년 50.7% 대비 4.7%p 증가
-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12개월 후 유지취업률 65.0%

* 여성 73.2%, 남성 59.3%로 남성 취업자는 2,183명(14.8%)이 취업 중 군 입대

〈표 2〉 2020년 대비 2021년 졸업자 졸업 후 상황

(단위: 명, %)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	상세 자료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공공DB 연계)	2020	50.7	42.5	27.7	89,998	24,938	38,215	1,585	970	24,920
	2021	55.4	45.0	28.6	78,994	22,583	35,529	1,809	862	18,211
	전년 대비	4.7%p ↑	2.5%p ↑	0.9%p ↑	△11,004	△2,355	△2,686	224	△108	△6,709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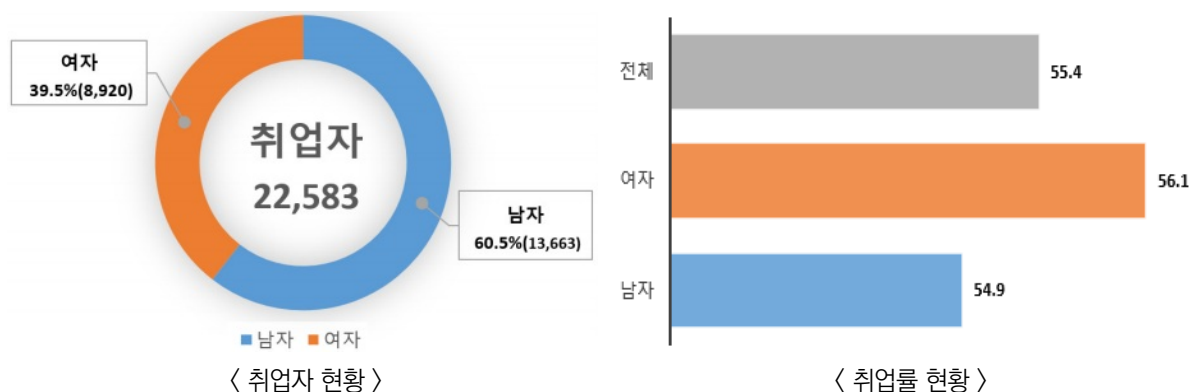
** 미취업자 :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공공데이터베이스(DB) 미등록으로 졸업 후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2) 성별 취업률

직업계고 전체 졸업자 78,994명 중 진학자는 35,529명으로 전년 대비 2,686명(7.0%p ↓) 감소하였으나, 전체 졸업자가 11,004명 감소하여 진학률은 2.5%p 증가

- 학제별 진학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진학 66.8%(23,751명), 대학 진학 33.2%(11,778명)로, 전문대학 진학자 비중이 더 높음
- 성별 진학자 비중은 남성 54.0%(19,186명), 여성 46.0%(16,343명)로 구성되고 성별 진학률은 남성 41.3%, 여성 50.2%로 전년 대비 남성은 1.3%p, 여성은 4.2%p 각각 증가

〈그림 3〉 성별 취업률 현황



3) 학교 유형별 취업률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특성화고 53.4%(전년 대비 4.2%p ↑), 마이스터고 75.0%(전년 대비 3.8%p ↑), 일반고 직업반 35.9%(전년 대비 4.3%p ↑)로 나타남

- 일반고 직업반 취업률이 전년 대비 4.3%p ↑로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지만, 마이스터고

와 일반고 직업반 취업률이 여전히 39.1%p의 큰 차이를 보이며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가장 높음

- 학교유형별 진학률은 특성화고 47.4%(전년 대비 3.1%p ↑), 마이스터고 6.6%(전년 대비 1.4%p ↑), 일반고 직업반 58.5%(전년 대비 2.1%p ↑)로 나타남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교유형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마이스터고가 진학률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 학교유형별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

(단위: 개교,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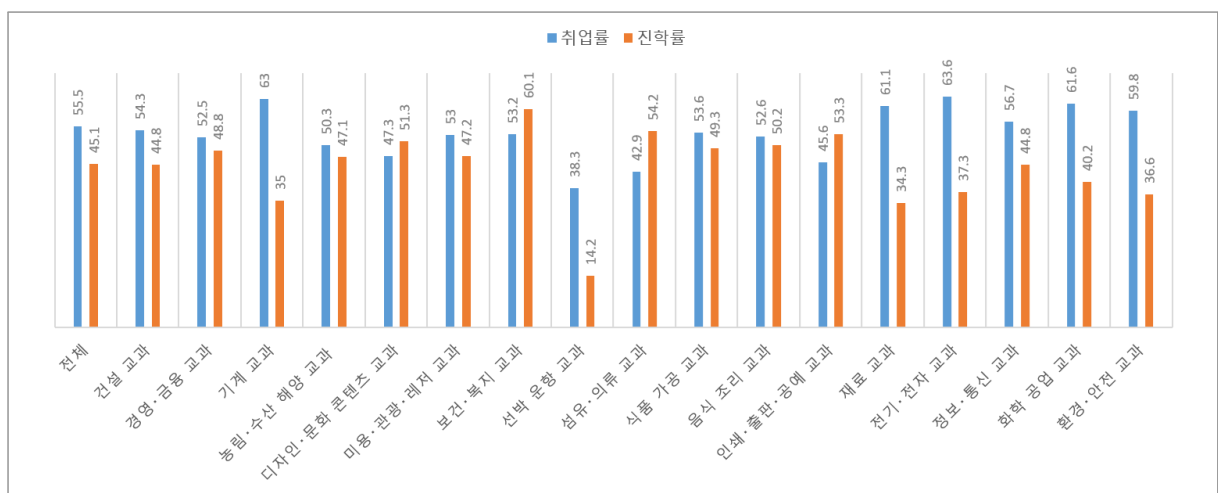
구분 (2018기준)	학교수	졸업자	취업자 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특성화고	467	69,663	18,444	53.4	33,047	47.4	1,295	785	16,092
마이스터고	46	5,735	3,629	75.0	377	6.6	492	27	1,210
일반고직업반	68	3,596	510	35.9	2,105	58.5	22	50	909
전체	581	78,994	22,583	55.4	35,529	45.0	1,809	862	18,211

주 : 2018학년도 입학생 없는 5개교 포함(특성화고 4개교, 일반고직업반 1개교)

4) 교과군 별 취업 현황

교과(군)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교과 취업률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 교과 63.0%, 화학공업 교과 61.6%, 재료 교과 6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교과(군)별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표 4〉 교과(군)별 전체 졸업 후 상황

(단위: 명, %)

구분	이수자	취업자 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건설 교과	19,643	5,429	54.3	8,798	44.8	637	203	4,576
경영·금융 교과	37,816	9,833	52.5	18,440	48.8	240	409	8,894
기계 교과	18,390	6,761	63.0	6,428	35.0	1,098	138	3,965
농림·수산 해양 교과	5,819	1,443	50.3	2,740	47.1	61	152	1,423
디자인·문화 콘텐츠 교과	20,855	4,677	47.3	10,696	51.3	62	211	5,209
미용·관광·레저 교과	10,905	2,928	53.0	5,150	47.2	90	137	2,600
보건·복지 교과	4,976	1,019	53.2	2,990	60.1	25	45	897
선박 운항 교과	688	205	38.3	98	14.2	47	8	330
섬유·의류 교과	814	152	42.9	441	54.2	1	18	202
식품 가공 교과	8,129	2,092	53.6	4,008	49.3	77	138	1,814
음식 조리 교과	8,734	2,173	52.6	4,385	50.2	77	138	1,961
인쇄·출판·공예 교과	2,002	413	45.6	1,068	53.3	4	24	493
재료 교과	7,799	2,800	61.1	2,673	34.3	489	55	1,782
전기·전자 교과	18,695	6,771	63.6	6,974	37.3	935	138	3,877
정보·통신 교과	23,862	6,978	56.7	10,698	44.8	627	229	5,330
화학 공업 교과	2,242	786	61.6	901	40.2	32	33	490
환경·안전 교과	2,045	717	59.8	748	36.6	85	14	481
전 체	193,414	55,177	55.5	87,236	45.1	4,587	2,090	44,324

주 : 1. 학생 소속학과의 교과분류 기준으로 함

2. 이수자가 소속된 한 개의 학과에는 여러 교과분류가 존재함

Ⅲ . 인천 직업계고 현황 및 분석

1. 인천 직업계고 현황

인천 직업계고는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실업계열, 수산·해운계열의 직업계고가 있으며 총 29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11년간 학생 수는 특성화고의 경우 감소 추세에 있고, 마이스터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5〉 인천 직업계 계열별 현황

구 분	계열별	학 교
특성화고 (27교)	공 업 (14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인천소방고등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상 업 (9교)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인천재능고등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수산·해운 (1교)	한국주얼리고등학교
		인평자동차고등학교
	가사·실업 (3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마이스터고 (2교)	공업 (1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수산·해운 (1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1) 인천 직업계고 지역별 현황

인천직업계고는 특성화고 27교로 공업 14교, 상업 9교, 수산·해운 1교, 가사실업 3교이며 마이스터고는 2교로 공업1교, 수산·해운 1교가 있다.

〈그림 6〉 인천 직업계 고등학교 지역별 현황



2) 인천 직업계고 학생 비율

인천광역시 전체 고등학생 수 대비 일반고 학생과 직업계고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의 경우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다시 증가한 반면, 직업계고의 경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인천 직업계고 진로

인천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진로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률은 2017년에 들어서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진학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 졸업 이후 무직 또는 진로 미결정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2021년도는 졸업자 4,818명, 취업자 1,838명, 진학자 2,277명으로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 했다.

〈그림 7〉 인천 직업계고 진로

(단위: 명)

학년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기타
2019	5,887	1,763	2,202	1,922
2020	5,058	1,557	2,164	1,337
2021	4,818	1,838	2,277	982

자료출처: 교육통계자료(2019-202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2021)

*취업률 2021년 62.9%이며 진학률은 47.3%

4) 인천 직업계고 유지 취업률

인천 직업계고 졸업생의 유지 취업률이 71.1%로 전국 2위(1위 대전 71.2%)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5) 인천 직업계고 대학진학 현황

〈그림 8〉 인천 직업계고 대학진학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시	정시	계
4년제	561	24	585
2,3년제	1,631	62	1,692
계	2,192	86	2,277



* 대학진학 현황 2022년 2월 졸업 기준

2. 인천 직업계고 학과

1) 직업계고 계열별, 학과별 분류 현황

- 공업분야 : 기계, 건축, 토목, 전기·전자·통신, 소프트웨어, 디자인, 화공, 소방
- 상업분야 : 사무·회계, 유통·비즈니스·영상·콘텐츠, 관광, 보건, 부사관
- 수산·해운 : 수산·해운
- 가사·실업 : 식품·조리, 미용·패션
- 대중문화예술 : 대중예술

2) 인천 직업계고 학과별 특징

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인공지능로봇과와 인천재능고의 AI로봇과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머신러닝, 인공지능, 펌웨어(Firmware) 개발자 양성,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IT 신기술(AI, 5G)에 로봇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

나. 영종국제물류고

물류 중심의 영종도 특성을 반영한 국제관세과를 신설하여 관세 및 무역 사무 분야에 집중

다. 인천대중예술고

2020년 연기예술과, 드론운용과를 신설하여 신입생 모집에 성공하였으며, 실용무용과를 신설하여 공립 특성화고 최초로 대중문화예술분야 선도

라. 인천소방고

산업설비과와 자동화도제과, 폴리메카닉스과를 소방설비과와 소방기계과로 개편하여 소방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서며 국내 소방산업 분야는 지속적인 양성 성장을 하고 있고, 소방 관련 기업 및 소방 공무원 진출 기회도 열려 있어 성공적인 학과 재구조화가 기대

마. 정석항공고

항공전문특성화로 특화된 항공기정비분야의 항공정비과, 항공기계과, 항공전자과, 항공전자 제어과 등 4개 학과로 실무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기르며 졸업 후높은 취업률과 진학률을 기록

바. 인천정보과학

IT통신과를 IT융합통신과로 학과를 재구조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네트워크 기반 IT융합 통신 전문가’를 양성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유망분야의 학과 재구조화 사례로 꼽힘

3) 인천 직업계고 재구조화 우수사례

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79개교 102개 학과중 기술·신산업분야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선정되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인공지능전자과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7개의 실습실과 28종의 기자재를 구축하여 첨단산업 분야 기술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전자회로과를 인공지능전자과로 개편하였으며 해당 과는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해 학생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9〉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인공지능전자과



3. 인천시 직업계고 주요 정책

1) 시대에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교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과 NCS 기반 교육과정 및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한 현장 적응력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습실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교 혁신 지원
- NCS 기반 교육과정 및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공간 혁신
- 직업계고 인식제고 및 직업과정 위탁교육 활성화
-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2)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지원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및 마이스터고 운영 활성화와 지역사회 협력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 직업교육 거버넌스 운영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 선취업·후학습 진로 생태계 정착 지원
- 진로 연계형 직업교육 모델 구축·운영
- 우수 기능인재 육성 지원

Ⅳ. 직업계고 운영방향

직업계고 취업률이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다. 직업계고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부와 함께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과 직업계 고교생에 맞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1. 직업계고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기술이 산업 등을 접목한 첨단산업 관련 학과 개편

1) 직업계고 학과 개편 확대

비인기학과를 개편하고 지역전략 맞춤형 학과개편 늘려

- 미래 신산업 분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
-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반려동물·보건 등 서비스 관련 분야 학과 개편
-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
-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 지역별 특화·전략산업에 필요한 지속적 인재를 양성을 위한 지원

2)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재구조화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과정 재구조화

- 맞춤형 직업 진로교육
-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첨단산업 관련 학과 재구조
- 교육과정 변경과 교원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 강화 필요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탄탄한 학과로 전환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 신설

인천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와 지역적 교육 격차 해소

1)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신설

-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교육 격차 해소

- 신도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역에 맞는 직업계고 학교신설
-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맞춤형 기초인재 양성

2) 인천형 직업계고

- 항공정비(MRO)산업 인재를 육성한 항공우주마이스터고 설립
- 인천형 국제적 직업계고 모색

3.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 직업계고를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및 지원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
- 고졸자 장기근속 및 성장 지원

4. 입시전형의 개선 필요

학생의 진로 목표와 요구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정책의 재설계 필요

- 진학률은 상승으로 인한 관련학과 교육 필요
- 1%대 수준인 동일계 전형을 5~10%대로 확대
- 선취업 후학습 지원 정책

참고문헌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변화 추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가지표와의 관계, 2022.6.
- 교육부, '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세부 분석 자료, 2021.1.02.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건강한 영유아를 위한 지침서

정진영 지역당원

- 나주혁신도시의 특징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빛가람동에 현 인구 4만명 육박
- 주민의 70% 이상의 30~40대로 구성되었으며 출생률 또한 높은 지역으로 그만큼 영유아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
-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있다면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1. 부모 심리상담 테스트



심리상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심리상태를 체크해
우울증세가 있는 부모 찾기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

전문가와 연계해 우울증의 원인을 찾고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

2.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요약하여 정보를 안내하고 예방접종의 스케줄 표를 안내

〈표 1〉 13가지 예방접종 요약정보

	종류	예방질환	권장 접종 시기 및 횟수	비고
필수 예방 접종	B형 간염	B형 간염	• 0, 1, 6개월에 각 1회	
	BCG	결핵	• 생후 4주 이내 1회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2, 4, 6개월에 각 1회 • 15~18개월에 1회 • 만 4세 ~ 6세에 1회 • 만 11~12세 Tdap 추가접종 • 매 10년마다 Td 추가접종	
	폴리오	소아마비	• 2, 4, 6개월에 각 1회 • 만 4세~6세에 1회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12~15개월에 1회 • 만 4세~6세에 1회	
	수두	수두	• 12~15개월에 1회	
	일본뇌염	일본뇌염	사백신(총 4회) • 12~23개월에 2회 접종 • 2차 접종 후 12개월 후에 3차 접종 • 만6세, 만 12세 때 각 1회씩 추가접종 생백신(총 3회) • 12~23개월에 1회 접종 • 1차 접종 후 12개월 후에 2차 접종 • 만 6세에 추가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사백신(6개월부터) • 6개월~59개월 소아의 경우 매년 접종 • 접종 첫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 고 이후 매년 1회 접종 생백신(24개월부터) • 24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 • 24개월~59개월 소아의 경우 접종 • 첫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 후 매년 1회 접종	
선택 예방 접종	폐렴구균	폐렴구균성질환	•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 12~15개월에 추가접종	기존 7가 백신 접종 완료한 어린이 경우 13가 백신으로 1회 보강접종(대한 소아과학회 권장사항)
	Hib	뇌수막염	•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 12~15개월에 추가접종	
	A형간염	A형 간염	• 12~23개월에 1차 접종, 1차 접종 후 6~12개월 후에 2차 접종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장염	로타텍(5가) : 2, 4, 6개월 3회 접종 로타릭스(1가) : 2, 4개월 2회 접종	
	인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 만 11세~12세 여성에게 3회 접종	

〈표 2〉 예방접종 스케줄

	대상전 염병	예방접종 백신종류 및 방법	횟수	출생~ 1개월	1 개월	2 개월	4 개월	6 개월	12 개월	15 개월	18 개월	24 개월	36 개월	만 4세	만 6세	만 11세	만 12세	
기본 접종	결핵	BCG (피내용)	1	1회														
	B형간염	HepB (유전자재조합)	3	1차	2차			3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5			1차	2차	3차		4차(추가)				5차(추가)				
		Td/Tdap	1													6차(추가)		
	폴리오	IPV (사백신)	4			1차	2차	3차						4차(추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2						1차					2차(추가)				
	수두	Var	1						1차									
	일본뇌염	JEV (사백신)	5						1차~2차			3차		4차(추 가)		4차(추 가)		
독감	Influenza	1					매년 1회											
선택 접종	결핵	BCG (경파용)	1															
	일본뇌염	JEV (생백신)	3						1차			2차		3차(추 가)				
	b형 헬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Hib	4			1차	2차	3차	4차(추가)									
	A형간염	HepA	2						1차(기초)~2차(추가)									
	폐구균	PCV	4			1차	2차	3차	4차(기초)		13가 폐렴구균 백신 1회 보강접종*							
	로타 바이러스	로타텍	3			1차	2차	3차										
		로타릭스	2			1차	2차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3													1~3차		

3. 영유아 건강검진

주기적인 건강검진 안내 및 전체적인 스케줄로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시기에 특성에 맞는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 출생 후 4개월~71개월까지 총 10회(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 실시)

1차	일반검진 생후 4~ 6개월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2차	일반검진 생후 9~ 12개월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3차	일반검진 생후 18~ 24개월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대소변가리기)
	구강검진 생후 18~ 29개월	☞구강검진(문진, 시진, 구강보건교육)
4차	일반검진 생후 30~ 36개월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정서 및 사회성 교육)
5차	일반검진 생후 42~ 48개월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개인위생)
	구강검진 생후 42~ 53개월	☞구강검진(문진, 시진, 구강보건교육)
6차	일반검진 생후 54~ 60개월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준비)
	구강검진 생후 54 ~ 65개월	☞구강검진(문진, 시진, 구강보건교육)
7차	일반검진 생후 66~ 71개월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체질량), 청각, 시각 등 문진 및 진찰 ☞시력검사, 발달선별검사 및 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간접흡연)

○ 검진비용 : 전액 공단 부담

○ 지 참 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주민등록번호 확인용)

○ 검진기관 조회 및 문진표 출력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영유아
검진일자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건강검진알아보기

○ 검진기관 조회 : 건강in(hi.nhis.or.kr) 사이트/건강검진기관안내/영유아검진기관, 공휴
일검진기관

알아두세요!

-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아이의 보육시설 검진 제출용으로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건강in(hi.nhis.or.kr)사이트에서 문진표를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하여 검진기관을 방문 하시면 편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감염병의 종류 및 대체방법 안내

영유아들이 감염되기 쉬운 대표적인 감염병에 대한 설명과 안내

〈표 3〉 영유아 감염병 설명

병명	초기 증상	잠복기간	격리 기간
디프테리아	열, 인후염, 기침, 쉼 목소리, 두통, 편도선 비대, 회색반점	2 ~ 4 일	배양검사가 2 회 이상 음성이 나올 때까지
백일해	열은 없고 밤에 기침이 심함	7 ~ 14 일	특유의 기침이 없어질 때까지
홍역	발열, 재채기, 결막염, 발진	9 ~ 13 일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7 ~ 21 일	귀밑 부기가 다 빠질 때까지
풍진	가벼운 감기 같은 증세, 발열, 발진	10 ~ 21 일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수두	발열, 발진, 물집이 생김	10 ~ 21 일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수족구	38℃ 정도의 고열, 1~2 일간 입속, 손바닥, 발바닥에 수포가 생김	3 ~ 6 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유행성 감기	발열, 기침, 목이 아픔, 뼈마디 아픔	1 ~ 3 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농가진	얼굴이나 수족에 쌀알 크기부터 대두 크기의 발진 수포가 생김	2 ~ 5 일	염증기가 지나 환부치료, 포대를 하고 부터
유행성 결막염	눈이 붓고 흰자위가 충열, 눈곱이 많음	7 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전염성 설사	설사의 횟수가 많고 변이 물 같고 열이 나며 감기증상을 동반함	2 ~ 4 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간염(A형)	식욕부진, 두통, 열, 황당, 관절통	10 ~ 15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뇌막염	고열, 두통, 구토, 전신에 보라색 반점, 의식의 혼동	14 ~ 21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장티푸스	두통, 헛소리, 허의 백태, 혈변, 장출혈	1 ~ 3주	완치 될 때 까지
콜레라	열, 구토, 물 설사, 탈수 증상	6시간 ~ 5일	완치 될 때 까지
유행성 독감	두통, 오한, 고열, 구토, 기침이 발생	1 ~ 3 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종플루	발열, 호흡기 증상	7 ~ 10일	확진 및 타미플루 처방 후 7일
코로나19	발열, 마른기침, 피로감	-	확진 후 완치까지

5.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권리

아동에게는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UN 아동 인권 협약에 따라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권리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부모, 종교, 나라, 경제, 장애 등 어떤 것과 상관 없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2)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가. 신체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

나. 정서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언어 폭력행위

-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 정서적 위협

- 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쫓아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

- 돈을 벌어오라며 위협, 아동의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다. 성학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드라이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기삽입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라.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등

☒ 교육적 방임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등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 유형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	-------	------	----

'중복학대'란?
두 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래 의심 징후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가솔, 자살 시도
- 건강상태 불량
- 잦은 결석
- 늦은 귀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아동 학대에 의심징후는 '아이디킴' 앱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도, 사·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 초·중·고 종사자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5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학대 의심 상황
- 신고자 정보(이름, 연락처) * 익명신고 가능
- 아동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교육기관 등)
- 아동의 현재 상황(안전여부)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가능

아동학대 신고방법

국번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아동학대 모바일 앱 아이디킴을 신고

3.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육방법

〈표 4〉 영유아 지도시 보호자가 갖춰야할 태도 및 원칙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돼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해 보세요	보호자가 정해진 규칙보다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자 노력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훈육할 때 “경찰아저씨가 혼내줄 거야!” 등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면 훈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작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하세요	아이들은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이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 꾸짖을 경우 왜 지금 야단을 맞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훈육은 되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오늘은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 환경에 혼란을 느낄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하지 마세요	체벌 전 올바른 훈육을 위한 진정한 목적을 떠올려 보세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꾸짖지 마세요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제지하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타인이 보는 앞에서 꾸짖지 마세요	아이의 잘못을 타인 앞에서 꾸짖으면 아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반발 심리만 강해질 수 있어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이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상처만 남게 돼요.
과거의 잘못은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4. 아동권리 존중의 양육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주기 위해서 아동을 한명의 인격체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있는 존재이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존중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하여 이해하고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1)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 2) 아동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 3)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 4)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 5) 아동기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에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유형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

1 기본 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실천 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실천 방법

 <p>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잘 살펴주세요.</p>	 <p>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세요.</p>	 <p>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란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p>
 <p>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p>	 <p>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p>	 <p>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p>
 <p>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주세요.</p>	 <p>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p>	 <p>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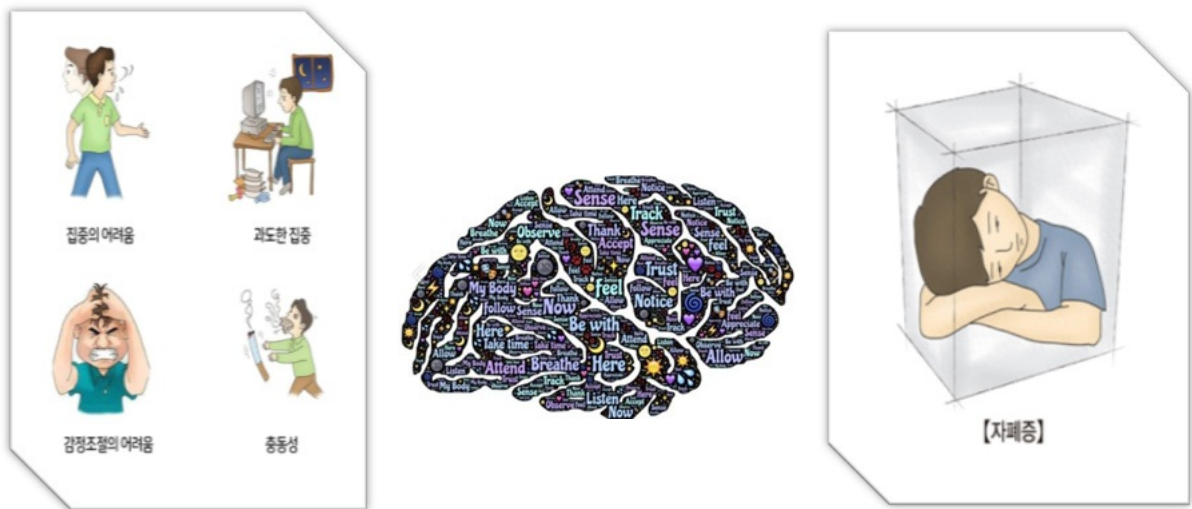








6.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스펙트럼



- ADHD와 자폐스펙트럼에 대한 설명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초기에 발견해 진단을 받고 치료의 시기를 늦추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기타(보모교육)

- 과도한 미디어 노출
- 잘못된 상호작용
- 부모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

- 정보의 제공의 방법과 시기 -

가벼운 책자를 만들어 배포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며 제공 시기는 출생신고를 할 때와 12개월, 24개월, 36개월 단위로 배포

실습생의 권익향상을 위한 고찰

김승일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1. 문제제기 및 현황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을 경험하고 있다. ‘실습’은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지로 해 보고 익히는 일(네이버 어학사전)이며 실습, 견습, 수습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직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이 해당한다. 현장실습은 현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7호에 의거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해 직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수 만 명의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을 경험한다.

그러나 현장실습은 학생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값싼 노동으로 변질’되었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기업의 저임금 착취를 위해 학생들을 노동 현장에 몰아넣는 제도이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도록 알선하고 조장하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지난해 전라북도 내 학생 6천 567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신문 기사를 보면, 농수산대학교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가서 상토혼합기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지만, 여전히 실습장 산재보험에 78%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5인 미만 실습장 146곳 중 22%인 33곳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기사 1〉

[2022 국감] 한농대 실습생 사망 사고에도 실습장 산재보험 '미가입 78%'

이희승 기자 2022.10. 04. 12:24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재학생 상토혼합기 끼임 사망 사고에도 실습장 대다수가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한농대 2학년 학생이 경기도 일산의 한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한농대는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인 미만 실습장 146곳 중 22%인 33곳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 가입 사업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임의 가입 사업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가입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장기현장실습 상해·사망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6월 사망 사고를 포함해 총 30건입니다.

위 의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을 실습장으로 선정해 운영해온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한농대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전 한농대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안전교육을 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등 안일하게 접근했다"며 "이제라도 농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곳만 실습장으로 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특성화고 노동조합이 조사한 실습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에서 5명중 1명꼴로 잡무, 허드렛일, 직원 개인심부름, 청소, 빨래 등의 부당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현장실습 '780시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장은 '인권사각지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습생의 85.1%는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우려는 실습생이 꿈꾸는 간호조무사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신문기사 2〉

“우린 병원 욕받이”…실습생부터 시작된 간호조무사의 ‘굴레’

2022.10.22 10:04:53 세종=양종곤 기자

특성화고노조, 실습생 실태조사보니
5명 중 1명꼴 부당지시…청소·빨래 맡겨
780시간 의무실습 탓…85% “견딘다”
간호조무사 합격해도…근로조건 열악



2020년 6월 27일 간호조무사 응시생들이 서울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병원에서 욕받이처럼 취급돼요”
“직원 텃세도 심하고 청소만 했어요”
“이건 실습이 아니라 무임금 노동이죠”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19일 연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실태보고서에 담긴 실습생들의 말이다. 이들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780시간’은 ‘인권사각지대’와 다를 바 없었다. 문제는 이들이 바라는 간호조무사가 되도 열악한 근로 환경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토론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실습생 5명 중 1명꼴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5월10일부터 19일간 3년 이내 실습생 경험자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8.9%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잡무, 허드렛일, 직원 개인 심부름, 청소, 빨래 등이다. 72.5%는 현장실습 의료기관에서 별도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의 불만은 ‘교육보다 노동에 가깝다’는 질문에 63.3%가, ‘무임금은 잘못이다’는 질문에 71%가 동의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부당 업무지시에 대해 대응을 묻자, 85.1%는 “참고 견뎌다”고 답했다. 병원에 문제제기 한 응답자는 없었다.

실습생이 부당한 처우를 스스로 바꾸지 못하고 감내하는 이유는 780시간 실습을 해야 간호조무사가 되기 때문이다. 실습과 740시간 이론교육을 받아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실습생 규모는 매년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더 큰 우려는 실습생이 꿈꾸는 간호조무사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20년 발표한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61.9%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아래였다.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에는 10년 이상 경력자가 48.5%나 됐다. 이들이 의료현장에서 부당 지시, 인격 무시, 격무 등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습생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처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실습생 보호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제안했다. 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저임금 보장, 산재보험 적용, 부당한 실습 계약 해지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시 대응 등 근로 안전망에 들어온다. 780시간인 실습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습생을 취직과 달리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거나 단순 노무인력처럼 여긴다면 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실습교육을 자격시험 선 조건으로 두지 않고 자격시험 합격자만 실습을 하도록 순서를 바꾸는 안도 제안됐다. 최서현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습생은 국가가 허용한 노예와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실습생은 임금을 지급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렴한 급여 및 미수령 사례만 허다하며, 사회복지 분야 일부 복지시설 교육 명목으로 실습비를 요구하는 곳들도 허다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희망하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학생들에게 졸업 전부터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한편으로 학습권을 박탈하는 범죄행위이며 불법적인 노동착취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학생 실무수습의 노동력에 대한 인식 평가가 절하되어 있습니다.

둘째, 실습생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책이 미비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미끼로 유혹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하였으며, 심지어 현장실습을 의무로 하는 법까지 제정하였습니다.

2. 해결방안

그렇다면 현장실습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첫째,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실습생도 산재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실무수습 사업체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상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에서 실습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식 개선 차원에서 첫째, 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 대한 사업체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에게 실무 수습이 권리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나 부당대우 같은 피해 발생 시 실습생의 구제방안에 대한 사후교육 및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마치면서

실습생은 근로자이지, 노동착취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취업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취업을 국가가 보장할 때 산업재해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이희승기자, 한국농어촌방송(<http://www.newskr.kr/news/>), 2022.10.4.
- 양종곤기자, 서울경제(sedaily.com), 2022.10.22.
- 황여정·김승경·전현정,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92., 2018.
- 이규학, “청소년 노동착취 직업제고 ‘현장실습’ 이제 중단되어야”, 현장과광장: 61-72., 2022.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지방도시 인구유지 및 증대정책

오동근 지역당원

1. 서론

어떤 도시든 현재 지방 지역 도시 인구 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군산은 현재 인구 26만 2,819명으로 10년 전에 비하면 28만 명에 가까운 인구에서 10년 사이에 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다른 도시로, 대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10년 대비가 아닌 점점 인구 이동 및 소멸의 시간은 빨라지고 있다. 지역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인구의 유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수강생인 나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인구의 유동을 막고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나의 고향으로 만들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금이라도 인구소멸 문제에 관심을 둔다면 알 수 있듯 현재 지방 도시의 현실은 친동생마저도 서울행을 택할 만큼 서울은 성공이라는 가짜프레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나온 지도 모르겠다. 어릴 적 생각해보면 서울로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 자랑스러웠던 문화가 우리를 서울이라는 거짓성공의 도시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서울은 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맞다. 하지만 잠시 우리 지방, 지역 도시를 위해 잠시만 비난을 해도 이해를 해주셔야 맞다.

또 현재 흔히 말하는 MZ세대는 실질적인 벌이는 적어도 더 즐겁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살기를 바란다.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돈을 모아 집을 사기보단 현재의 삶에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특성이 자칫 재미없는 지방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방 도시에 산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지원을 해주거나 지방 도시의 특혜를 주는 것도 없으므로 어차피 사는 거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이 있는 서울을 택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

2. 본론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현재 지방 도시에 살고 있고 왜 살고 있는지를 찾아보자.

먼저 단순하게 주변인들에게 물어보았다.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인지 어떻게 하다가 군산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지, 군산에 살기 시작한 이유와 지금 현재 머물게 된 이유부터 물어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이유인즉 전반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군산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を 위하여 군산에 살다 정착, 취업, 발령, 결혼 이러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사는 사람의 이유였다. 결론적으로 한 번이라도 그 지역을 겪어보고 머물러 봤던 사람이 그 지역에 머무르고 정착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산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회 초년생 두 번째는 만남부터 결혼,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통한 육아 왕국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술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유를 알아봤으니 어떤 사람들이 정착하기 전후로 지원이 필요하고 인구가 떠나는 것보다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대학교 입학을 위해 군산에 살게 된 사회 초년생이다. 이 사회 초년생들은 졸업 후 진로 및 정착할 곳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 군산에서는 한번 살아는 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1년이든 2년이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착시키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전주에서 4년 대학을 다니고 전주에서 정착하고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한다. 군산에는 대표적인 대학은 총 4개 대학이 있다. 국립군산대, 간호대, 군장대, 호원대 과연 이 졸업생들은 군산에 머무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인근 지역으로 취업을 하거나 대부분 원래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대학학위만 쥔 채 다시 군산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대체로 전공과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초년생들을 군산으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라는 것은 쉽게 집행되기도 어렵고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가져온 결과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해보고 좋은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인력을 지켜내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서 옳고 그름이 없는 정책을 제안해본다.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현재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육아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첫째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주고 둘째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그런 형식과 비슷한 지원을 하길 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은 이렇다.

군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보증금을 시에 20만원을 내고 2년 동안 등본상 군산에서 거주 및 실제 취업 및 2년 유지 시에 1000만원 정착지원금 보조 정책이다.

단 2년 확정 이후 3년 동안 나눠서 지원한다.

2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2년이면 남자들은 그 군대 2년을 평생 기억하듯 2년이란 시간은 충분히 군산에서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더 길어지면 요즘 세대들의 특성상 금방 포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다.

3년으로 분할 지급 하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길게는 5년이라는 시간을 군산에 정착할 수 있게 함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연애도 결혼도 할 수도 있는 시간이며 이미 적응해버린 이곳을 떠나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또 20만원을 받는 이유는 20만원은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작지만, 큰돈으로 이 도전이 너무 쉬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 우리 정책전문가 과정에서도 포기하고 싶은데 20만원 낸 게 아까워서라도 한다는 분을 보고 더 확신이 들었다. 물론 누구인지는 비밀이다.

그리고 이런 지원금 관련 악용사례가 있으므로 추적감시 및 제안사항을 두어야 하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군산에서 대학을 나온 게 확실한지 그리고 위장 취업을 한 건 아닌지 추적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새로운 센터 설립이나 이런 예산 추가적인 정책보다 기존에 청년을 상담하고 청년들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상담해주는 예를 들면 군산 청년들 이런 업체를 위탁하여 예산이 많이 드는 인력 및 건물을 쓰기보단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부가적인 과제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가장 큰 숙제는 군산시 자체적으로 해줘야 할 일이다.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업을 문턱이 높더라도 군산지역 학생 특별채용 취업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지원에 대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꾸준한 정보제공, 청년취업 관련 상담 및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한 체크,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하여 더 좋은 혜택을 찾아주는 정책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과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만 군산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사회 초년생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살길 원하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과제는 만남부터 결혼,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엄마들의 육아 왕국이다.

엄마들의 육아 왕국을 위해선 만남이 있어야 하고 만남 뒤엔 결혼이 있어야 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정책은 대부분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지원이 나오는 현실이다.

일본의 돗토리 현 정책 사례를 보면 돗토리 현은 인구감소로 인해 위기를 느껴 만남부터 결혼 출산까지 연계되는 정책을 펼쳐 현재 인구 증가가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의 사례가 있는 도시이다.

이처럼 첫 번째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

시설은 기존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빈 상가를 시에서 인용하여 비혼 남녀 여성을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한다. 사실 만남이라는 게 쉬우면 쉬울 수 있지만,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면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물으면 제일 중요한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되든 안 되든 우선 기회라도 줘보라는 생각이다. 100커플 중 10커플만 성공해도 정말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고 인근 지역 또한 연계해서 만남을 시 자체적으로 주선을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의 만남 후에 결혼하면 보너스 지급처럼 한 단계 한 단계별로 추가적인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혜택을 주어 동기유발을 시키자는 것이다.

결혼 후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은 잘 갖추어졌으니 불임 치료비, 불임에 대한 문제도 도우면서 출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출산 후의 육아가 제일 중요하다! 대부분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이번에 설문 조사결과 경제적인 이유가 안 돼서, 육아를 엄마 혼자 해야 해서, 아예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육아할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서라는 설문 조사결과도 있었다.

여기서 느낀 건 군산시 자체적으로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 조성**해줘야 한다.

사실 군산의 문화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엄마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일명 맘카페는 온라인에서는 활발하나 오프라인에서는 활발하지 않다.

엄마들이 같은 나이의 아이를 같은 곳에서 교육받고 놀이하고 물품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엄마들의 벼룩시장을 만들어 나 혼자 육아하는 게 아닌 공동육아의 문화형성을 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매우 중

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요즘 다자녀 혜택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소득이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으며 지원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춘다면 더욱더 적극적인 출산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만남-결혼-육아로 이루어지는 연계성 있는 정책을 생각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3. 결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착 가능성이 큰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도시는 대도시와 다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지원대상의 제한을 조금 더 낮추어 혜택을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자체적으로도 대도시와 다르게 지방 지역 도시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복한 삶의 질은 정책으로부터, 정책은 행복한 삶의 질로부터 이들은 선순환을 통한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상호관계라고 생각한다. 행복한 삶의 질을 통해 더욱더 지방 지역 도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인구 소멸이 아닌 인구 증대가 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구도심 활성화

전수관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김제시가 한때 가장 잘나가던 시절은 1960년대 이었다. 그때 당시 인구는 26만여 명으로 그때는 어느 도시보다도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김제는 인구가 8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작은 도시가 되었다. 가장 화려했던 때 지어졌던 건물들이 지금도 도심 한가운데에 그때를 기억하며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의 발길은 전처럼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곳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던 김제가 2018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제 시내인 요촌동 일원으로 구도심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에 주민들의 관심도 많았지만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을 전에 비췄던 시절의 가격으로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역량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에 참여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 교육을 수료 후 그 팀 그대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함께 고민한 끝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림 1〉 우리 동네 이야기 회의



〈그림 2〉 사업기획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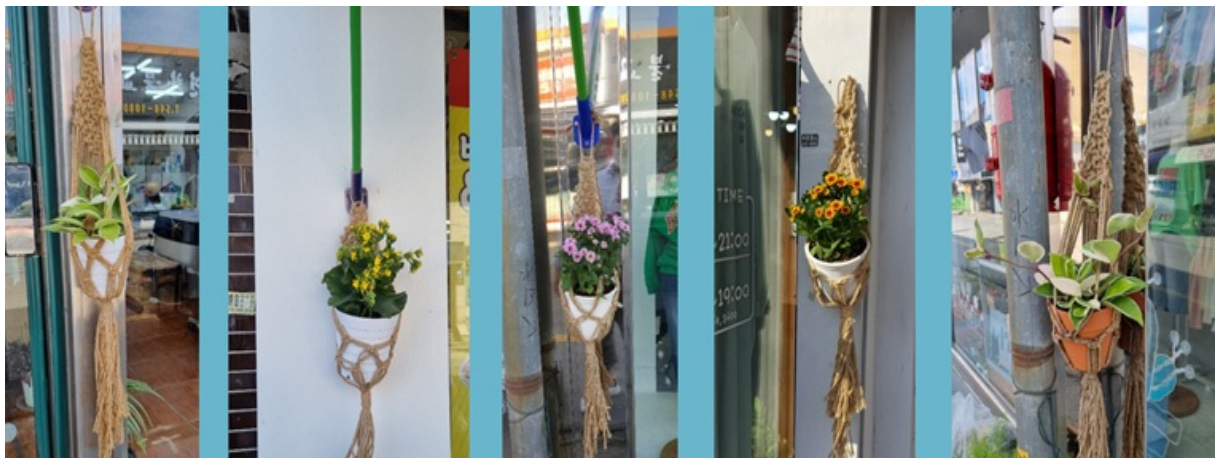


위처럼 회의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이템 회의를 거쳐 상가 태극기 걸이에 마크라메 화분 걸이, 비즈로 팔찌 만들기, 파우치 등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보다 관심이 더 필요로 하여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꺼려하시다가 한분 한분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골목이 오래된 느낌을 꽃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마크라메를 이용한 각 상가 앞에 화분 걸이를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림 3〉 골목 상인들과 함께 마크라메 화분 식재



〈그림 4〉 완성된 마크라메 화분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해서 좀 더 다른 행사를 하자고 몇 일간의 회의를 통해 골목 양옆에 통유리를 활용한 글라스 페인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 5〉 골목 양옆 사진(대부분 상가 통유리)



그 기획안을 들고 행정에 문을 두드렸지만 환영받지 못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자원봉사센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원봉사센터를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어렵게 행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을 초청하여 같이 골목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들이 맡은 곳에서 그림을 완성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6〉 동서꽃길 유리그림그리기 행사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특색사업으로 상가 유리에 그림 그리기를 주민들의 동의로 함께 기획하고, 시민들의 봉사로 함께 진행함.

처음 시도하는 골목의 변화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관심으로 동서9길 골목 홍보가 극대화 되었습니다.

〈그림 7〉 글라스 페인팅 참여자 모습



〈그림 8〉 글라스 페인팅



행사에 참석해주신 행정의 관계자분께서 할 사업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골목에 정원을 만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9〉 화분 제작



〈그림 10〉 화분 식재



〈그림 11〉 완성 화분



이렇게 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노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제지평선축제 사전홍보를 유치하자라는 의견이 나와 아는 지인분들을 활용하여 어렵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초점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기위해 적은 예산이지만 참여 상가의 물품을 사주고 그걸 랜덤 박스로 제작해 인증 샷 이벤트에 응모하는 분들에게 경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림 12〉 지평선축제 사전 홍보이벤트 밑그림 부착



〈그림 13〉 그림 그리는 참가자들





〈그림 14〉 인증샷 이벤트 및 랜덤 박스



지평선축제 사전홍보 이벤트를 하고 난 후 지평선축제제전위로부터 거리축제 제안이 들어와 지평선 축제 기간에 시내권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장소로 기획해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하루 밖에 행사를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방문객이 500여 명으로 가능성을 봐서 다들 기뻐했습니다. 지평선축제 때 나눠줄 기념품도 골목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 거리축제를 찾는 사람들에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영수증 이벤트도 병행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연합회와 MOU체결 그리고 맘카페 홍보 및 상인들의 홍보로 짧은 시간에 제법 사람이 많이 찾아 왔습니다.

〈그림 15〉 거리축제 모습 1



〈그림 16〉 거리축제 모습 2



지금도 이어져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소멸을 막아보려고 만들 도시재생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경험하고 아쉬운 점은 도시재생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는 걸 우선으로 여기는 김제시의 무책임일수도 있지만 예산을 기획할 때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 수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해주면 좀 더 많은 걸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3년여 정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만들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지금 있는 시야보다 조금 더 멀리 보는 곳에 있다 보니, 지방소멸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지방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세대차이가 그 원인 중 하나이죠,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대개 나이 드신 분들로 가장 좋았을 때를 추억

하며 그곳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잘 옮기지도 못하고 옛날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바꿀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이 유일 것입니다. 도시재생 아니 지방소멸을 방지 하려면 먼저 그곳에 사시는 분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야기는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안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건 노후화된 정주 여건개선 입니다.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에 1960년대 전기 배선, 가게 뒤편으로 집이 길쭉하게 있는 구조에 상가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니라 소멸지역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주냐고 물으니 계획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도 권한에 와보니 공모에 신청한 것만 가능하고 부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행정이 공모 선정을 위해 주민의 편이 아닌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게 커서 크게 성공사례가 없지 않나 싶다. 성공하더라도 모든 지자체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게 만들어져서 경쟁력이 없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도시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멸지역의 낙후된 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새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드린다고 성공적이지 않으니 시범적으로 한곳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개선해가면서 새로운 도시의 초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지역의 문화나 정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과 소통을 해 그분들이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을 고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역사문화가 함께하면 더 좋은데... 이 지역은 역사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문화원에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실상은 활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사문화와 지역민들의 삶에 앞으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기획이 나온다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어디에나 넘쳐나고 유행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판매를 위한 매일매일 세일한다는 광고가 피곤할 정도다. 과거, 더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의 본질을 의식하고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가 더 만족하는 풍요로움을 만든다고 한다.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몰 로컬 브랜드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몰 로컬 브랜드는 지역다움을 기본으로 지역 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브랜드로 정의할 수 있다. 규모를 의식하지 않고 적게라도 지역에서 정말 좋은 것을 만들겠다는 생산자의 가치와 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돈만 있으면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속한 지역 안에 공동체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지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소속감과 유대감 역시 가치를 더해주는 요소다.

지역은 소통의 힘으로 성장하며, 작아도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역 주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이 좋은 예의 도시는 바로 포틀랜드이다. 내가 지금 그리고 만들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포틀랜드는 김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저출생 극복

- 육아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문은섭 충남도당 정책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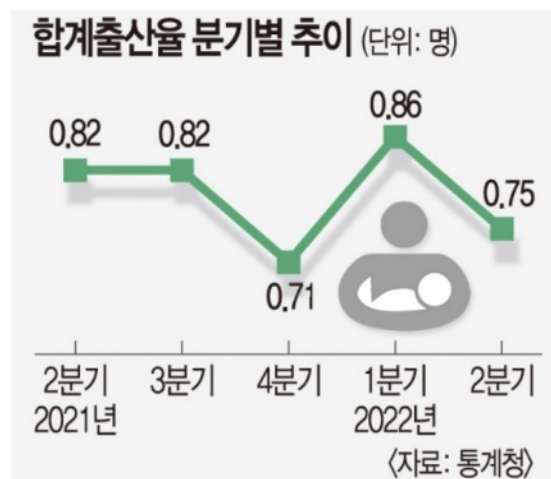
1. 개요

- 저출생, 지역의 인구감소 및 수도권 인구 밀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써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저출생과 인구감소 현황,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수도권과 지역의 환경적 차이를 비교해 보고 지역을 육아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보려 함.

2. 현 실태

가. 저출생 현황

〈그림 1〉 합계출산율 분기별 추이



- 2022년 8월 25일 국민일보 ‘2분기 합계출산율...’ 기사에서 활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대로 추락함. 1년 전 0.82명보다 0.07명 감소한 것으

로 저출생의 상황이 지속하고 있음.

-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명(2019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OECD 국가 중 처음으로 1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계속해서 그 수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저출생 상황의 장기화로 인구수 감소,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되고 있음.

나. 인구감소지역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인근을 제외하고는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
-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9개 지역, 60%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2개)	남구, 서구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19.

⇒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 그렇다면, 모두가 문제를 공감하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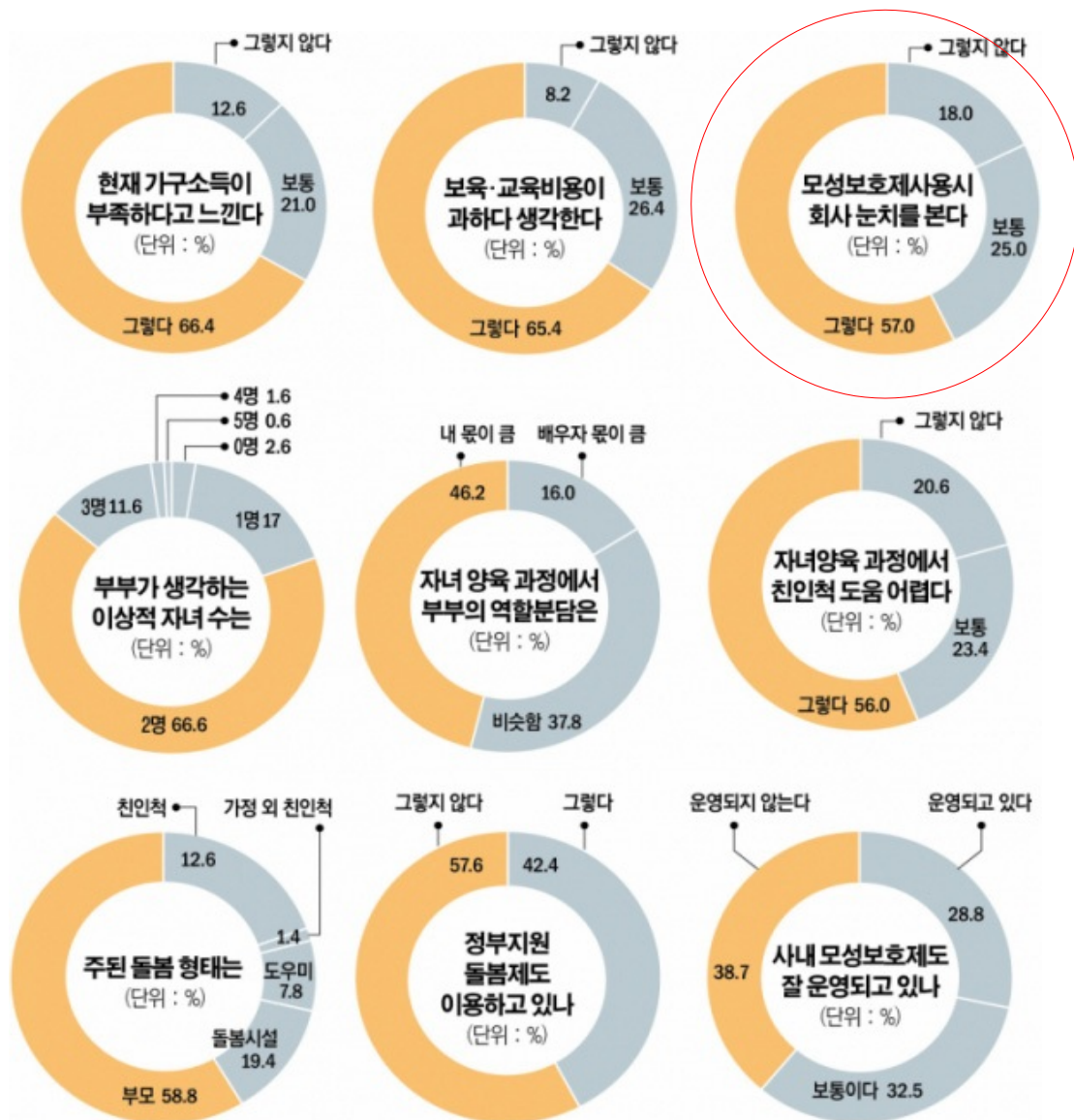
3. 현 실태 -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가. 사회적 인식의 문제

- 2022년 5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란 주제로 방영된 100분 토론에서 육아상담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한 이유 인용 : 돈을 지원해 주자, 그런다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가사와 양육의 몫을 대부분이 여성이 진다. 여전히 모든 부담을 엄마가 지어야 하는 구조이다.

⇒ 사회적 인식의 부족을 큰 이유 중 하나로 설명함.

〈그림 2〉 2040 기혼 남녀 결혼·출산 인식조사



자료 : 이투데이, 2022.

- 육아를 위한 여러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제도를 사용하는데 57%가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음.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18% 밖에 안 되는걸 감안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 장기적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나. 상대적 박탈감

- 각종 SNS와 OTT의 발달, 다양한 방송 채널 등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정보 획득이 원활한 시대임. 이런 장점이 존재하는 만큼 단점도 존재함.
- 인플루언서나 방송을 통해 나오는 화려한 모습에 자신과 비교가 쉽게 되며,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단점이 존재함.

〈그림 3〉 자녀 출산이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

자녀 출산이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괄호 안은 비율(%)		
여성 응답자 답변	순위	남성 응답자 답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23.9)	1	소득이 적어서 (45.9)
소득이 적어서(19.4)	2	자녀에게 잘해줄 수 없어서(21.1)
자녀에게 잘해줄 수 없어서(17.4)	3	한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키우기 싫어서 (12.4)
경력 단절이 우려돼서(15.2)	4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1.9)
한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키우기 싫어서 (13.0)	5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3.5)

자료 : 온라인 설문자료, 2020.8.


뉴스엔 | 2022.05.09. | 네이버뉴스

'슈돌' 결국 1%대 시청률, 생명력 다한 육아예능 [TV와치]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도 꾸준했다. 저조한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는 가운데 더이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육아 예능 ...

자료 :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언론기사, 2022.5.9.

- 상기 출산이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한 온라인 설문 자료를 보면 3번과 5번 순위는 유사한 사항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의 표출로 볼 수 있음.

- 한때 인기가 있었던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TV 프로그램도 화려한 연예인의 모습, 현실과 다른 아빠들의 육아 모습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출산의 부담으로까지 다가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함.

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 - 3040세대의 인구 유입과 유출의 주된 요인

- 육아와 자녀교육이 보다 수월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2018년 충청북도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3040세대에서 53.8%가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34.2%가 육아와 자녀 때문에 이사를 계획 중임.
- 강원도 정선의 2017년 사회조사를 보면, 이사 의향이 있는 가구 중 58.5%가 육아와 자녀 때문이라고 응답함.
- 반면, 지역에 비해 육아와 교육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하겠다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음.

IT·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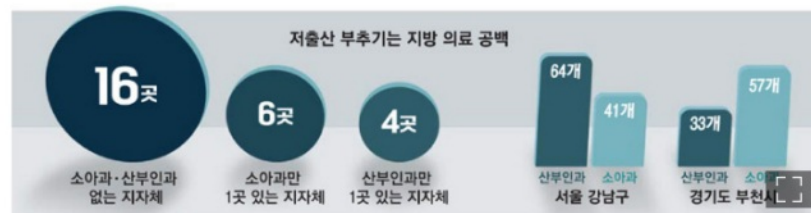
소아·산부인과 없는 지방...저출산 기름 붓는다

한재범 기자

입력 : 2022-10-06 17:50:38 수정 : 2022-10-06 23:19:33

가   

양양·평창 등 지자체 16곳
두 과목 진료병원 전무
인근도시로 `출장 출산`
대도시와 의료 불평등 심화



자료 : 지자체별 소아·산부인과 현황에 대한 언론보도 발췌, 2022.10.6.

- 지역과 대도시의 의료 불평등 심화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보도자료임.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16곳에 달하며, 소아과만 1곳 있는 지자체 6곳, 산부인과만 1곳 있는 지자체가 4곳임. 서울 강남구에만 수십 개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큼.

⇒ 지역의 보육과 교육, 의료의 공백을 해결해 줄 정책이 필요함.

4. 정책제안

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교육의 의무화

- 현재는 학교에서 성교육, 성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특별교육처럼 육아와 가정에 대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그림 4〉 임신부 체험



〈그림 5〉 기저귀 교체 체험



- 육아와 가정에 대한 교육은 성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함.
- 시대적 변화와 올바른 육아 인식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하는 것’ 등이 녹아있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교육정책의 개정이 필요함.
-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상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함.

② 국가적 캠페인과 방송과 문화적 협조

- “육아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같이! 하는 것” 이란 인식이 배경에 깔린 방송 협조 및 국가적 캠페인 실시
- 아직도 방송 등에서 보이는 남편의 육아 모습은 특별하며 불쌍하게 비치고 있음. 방송에서 남편의 육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노출 시키는 것에 대한 방송/문화적 협조와 정책 추진

⇒ 목표 : 상(喪)을 당했을 때, 관련 제도사용이 당연한 것처럼. 육아관련 다양한 제도들을 사
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나. 상대적 박탈감 해소

① 육아 지원의 거점 센터 조성 - 장난감 도서관 확대(접근성과 제도적 기능)

- 개요 : 가장 쉽게 남과 비교되는 대상이 우리 아이를 어떤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사용하여 먹
이고 입히고 재우는지, 무슨 장난감을 사용하는지 임. 그런 점에서 오래가지고 놀지도 못하
면서 개월 수, 연령별로 수시로 바뀌며 고가의 장난감과 육아용품에 대한 국가적 대안 마련
필요
-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장난감 도서관이 역할을 하고 있음. 만들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활
용 빈도 및 인기가 높음. 현재는 장난감도서관의 개수도 적으며(충남의 경우 시·군 단위로
없거나 1~2개 존재), 기능도 장난감 대여에 한정 되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
요함.
- 접근성 향상 : 행정기관 중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장난감 도
서관 조성
- 제도적 기능의 향상
 - ㉠ 렌탈서비스 : 유모차, 유축기, 카시트, 젓병소독기 등, 저가 브랜드가 아닌 대중적인 브
랜드 중심으로 렌탈 서비스 구축
 - ㉡ 세탁서비스 : 카시트와 유모차의 시트, 아기띠 등 세탁 서비스 제공 / 가격대가 높아서
2개 이상 각 가정에서 보유하기 부담이 됨. 그에 따라 아이가 토하거나 더러워지면, 육
아 필수품 임에도 대안 마련하기가 어려움. 세탁하는 동안 대체품 제공 등을 포함한 세
탁서비스 제공
 - ㉢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

② 놀거리 제공 - 숲놀이터 명소화

- 개요 : 주말과 휴일에 아이들과 ‘어디 놀러 갈지’는 부모들의 큰 고민 중 하나임. 놀이공원과
같은 곳 매번 가기가 힘들. 잘 구성되어 있는 숲놀이터는 명소처럼 활용되며,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임. 또한 놀이공원, 키즈카페 같은 곳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여 부담도 적은
것이 특징임.
- 지역은 수도권보다 숲놀이터 구성에 환경적으로 유리함. 읍, 면 단위의 자연친화적 숲놀이

터의 조성으로 지역 거주함에 따른 다양한 놀 거리 제공

- 명소화가 되면, 주말마다 방문객들이 발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가지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림 6〉 당진 삼선산 수목원 숲놀이터 모습



③ 의료 공백 해결 - 보건소의 야간 운영

- 개요 : 보건소의 소아과 운영 확충, 야간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보육시설, 학교 인근 보건소를 중심으로 소아과 및 야간(21시) 진료 실시
- 방법 : ㉠ 해당 지역 공보의 우선 배치 ㉡ 은퇴 의사의 임기제 고용 ㉢ 낮은 보수로 고용이 어려울 시, 야간 진료시 진료비 일부 청구 등을 통한 대안 마련으로 진료 인력 확보
- 저녁 시간, 장염, 고열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음. 이런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한 보건소의 소아과 야간 운영을 통한 지역의 소아 긴급 의료 불편 해소

④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마을단위 공동육아 활성화

- 서울 구로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주력하여 어린이 나라로 불리고 있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젊은 부부들이 이동을 하려고 함.
- 소규모 단위로 곳곳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력(학교 중심, 청년 귀농마을 단위 중심)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마을 공동육아 정착 정책 실시

5. 맺음 -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아이를 키움에 있어 마을의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하는 시대임.
-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건전하게 개선되고 육아환경에 대한 대도시와 지역의 격차가 줄어들어 어느 곳에 거주하던 육아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람.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영양 공급을 통한 의료비용 감소 및 노인고독사 예방 돌봄도시락 배달 “천안국”

양용순 지역당원

- (제안배경) 천안형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천안국 사업 제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 노인 일자리 양성을 위하여 어르신이 직접 제조·배달하는 천안국 사업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천안 어르신 고용(노인일자리) 도시락 제조 및 배달사업(경로당거점)
 2.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집사 양성교육(노인지회)
 3. 지역기업과 기업상생협약을 통한 사회참여 후원 협약
- (기대효과) 맞춤형 영양 공급을 통한 의료비용 감소 및 고독사 예방

I. 배경 및 필요성

-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2020.9.28.)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5.7%,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전체인구의 25%가 고령자 일 전망이라고 한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3.9%가 고령인구
- 본 정책 제안은 고령친화도시의 시범프로젝트로 급식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발굴하여 배려식 도시락 배달 및 안부 안전 확인을 병행하여 고독사 예방 필요
-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기업등과 협력. 후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천안형 상생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선순환 돌봄시스템 구축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가구는 영양 결핍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이는 곧 의료비 지출의 항목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옴.

II. 추진근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Ⅲ. 천안시 현황 및 실태

〈그림 1〉 천안시 연령별 인구 현황

인 구

2.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연 별 읍면동별	세 대 1) No. of households	등 록 인 구 Registered Population								세대당 인구 2) Persons per household	65세이상 고령자 3) Persons 65 years old and over
		총 계 Total			한 국 인 Korean			Foreigner			
		남 Male	여 Female		남 Male	여 Female	남 Male	여 Female			
2016	254,676	635,783	324,801	310,982	617,955	314,122	303,833	10,679	7,149	2.4	57,001
2017	263,434	650,402	332,719	317,683	631,531	321,435	310,096	11,284	7,587	2.4	60,562
2018	273,851	666,153	340,848	325,305	646,075	329,079	316,996	11,769	8,309	2.4	63,526
2019	281,333	672,556	344,170	328,386	652,258	332,447	319,811	11,723	8,575	2.3	67,177
2020	291,425	676,996	346,593	330,403	658,808	336,221	322,587	10,372	7,816	2.3	72,151
동 남 구	115,586	265,917	135,230	130,687	258,009	130,719	127,290	4,511	3,397	2.2	37,236
서 북 구	175,839	411,079	211,363	199,716	400,799	205,502	195,297	5,861	4,419	2.3	34,915
쌍용 1동	6,218	14,197	6,997	7,200	14,048	6,919	7,129	78	71	2.3	1,859
쌍용 2동	14,580	38,400	18,797	19,603	37,998	18,637	19,361	160	242	2.6	2,908
쌍용 3동	7,984	19,185	9,271	9,914	19,045	9,223	9,822	48	92	2.4	2,145

〈표 1〉 천안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550	5507	3638	4014	2407	3401	1627	2964	1041	2761

Ⅳ. 도시락 배달 “천안국”정책 주요 내용

- 사업명 : 도시락 배달 천안국
- 대 상 : 천안시(쌍용1동.쌍용2동.쌍용3동) 거주 홀로노인 또는 취약계층
- 사업방향
 -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형 배달급식 모델 개발
 - 어르신 영양 돌봄정책 추진으로 선순환 복지 실현
- 사업량 : 저소득층 어르신 100명

〈그림 2〉 도시락 제조·배달 프로세스



□ 주5회(점심, 저녁) 연간 261일 정도 도시락 제공

○ 사업내용

- 천안 어르신 고용(노인일자리) 도시락 제조 및 배달사업(경로당거점)
-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집사 양성교육(노인지회)
- 지역기업과 기업상생협약을 통한 사회참여 후원 협약

○ 소요예산 : 420백만원 (기간 '23년 전체)

V. 기대효과

-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으로 건강한 노후
- 어르신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협력과 나눔 방식의 취약계층 돌봄 정책 추진으로 위상 제고
- 지속가능한 천안형 어르신 케어모델 정립
- 예방적 복지를 통한 의료비용 감소

VI. 유사 사례

- 지자체 사례 -

- 통영시 - 온정쿡 사례(예산 3천만원)
- 양평군 -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예산 3억6천 - '23년 사업 추진)
- 전라남도 - 목포, 해남, 함평, 완도, 신안, 진도
(전라남도 시범사업 - '23년 추진 계획)

부록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소개

□ 목적

-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책담당자, 지역의원, 지역당원 등 만 45세 이하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정기 교육 운영
- 다양한 현안과 국가지역 공공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 전문가 양성

□ 아카데미 운영 개요

- 기 간 : 2022년 10월 20일 ~ 11월 24일(총 12강의)
- 장 소 : 온라인 화상강의(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현장워크숍(위드스페이스 P홀, 서울 5호선 서대문역 인근)
- 행사명(강좌명) :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 대주제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주 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공동

□ 신청(모집) 개요

- 모집대상 : 만 45세 이하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지역당원, 지역의원, 당직자 등)
- 모집인원 : 51명 (※각 시도당별 수강생 3명 선발·추천)
- 선발절차 : 각 시·도당별 수강생 모집 → 각 시·도당별 3명 선발·추천(남녀 각 최소 1명 이상 포함) → 수강생 직접 온라인 신청·등록
- 추천·등록기간 : 2022년 9월 5일(월) ~ 9월 30일(금) 오후 2시 (총 26일)
- 등록방법 : 아카데미 신청서 온라인 등록 (<http://url.kr/182yrv>)
- 수 강 료 : 20만원

□ 수강(강의) 개요

○ 수강 인원 : 51명 (※각 시·도당별 수강생 3명 선발·추천)

구분	계(51명)			계(51명)		계(51명)			
	지역당원	지역의원	당직자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인원	30명	18명	3명	26명	25명	2명	14명	22명	13명

○ 수강기간 : 2022.10.20.(목) ~ 11.24.(목)

- 수강생 오리엔테이션(OT) : 2022.10.6.(목) 오후 7시 (※온라인 화상진행)
- 입학식 : 10.25.(화) 19:00 ~ 19:10 (※온라인 화상진행)
- 화상수강(7강의) : 10.25.(화) ~ 11.24.(목) 19:00 ~ 20:30 (※온라인 화상진행)
- 현장 워크숍(4강의) : (1일차) 11.12.(토), 13:00~17:50 / (2일차) 11.13.(일), 13:00~17:50
-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 11.16.(수) 10:00까지
- 최종보고서 심사·평가 : 11.16.(수) ~ 11.17.(목) (#수강생 평가 방법 참조)
- 수료식 : 11.24.(목) 20:30 ~ 21:00 (※현장 및 온라인 화상진행)

○ 수강방법 : 화상수강(8강의) + 현장 워크숍(4강의)을 결합한 온·오프 방식

- 화상수강 : 1강 90분(60~70분 강의, 20~30분 질의응답), 10분 휴식
- 현장 워크숍 : 1강 120분(수강생 7분 주제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 수료기준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강생 평가 방법 참조)

○ 수료자 특전

- 아카데미 수료자 '정책전문가 인증서' 수여
- 우수 수료자 특별포상(당대표, 민주연구원장 표창)
-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 클럽' 등록(동기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 당내 교육연수 최대 12시간 인정(민주당 당원 '교육이수시스템' 등록)

□ 커리큘럼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멘토)
입학식 및 특강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입학식	10.20.(목) 19:00~19:10	• 환영사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특강1	10.20.(목) 19:10~20:30	•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책 (전대 이후 민주당이 나아갈 길 모색)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국가 현안·비전 의제 : 국가 비전과 전략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1강	10.25.(화) 19:00~20:30	•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외교안보, 정치행정사법 분야 현안과 과제 학습)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제2강	10.26.(수) 19:00~20:30	• 대전환 시대 복합위기(퍼펙트스톰) 원인과 과제 (경제·사회·과학·기후환경 분야 현안과 과제 학습)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前청와대 경제보좌관)
지역 현안·비전 의제 : 지역 비전과 전략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3강	10.27.(목) 19:00~20:30	• 지역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균형발전, 도시·산업개발 정책 현안과 과제 학습)	진종현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4강	11.01.(화) 19:00~20:30	• 지역을 바꾼 혁신 정책 사례와 지역발전 과제 (지역 우수정책 사례와 지역발전 과제 학습)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총장)
정책 실무과정 : 정책과정 이해와 사례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제5강	11.02.(수) 19:00~20:30	• 좋은 정책을 어떻게 제안·형성·추진할 것인가? (문제인식, 정책방안, 제안서 작성 등 정책과정 학습)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제6강	11.03.(목) 19:00~20:30	• 정책은 어떻게 사업과 예산이 되는가? (정부 예산편성과 지역정책예산 등 학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현장 워크숍 : 위드스페이스 P홀)	
제7-1강	11.12.(토) 13:00~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A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홍장 前충남 당진시장
제7-2강	11.12.(토) 15:20~17:2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B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수영 前서울 양천구청장
제7-3강	11.13.(일) 13:00~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C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허성무 前경남 창원시장
제7-4강	11.13.(일) 15:20~17:20	• 수강생(12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D조>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승수 前전북 전주시장
특강 및 수료식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특강2	11.24.(목) 19:00~20:20	•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과 비전	우상호 국회의원 (前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 11.16.(수) 오전 10시까지 - 수료 필수요건			
수료식	11.24.(목) 20:30~21:00	• 수료사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 축 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책전문가 인증서 및 우수 수료자 표창장 수여	온·오프 동시 진행

□ 현장 워크숍

- 개요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대주제 아래 수강생 각자 지역 비전 관련 정책연구과제 주제 발표, 지도교수 코멘트(심사평), 수강생간 피드백 과정
- 일시 : (1일차) 2022.11.12.(토) 12:30~17:50 / (2일차) 2022.11.13.(일) 12:30~17:50
- 장소 : 위드스페이스 P홀(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4층)
- 대상 :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수강생 전원(51명)
- 진행 : 박희정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이사장(前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제 및 내용	지도교수(멘토)
1일차	11.12.(토)	• 현장 등록	
INTRO	12:30 ~ 13:00	• 수강생 지역 현안 정책연구과제 훑어보기	
개회식	13:00 ~ 13:10	• 인사말, 진행안내, 강사소개, 사진촬영 등	
제7-1강	11.12.(토) 13:10 ~ 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PT 발표 <A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국가미래기여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홍장 前총남 당진시장
Break Time	15:10 ~ 15:20	• 발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코멘트 달기	
제7-2강	11.12.(토) 15:20 ~ 17:2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PT 발표 <B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국가미래기여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수영 前서울 양천구청장
ENDING	17:20 ~ 17:5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2일차	11.13.(일)	• 현장 등록	
INTRO	12:30 ~ 13:00	• 수강생 지역 현안 정책연구과제 훑어보기	
개회식	13:00 ~ 13:10	• 인사말, 진행안내, 강사소개, 사진촬영 등	
제7-3강	11.13.(일) 13:10 ~ 15:10	•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PT 발표 <C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국가미래기여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허성무 前경남 창원시장 (前경상남도 정무부지사)
Break Time	15:10 ~ 15:2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제7-4강	11.13.(일) 15:20 ~ 17:20	• 수강생(12명) 정책연구과제 PT 발표 <D조> - 지역 현안·문제, 지역 비전·정책과제, 국가미래기여 (수강생 각 7분 발표 + 지도교수 1분 코멘트)	김승수 前전북 전주시장 (前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NDING	17:20 ~ 17:50	• 정책연구과제 코멘트 서로 나누기	

□ 수강생 평가 방법

- 수료(인증) 기준 : 9강의 이상 출석,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득점(60점 미만 과락)

○ 평가 방법(100점 만점 + 가산점)

① 출석(개근) 가산점	② 수업 참여도 가산점	③ 현장 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	④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합계
(+2점)	(+2점×횟수)	(20점)	(80점)	(100점 만점 + 가산점)

① 출석 가산점 : +2 가점 부여(11강의 출석 개근)

② 수업 참여도 가산점 : +2 가점 부여(매회 강사가 우수 수강생 3인 추천)

③ 현장 워크숍 정책연구과제 발표(PT) 평가 : 20점 만점

- 평가방식 : 수강생 각자 7분 주제 발표(PT) → 지도교수 1분 코멘트(심사평)
- 평가기준

강사	번호	수강생
발표 주제	(대주제)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소주제) 수강생 가자 소주제 선정	
평가 항목	주요 내용	평가 척도
표현력	표정, 자신감, 열의, 적절한 언어 사용	수(5) 우(4) 미(3) 양(2) 가(1)
논리력	발표의 기승전결 흐름	수(5) 우(4) 미(3) 양(2) 가(1)
이해도	주제·내용 이해 정도	수(5) 우(4) 미(3) 양(2) 가(1)
설득력	논리 전개 타당성	수(5) 우(4) 미(3) 양(2) 가(1)
합계(20점 만점)		

④ 정책연구과제 최종 보고서 평가 : 80점 만점

- 평가대상 : 현장 워크숍 발표(PT) 및 최종 보고서 제출자(수료 필수요건)
- 평가기간 : 2022.11.16.(수) ~ 11.17.(목)
- 평가방식 : 내부 전문가 15인 평가(5인 단순 합산 평균)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논리정합성	20	글의 체계와 짜임새
시의성	20	시대상황, 주민요구 등 반영
창의성	20	독창적 아이디어
정체성	10	당 이념과 노선 부합성 여부
실행가능성	10	추진방식, 예산 등의 타당성

□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방법

- 대주제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 소주제 : 수강생 각자 정책연구과제 소주제 선정
- 보고서 내용
 -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지역 현안·문제
 - 내가 만들 지역의 비전
 -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과제
 - 나의 지역비전과 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할 기여
- 보고서 작성 형식
 - 서술형식 : 자유(개조식 또는 서술식)
 - 작성분량 : 12 포인트 기준, A4용지 10페이지 내외(그림, 표 등 포함)
 - 파일형식 : 한글(*.hwp) 또는 워드(*.docx)
- 현장 워크숍 보고서 발표(PT) (파일형식 : 파워포인트*.pptx)
 - (1일차) 2022.11.12.(토) 12:30 ~ 17:50 / (2일차) 2022.11.13.(토) 12:30 ~ 17:50
 - (수강생 각 7분 발표, 지도교수 1분 코멘트 + 평가)
-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 : 2022.11.16.(수) 오전 10시까지
 - 파일형식 : 한글(*.hwp) 또는 워드(*.docx)
 - 제출처 : idp.network21@gmail.com

□ 아카데미 결과

○ 수료 인원 : 총 수강 인원 51명 중 35명 수료(정책 전문가 인증서 수여)

구분	지역당원	지역의원	시도당 당직자	계
수강 인원	30명	18명	3명	51명
수료 인원	21명	11명	3명	35명
수료율	70%	61%	100%	69%

○ 우수 수료자 표창

- 우수 수료자 선발 기준 :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당대표 표창(최우수상) : 5명(노연수, 이묘배, 한현희, 임현규, 최홍린)
- 민주연구원장 표창(우수상) : 5명(김지환, 김승일, 양용순, 전유진, 전해경)
- ※ 우수 수료자에 대해 특별포상 제36차 최고위원회의(2022.11.23.) 시행 의결

제3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2022.10.20.~11.24.)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모음집

- 발간일 2022년 12월 23일
 - 발행인 이연희 상근부원장(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 편 집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고영국 박상희 박정식)
정책연구실(강병익 고승연 김석동 남국현 박동욱
박 혁 배지영 여차민 윤기찬 이경아 이용민 정상희
채은동 최환석)
 - 발행처 민주연구원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민주당사 8층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17개 시도당